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이동선·김상기·고봉준·홍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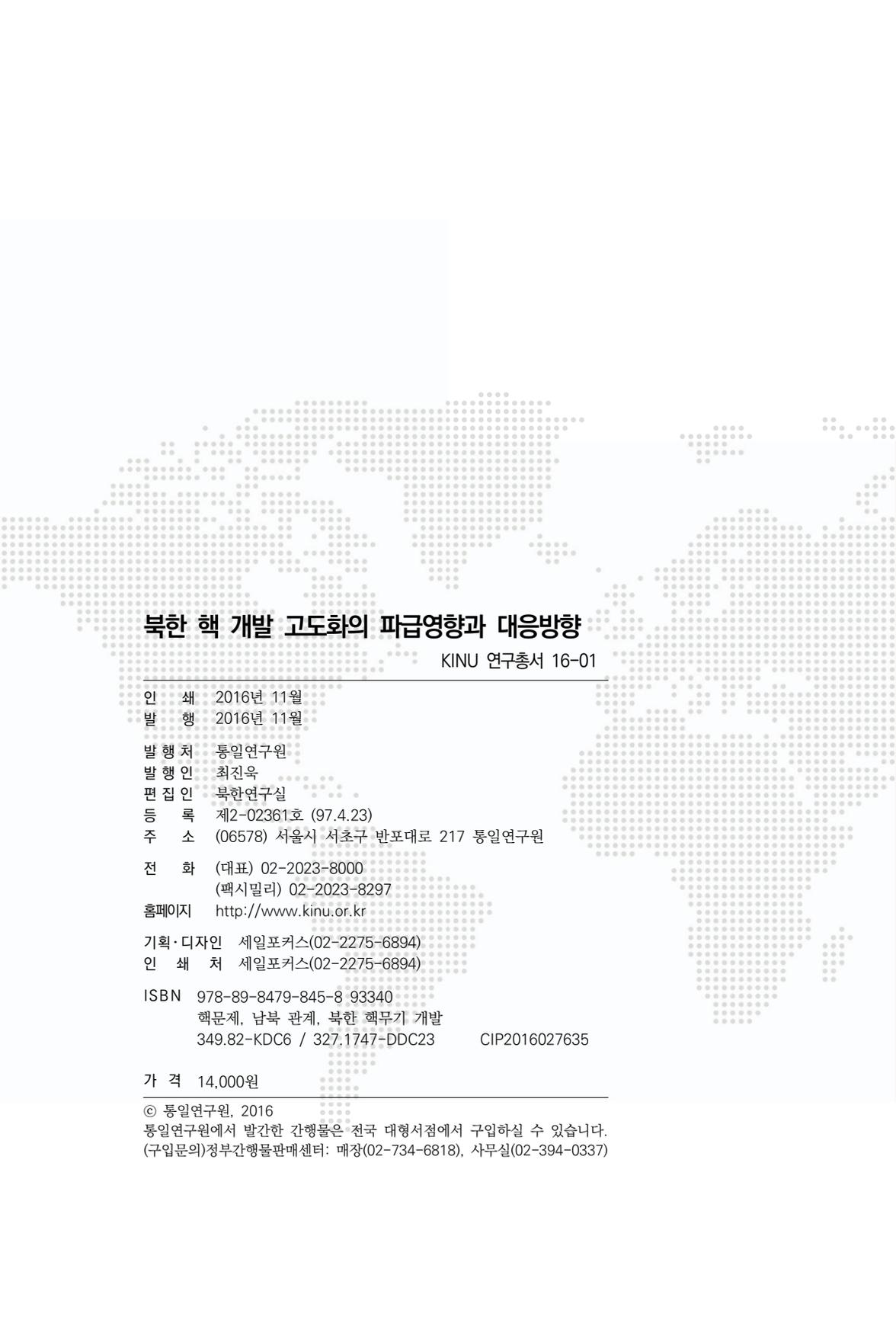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이동선·김상기·고봉준·홍 민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KINU 연구총서 16-01

---

인 쇄 2016년 11월  
발 행 2016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세일포커스(02-2275-6894)

ISBN 978-89-8479-845-8 93340  
핵문제, 남북 관계, 북한 핵무기 개발  
349.82-KDC6 / 327.1747-DDC23 CIP2016027635

가 격 14,000원

---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요약 .....	ix
<b>I. 서론 .....</b>	<b>1</b>
1. 연구 배경 .....	3
2. 연구 필요성 .....	4
3. 연구 목적과 구성 .....	6
<b>II.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정성운 .....</b>	<b>9</b>
1. 도입 .....	11
2.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 .....	12
3.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	49
<b>III.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영향   이동선 .....</b>	<b>79</b>
1. 도입 .....	81
2. 미국의 대북정책과 역량 .....	83
3. 동맹체제 .....	99
4. 주변국관계 .....	104
5. 국제비확산체제 .....	112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b>IV. 남북관계에 대한 파급영향   김상기</b> .....	<b>117</b>
1. 도입 .....	119
2. 상대적 군사력의 변화 .....	122
3.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 .....	127
4. 교섭능력의 변화 .....	137
5. 교류 및 협력의 전망 .....	146
<b>V. 한국에 대한 파급영향   고봉준</b> .....	<b>151</b>
1. 도입 .....	153
2. 정치·외교 분야 .....	154
3. 군사·안보 분야 .....	164
4. 사회·경제 분야 .....	180
<b>VI.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홍민</b> .....	<b>189</b>
1. 도입 .....	191
2. 정치·외교 분야 .....	193
3. 군사·안보 분야 .....	221
4. 사회·경제 분야 .....	237
5. 대남정책 분야 .....	246

# 목차

<b>VII. 요약 및 한국의 대응방향</b> .....	<b>251</b>
1. 요약 .....	253
2. 한국의 대응방향 .....	264
 참고문헌 .....	 281
 부    록 .....	 3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13

# 표·그림목차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표 II-1	북한의 주요 핵시설	13
표 II-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산표(공개시설 기준)	20
표 II-3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산표(은닉시설 기준)	20
표 II-4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요약	21
표 II-5	2016년·2020년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정	30
표 II-6	2016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A-Type	30
표 II-7	2016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B-Type	31
표 II-8	2020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A-Type	32
표 II-9	2020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B-Type	32
표 II-10	김정일 집권 시기 ICBM 시험 경과	37
표 II-11	김정은 집권 시기 ICBM 시험 경과	39
표 IV-1	남북한 간 군사비 지출 비교, 2002-2012	124
표 IV-2	1990년 이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현황	134
표 IV-3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사건 및 남북협상 일지	142
표 V-1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169
표 VI-1	소련의 핵독트린	198
표 VI-2	핵보유국들의 핵독트린 주요 내용	200
표 VI-3	북한의 주요 핵독트린 내용	206
표 VI-4	북한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에 대한 개념화	227
표 VI-5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와 수량	230
표 VI-6	북한 무기 생산 과정과 당·군·산복합체 형성 역사	239
표 VI-7	북한의 군수산업(군수공장) 운영체계	244



## 표·그림목차

그림 II-1 북한의 주요 탄도미사일 현황 .....	43
그림 VI-1 러시아·중국·북한의 전략군 창설 과정 .....	232
그림 VI-2 경제·핵병진 노선 아래 경제작동방식 .....	242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파급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하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과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핵전략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국제관계·남북관계·한국 및 북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연구를 집중했다. 다만 본 연구가 핵 고도화의 파급영향에 중점을 둬므로써, 각각의 파급영향에 따른 도전 요인 식별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내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진행된 연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고 후속연구에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금의 북핵 고도화에 대처하는 한국의 대응 원칙과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포괄적 제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관련 ■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핵전략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공세적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 고도화의 핵심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량의 증가와 핵탄두의 기술적 진보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의 강화이다.

우선 북한의 핵탄두 제조기술은 1세대인 핵분열탄 제조기술력과 수소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2세대 기술력의 중간 어느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4·5차 핵실험을 통해 과거에 비해 폭발력을 향상시켰으며,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표준화·규격화 능력에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신속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투발 수단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핵전력 고도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도 성공함으로써 일본과 괌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 강화와 더불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와 더불어 북한의 핵전략 또한 진화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전 핵태세를 채택하고 있다. 즉 핵역지 대상으로 기존의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전력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확전 핵태세로 인해 당분간 한국의 안보적 위험 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공세적 핵태세는 결국 미국의 확장억지력 보강과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지력 강화 노력과 결부되어 상당 기간 남북한 간 치열한 군비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 Ⅰ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관련 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국제사회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북미 간에 “과도적 합의”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다. 핵공격, 군비경쟁, 핵도미노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춘 미국에게 북한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증보복전략을 채택한 북한도 이차타격능력 확보라는 요원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핵 개발에 대한 제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상호불신도 합의를

가로막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할 수 없다. 의도치 않은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동맹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다양한 대응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 확산 위험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북한 핵무장은 미국의 지역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핵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은 미국과 동맹을 더 유용한 안보수단으로 여길 것이며, 영향력 증대를 원하는 미국도 동맹강화 요청에 적극 호응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중단기적으로 북중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국 사이에 경쟁과 대립을 조장한다. 군사대응 조치를 유발하여 안보딜레마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비현실적 상호기대와 실망의 과정을 촉발함으로써 국가 간 불신을 키운다. 그러나 세간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 도전이다. 북한은 NPT 탈퇴 및 대외확산활동 전력을 갖고 있으며,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주요 비핵산업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확산체제에 독특하고 유의미한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이 세계비확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북핵 위협의 지리적 범위는 동북아에 한정되고, 그 전시효과도 미약한 편이다. 아울러 북핵의 도전은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 보존·강화 노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Ⅰ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관련 Ⅰ

북한의 핵고도화는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의 발생 가능성, 양자 간 교섭능력(bargaining power), 그리고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핵 고도화 및 그에 따른 군사력의 증대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촉진함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력의 증대가 남북한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위기교섭 능력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선 북한의 군사력 증대가 교섭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과 이후 남북협상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군사력의 증대가 북한의 대남강압을 용이하게 하면서 위기교섭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억지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강압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북핵 고도화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및 대남 강압을 촉진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전망이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예단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로 인한 안보딜레마가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구속하는 수준은 높지 않으며,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 Ⅰ 한국에 대한 영향 관련 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이슈의 심각성을 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 미칠 정치·경제·사회적, 군사·외교·안보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지만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또는 이미 구현한, 역지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확장역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억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미래 주변국과의 군사적 격차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즉 동북아 강대국과 북한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한국 국방의 본질적 딜레마는 단순한 논의로 해답을 찾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함에 있어 군내의 자군 중심주의 성향이나, 협소한 이익 추구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 차원에서 민간으로부터의 의견 반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 현재도 기획 단계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체화하는 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학적인 국방재원 소요 전망과 배분 계획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국방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기획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 Ⅰ 북한에 대한 영향 관련 Ⅰ

핵무기 고도화가 북한체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다차원적이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의 파급영향을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핵독트린(nuclear doctrine)의 내용변화, 통치담론의 차원에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핵독트린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실질적인 기술적 성과에 따라 구체화 되고 보다 공격적인 내용을 추가해 왔다. 아울러 북한의 핵독트린은 '수령보위'라는 리더십안보 차원에서 규정돼 왔고 항구적 비상사태의 국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적·안보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가 군사전략과 대외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전략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보다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재래식 전력을 핵·미사일에 기반한 전쟁수행전략에 맞춰 재편하고 있으며, 핵·미사일에 대한 당과 지도자의 지휘·통제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가 자원배분 및 경제정책, 사회통제와 시장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북한의 당·군·산복합체는 핵·미사일 개발에 적합한 자원동원 및 배분, 연구 및 개발, 지휘·통제체계, 실험 및 실전화 등 일련의 과정이 당 군수공업부를 중심으로 전략군 및 핵·미사일 관련 특수 병종, 그리고 군수산업이 연계된 폐쇄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1970년대 태동한 '당·군·산복합체'를 통해 이미 구조화되어 왔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 보다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남정책에 핵무기 고도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공격적 핵정책을 남북관계에도

활용하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화, 도발, 평화공세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행사하는 공격성과 다면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핵무기를 ‘흡수통일’과 ‘제도통일’을 막는 중요한 수단임을 밝히고 있으며, 북한의 발전전략의 근간임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핵·미사일의 기술적 진화에 따라 공격성을 보다 강화하면서 한국발 통일론을 차단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핵능력, 핵전략, 동맹, 비확산체제, 한반도 위기, 교섭능력, 확장억지, 당·군·산 복합체

##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iv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This research mainly aims to explore a strategic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nuclear missile advancement of North Korea by evaluating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research primarily analyzes the nuclear capability and nuclear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n utilizes such analysis to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nuclear advancement by categorizing them into four dimensions: 1) international dimension; 2) dimen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3) dimens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tc.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reat posed by the North to the national securit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due to the advancement of nuclear cap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second, in spite of the North's growing nuclear capability, its advancement will only have a marginal impact on the U.S. deterrence capability,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over, Pyongyang's advancement of its nuclear program will not shake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e aggressive nuclear strategy and advancement of nuclear capability of the DPRK might violate the strategic interests of regional powers in Northeast Asia, which could escalate the inter-state conflicts. In addition to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likely to continue to be marked by tensions on the various level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roactively seek a practical way to deter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building on the objective strategic evaluation on such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Furthermore, it needs to put in place strong sanctions against Pyongyang to block the advancement of its nuclear capability and induce it to come to a denuclearization dialogue.

**Keywords:** Nuclear Capability, Nuclear Strategy, Allianc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Korean Peninsula Crisis, Negotiation-Capability, Extended Deterrence, Party-Military-Industrial Complex



# I. 서론





# 1. 연구 배경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4차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포함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종류를 집중 시험했다. 아울러 북한은 요원하게 보였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시켰다.

북한의 이러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2015년의 남북한 간 8.25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고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이 이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현재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 간 ‘강 대(對) 강’ 구도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북한은 핵 지위국 입장에서 세계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핵외교정치에서 ‘핵군축’을 주요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과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군축-평화협정’ 프레임에 적극 투사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북한의 ‘군축-평화협정’ 프레임 대(對) 한·미·일의 ‘제재-비핵화’ 프레임 대(對) 중국의 ‘평화협정-비핵화’ 동시 병행론 프레임이 대립 및 혼재되는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세는 향후 북한의 핵능력 수준과 핵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 속에서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환경에 새롭고도 심각한 도전 요인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의 안보상황 평가와 대응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 집단과 관련기관에서의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냉전시기 핵강대국 시절의 핵전략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며,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안보문제로 치부해 버렸던 편협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강대국이 아닌 중소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북미관계가 아닌 한국·북한·남북한관계·국제관계라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필요성

본 연구가 정책적·학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북한의 4차 및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체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다는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우라늄농축 기술을 활용한 핵 개발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2020년까지 최대 약 100기의 핵폭탄을 제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핵위협이 조만간 미국의 본토 안보에 상당한 안보적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핵폭탄의 파괴력 증강과 기폭장치의 발전 이외에도, 최근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등 북한이 다량 보유한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상당히 증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사용 메커니즘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와 병행하여 핵무기 사용의 지휘와 통제

체제, 그리고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근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이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조직 변화, 대남 군사전략 변화, 핵강압 정책 구사 등과 관련한 실질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연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에 따른 강대국의 대응전략과 파급효과를 분석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의 심각한 안보 도전이며, 이는 지역 강대국들의 안보전략과 대응정책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향후 대응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는, 한미동맹·미중관계·한중관계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 핵무장과 기술의 고도화 과정이 북한 체제 내부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기존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사례를 보았을 때,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체계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이데올로기, 노선 및 정책, 통치방식, 자원배분 등과 관련한 국가 행위성(agency)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체계는 군사적인 기술 차원의 문제이면서도 정치 및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화한다는 점에서 사회-기술적 체계(socio-technical system)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체계는 이미 체제 내적으로 담론,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I
II
III
IV
V
VI
VII

마지막으로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기존의 정책적·학문적 논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핵 개발 저지에 대한 방안이 담보상태에 놓여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압, 온건정책 등 주도적 해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북한 핵 개발 포기 유도정책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안 모색은 그 위협 근원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에서부터 도출될 수 있다.

### 3. 연구 목적과 구성

이상과 같은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차원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억제 대상·핵억제 태세·대량보복원칙과 선제 사용 고리(doctrine)·핵무기 지휘 및 통제 체제 등을 분석하여, 김정은 정권의 핵운용 및 활용 전략의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가 한국 및 동북아 역내 강대국의 안보전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 및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핵 고도화가 지역동맹체제와 국제적 비확산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통일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핵 고도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내밀히 분석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북핵 고도화로 인한 남북 간 군사 위기 발생 가능성과 교섭능력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만 하는 한국의 전략적 입장과 대응 정책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북핵 고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즉 북핵 고도화에 따른 국내적 파급영향을 비단 군사안보적 차원 논의를 넘어서 정치·사회·경제적 분야로 확장하여 광범위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 핵무장이 북한 체제 내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통해 기존 북핵 연구의 편협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기의 5가지 목적에 조응하여 연구의 목차를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즉 II장에서는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을 연구한다. III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핵 고도화의 영향’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북핵 고도화의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V장과 VI장에서는 각각 한국과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외교·군사안보·사회경제 분야로 대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북한의 핵 고도화 능력의 수준과 전략적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과 부문의 파급영향을 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 및 목적이 아니다. 북핵 고도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기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별개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번 연구는 ‘한국의 북핵 고도화 대응방안’이라는 거시적 연구 프로젝트의 전반에 해당되는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VII장에서 결론을 대신해 본문의 주요한 분석 내용의 요약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정책적 대응 방향을 포괄적 수준에서 제시할 것이다.



## II.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정성윤(통일연구원)





## 1. 도입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 능력이 진보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을 통해 핵융합기술력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9월의 5차 핵실험으로 그간 미진했던 핵폭발 능력도 강화되었다. 기술적으로 북한은 조만간 수소폭탄 실험도 가능하며 그간 축적한 소형화·경량화 능력으로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생산에도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핵무기 실전배치의 직전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능력의 변화는 전략의 변화를 추동한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후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했고 소위 ‘핵보유국법’을 공포하는 등 핵전략을 뒷받침할 제도적 규정과 운용 원칙을 완비했다. 또한 김정일 시대의 핵모호성 전략을 폐기하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무기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공세적인 핵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전략은 능력을 추동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고 국가 간 관계를 변화시킨다.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 고도화 추진과 호전적인 핵전략 채택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들의 전략적 이해도 침해 받고 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진전되었던 한중관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일 3국간 외교안보협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과 핵전략의 변화 그리고 그 전략적 특징을 구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핵전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핵탄두 제조에 활용되는 핵물질량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제조 가능한 핵무기 수를 추산한다.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살펴본다. 이러한 능력 변화가 실제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변화를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관련해서는 핵역지 대상·핵역지 태세·대량보복 원칙·핵무기 선제 사용 교리·핵표적 선정 교리·핵무기 지휘통제체계 등 총 6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전략 변화는 기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지역 중소국가 핵태세에 관한 이론들을 원용해 살펴볼 것이다.

## 2.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

### 가. 북한의 핵능력

#### (1) 핵물질 생산능력 및 보유량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그리고 양질의 핵물질을 충분히 보유해야만 한다. 아울러 핵물질을 생산 및 가공하여 핵탄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시설과 핵실험이 필요하다.<sup>1)</sup> 현재까지 북한이 공개하였거나 국제사회가 확인한 북한의 주요 핵시설 현황은 크게 원자로 시설·핵연료생산 시설·재처리시설·핵실험장이다. 이들 시설 현황은 <표 II-1>과 같다.<sup>2)</sup>

---

<sup>1)</sup> Jacques E.C. Hymans, *Achieving Nuclear Ambitions: Scientists, Politicians, and Prolif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50~56.

<sup>2)</sup> 국제사회는 이 외에도 북한이 우라늄 생산시설, 고풍실험시설, 핵무기 연구·제조·저장 관련 시설, 우라늄 농축연구시설,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농축관련 장비 제조시설 등을 보유 및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안진수, “북한 핵기술의 발전과 수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2016.7.5.), p. 4.

표 II-1 > 북한의 주요 핵시설

종류	시설명	위치	현황 및 특징
원자로	IRT-2000 연구로	평북 영변	운영 중
	5 MWe 흑연로	평북 영변	운영 중
	100 MWth 경수로	평북 영변	2010년 착공 후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
핵연료 생산	핵연료봉 제조시설	평북 영변	시설 재건으로 추정
	농축시설	평북 영변	운영중 (P2형 원심분리기 2,000개) : 2016년 현재 시설규모를 2배로 증설한 것으로 추정
재처리	방사화학실험실	평북 영변	운영 중
핵무기 개발	핵실험장	함북 길주군 풍계리	1~5차 핵실험 장소

2016년 현재 북한은 5MWe 흑연로를 자체적으로 설계 및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건설이 중지되었지만 50MWe, 200MWe 흑연로도 설계 및 건설한 경험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재 북한은 흑연로의 설계와 건설에 관한 능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수로기술 확보와 우라늄농축에 대한 명분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실험용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해커(Siegfried S. Hecker) 박사에게 이 원자로를 공개하였다. 그 당시 북한 측은 완공목표가 2012년 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 미가동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핵무기용 핵물질을 확보해야만 한다. 핵물질 생산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Pu) 생산과 우라늄 농축을 통한

<sup>3)</sup> 완공 지연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아마 흑연로 시설과는 달리 실험용 경수로를 자력으로 건설하기에는 아직 기술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고농축우라늄(HEU) 확보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북한은 현재 이 두 가지 핵물질을 전량 생산하고 있다. 핵물질의 생산능력과 보유량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플루토늄(PU) 생산능력 및 보유량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가동해야만 생산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는 5MWe 흑연로가 유일하다. IRT-2000 연구로도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나, 그 양이 극히 작아 의미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 5MWe 흑연로는 100% 출력으로 가동하면 연간 약 8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나, 시설이 노후 되어 현재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연간 최대 3~4kg 이내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설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험용경수로를 북한이 완공 및 가동한다면 이 시설에서도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이를 100% 출력으로 운영한다면 연간 약 15kg 내외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용 경수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무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sup>4)</sup>

현재 북한은 어느 정도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까?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 간 다소 편차가 있으나 보통 40kg 내외의 플루토늄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

<sup>4)</sup> 실험용 원자로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경우 그 품질이 낮아(Pu-239의 함량이 60%정도) 불완전 폭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핵탄두에 활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 추정에도 이 시설의 핵물질 생산량은 배제한다. 그러나 이 실험용 원자로가 고밀도의 중성자 빔을 생성할 수 있다면 삼중수소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핵융합에 필수적인 핵물질이다. 따라서 후술하겠지만 북한이 실험용원자로를 완공 및 가동한다면, 북한이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핵물질 확보가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 고도화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진수, 위의 글, pp. 1~4.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취합하면 북한은 당시 대략 최소 12kg에서 최대 38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sup>5)</sup> 이를 바탕으로 2016년 9월 현재 재고량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3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의 플루토늄 추가 생산 가능량과 4차와 5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했을 경우 그 사용량도 가늠해 봐야 한다. 물론 북한이 별도의 재처리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하지 않았더라도 영변의 재처리 시설을 2013년 이후 가동했는지 여부와 가동했을 경우 어느 정도 추출했는지도 계산해야만 한다.

북한은 2007년에 자발적으로 영변의 5MWe 원자로를 폐쇄하였으나 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 10월 재가동 징후가 탐지된 바 있다. 미국의 해커 박사는 원자로 재가동 후 재처리까지 실시할 경우 북한이 2016년까지 10~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sup>6)</sup> 따라서 북한이 재처리하지 않은 플루토늄 양까지 포함하면, 2016년 10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총량은 19~48kg까지 보유했을 것으로 추산된다.<sup>7)</sup>

<sup>5)</sup> 문장렬,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4 KINSA 세미나, 2014.2.7.), pp. 15~16; Siegfried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David Albright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 August 16, 2012.; Mary Beth Nikit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4256), April 3, 2013.

<sup>6)</sup> Siegfried S. Hecker, “North Korea reactor restart sets back denuclearization,”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7 October 2013.

<sup>7)</sup> 본 추정치는 4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 2kg을 사용했으며, 5차 핵실험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폭발 실험을 가정해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즉 2013년 중반기 기준 북한이 12~38kg을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4차 핵실험 사용분 2kg을 각각 제외하였다. 그리고 10~36kg 보유 범위를 기준으로 최소치에는 연간 3kg을 최대치에는 연간 4kg을 3년간 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2016년 10월 기준 19~48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I
II
III
IV
V
VI
VII

한편 이보다 다소 보수적인 분석으로 지난 3년간의 플루토늄 추출 추정치(10~12kg)의 중간값 11kg 정도를 과거 추정치 하한(12kg)에 더하고, 상한(38kg)은 4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소량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2kg 정도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출량을 추산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23~40kg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sup>8)</sup> 또한 2009년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한 시점에서의 보유량이 대체로 45~60kg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전제한 후<sup>9)</sup>, 여기에서 5차례의 핵실험<sup>10)</sup>에서 사용한 양(약 10~15kg)을 빼고 현재 35~45kg의 재처리된 플루토늄과 지난 3년간의 증가분(미 재처리 추정)인 약 10kg 정도를 더해 최소 45kg ~ 최대 55kg 정도의 보유량을 추정할 분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2020년경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이 2016년 상반기에 재처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6월 IAEA 사무총장도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이 지금처럼 5MWe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경우 연간 생산량은 약 3~4kg 수준이다. 따라서 2020년까지 4년간 약 12~16kg의 플루토늄을 누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현재 추정보유량인 19~48kg에 더하면 예상 보유량은 최소 31kg, 최대 64kg 정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이 5MWe 흑연로

<sup>8)</sup> 문장렬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분석 평가” (한국군사학회 발표, 2016.6.24.), p. 4.

<sup>9)</sup> 북한의 2008년 6월 핵 신고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6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량을 약 38kg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미 추출한 양은 31kg이고 사용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양은 7kg이다)

<sup>10)</sup> 1, 2차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이 확실시 되나, 3~5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인지 고농축우라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차와 5차 핵실험에서 고농축우라늄 20kg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보통 구형으로 소형 핵무기 만드는데 기술력이 높으면 15kg 정도, 기술력이 낮으면 20~25kg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편의적으로 이러한 분석의 중간 값을 차용했다.

이외에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없고 향후 추가 핵실험 등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

#### (나) 우라늄 생산능력 및 보유량

핵무기 제조에 있어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 이외에 고농축우라늄 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플루토늄의 경우보다 알려진 사실이 훨씬 적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해커 박사에게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로 구성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다. 당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둘러본 미국의 핵과학자들은 관련 시설이 기대 이상으로 현대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개된 농축 시설이외에 북한이 별도로 은닉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공개된 곳과 은닉 시설에 원심분리기가 더 있는지, 가동 상태가 정상적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플루토늄과는 달리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은 몇 가지 경우로 세분해 그 보유량 등을 추정해야만 한다. 우라늄 생산량은 원심분리기 수에 연동된다. 보통 원심분리기 2000개 정도를 가동할 경우 연간 약 40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sup>11)</sup>

우선 2016년 현재 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가 2000개일 경우이다. 즉 북한이 해커박사에게 공개한 시설과 그 능력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경수로의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본 농축시설을 2009년 4월경 건설하여, 2010년 11월경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축시설은 P2형<sup>12)</sup> 원심분리기 2,000여개를 설치했으며 시설

<sup>11)</sup> Olli Heinonen 박사는 2012년 '38 North'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1개 농축 시설에 200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경우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의 최대량은 40kg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Olli Heinone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Transition" (<http://38north.org/2012/04/oheinonen042612/>). (검색일: 2016.7.22.).

I
II
III
IV
V
VI
VII

용량은 약 8,000kg-SWU/yr라고 한다. 이 경우 북한이 지난 6년 동안 생산한 고농축우라늄의 총량은 대략 240kg 내외이다. 이 중 2013년 3차 핵실험과 2016년 5차 핵실험 시 추정 소모분 각각 20kg, 총 40kg을 제외하면 2016년 10월경 보유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총량은 약 200kg 내외일 것이다. 아울러 2020년 10월경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농축우라늄의 추정량은 약 360kg 정도일 것이다.<sup>13)</sup>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현재 4,00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인 경우이다. 북한이 2013년 영변 농축시설의 규모를 2배로 확장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는 대략 4,000개 정도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sup>14)</sup> 따라서 이 경우 2,000개의 원심분리기는 2010년 11월부터, 추가된 2,000개의 원심분리기는 2013년 4월부터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기준으로 2016년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총량은 330kg 수준이다. 그리고 2020년 10월경 북한은 약 650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공개 농축시설을 국제사회 몰래 가동 중인 경우이다. 미공개 은닉 시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몇 군데에서 어느 정도 수량의 원심분리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했는지에 따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분석에 활용할 수준의 구체적 정보는 부재하다. 따라서

<sup>12)</sup> 이 원심분리기의 원형은 독일이 개발한 G2이나, 파키스탄의 Khan박사에 의하여 널리 퍼지게 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P2형이라고 한다. 회전자의 재질이 마레이징강이며, 이 원심분리기 1개의 농축능력은 4~5kg SWU/yr 이다.

<sup>13)</sup> 물론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고농축우라늄을 소모한다면 실험에 소모된 양 만큼 보유량은 줄어든다.

<sup>14)</sup> 농축 생산량을 늘리고 농축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 설치 공간 확장 이외에 다른 작업은 필요 없다. 따라서 농축 공장 면적이 2배 늘어난 것은 기존의 원심분리기 개수가 2배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동수 외 『2013년 북한 핵 프로그램 및 능력평가』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11.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38~39.

본 연구에서는 원심분리기 보유 가능수를 역산해 미확인 시설이 생산했을 핵물질량을 추정한다. 북한은 원심분리기의 핵심 부품인 회전자 제작을 위해 꼭 필요한 Flow Forming Machine을 현재 최소 3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1개의 Flow Forming Machine이 연간 약 1,000개의 회전자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용도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북한은 연간 1,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까지 제작된 원심분리기가 시나리오 1의 공개된 원심분리기이고 그 이후 생산된 원심분리기 2,000개는 시나리오 2의 확장 시설에 추가된 원심분리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2013년 이후에는 은닉시설에서 매년 1,000개씩의 원심분리기를 증가시켜 2016년 기준 총 7,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14년 1,000개, 2015년 2,000개, 2016년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추가해가면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별도시설에서 2016년까지 생산 가능한 고농축우라늄 총량은 240kg 정도이다. 이 경우 2016년 기준 북한의 총보유량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총량에 추가하여 약 57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이 2016년 이후 더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2020년까지의 예상 보유량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추가해 약 113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표 II-2**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산표(공개시설 기준)

시설	가동기간	누적 가동 기간	원심분리기 [개]	농축능력 [kg-SWU/년]	누적 농축일량 [kg-SWU]	HEU(90%) 생산 가능량 [kg]
영변 농축 시설	2010.11.부터	6년	2,000	8,000	48,000	240
	2013. 6.부터	3.5년	2,000	8,000	28,000	140
계			4,000	16,000	76,000	380

**표 II-3**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산표(은닉시설 기준)

시설	가동기간	누적 가동 기간	원심분리기 [개]	농축능력 [kg-SWU/년]	누적 농축일량 [kg-SWU]	HEU(90%) 생산 가능량 [kg]
은닉	2014. 1.부터	1년	1,000	4,000	4,000	40
농축	2015. 1.부터	1년	2,000	8,000	8,000	80
시설	2016. 1.부터	1년	3,000	12,000	12,000	120
계			3,000		24,000	240

이상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일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북한의 3차~5차 핵실험이 모두 1개의 폭발장치만을 실험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기폭 실험은 실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하는 국가가 핵물질 보유량이 충분하다면 한 번에 다수의 폭발장치를 실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한 번에 몇 개를 실험하더라도 제재를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은 그 핵분열 특성이 달라서, 동일한 개념과 규모의 설계인 경우에도 별도의 실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1개의 장치만 실험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 (2) 핵무기 능력

### (가) 핵무기 기술력

북한의 현재 핵무기 기술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수행한 지난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기술 정도를 대략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5차례의 핵실험의 탐지결과를 요약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요약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실험일자	2006. 10. 9.	2009. 5. 25.	2013. 2. 12.	2016. 1. 6.	2016. 9. 9.
지진탐지 범위	3. ~4.3 mb	4.5~4.7 mb	4.9~5.1 mb	4.8~5.1 mb	5.0~5.3 mb
폭발규모 환산	1 kt 미만	4~5 kt	6~7 kt	6 kt	10~30 kt
사용 핵물질	플루토늄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추정)	플루토늄, 중수소 삼중수소 (중폭핵분열 폭탄 추정)	고농축 우라늄 (추정)

<표 I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1차 핵실험에서 핵폭발 실험은 성공했으나 폭발력이 너무 낮은 관계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당시 북한은 1차 핵실험 결과를 공식적으로 대외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은 2차 핵실험부터 시험 결과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대외에

<sup>15)</sup>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직전 중국에게 4kt 정도 폭발력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공포해 왔다.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폭발력과 조정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sup>16)</sup> 3차 핵실험 직후에는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진행하였다.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 위력 등 모든 측정 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중화된 우리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고 발표했다.<sup>17)</sup>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조선중앙TV의 중대 발표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sup>18)</sup> 그리고 9월의 5차 핵실험에서는 핵실험 종류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들은 북부 핵실험장에서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했다”며 이를 공식 확인했다.<sup>19)</sup>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어느 단계에 진입했을까? 핵무기 기술력의 단계는 통상 1세대 원자탄, 2세대 수소폭탄, 3세대 중성자탄으로 나눌 수 있다. 3세대 중성자탄의 경우 현재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여러 이유로 개발 및 배치를 한 국가는 없다. 따라서 현재 핵보유국들은 1세대인 원자탄과 2세대인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 개발 국가들의 최종 기술적 종착역도 수소폭탄의 보유이다. 하지만

16)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조선중앙통신』, 2009.5.25.

17) “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2.12.

18)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조선중앙통신』, 2016.1.6.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9.9.

핵분열탄인 원자탄과 핵융합탄인 수소폭탄의 중간단계로 증폭분열탄(boosted nuclear fission bomb)이 있다. 이는 1세대 원자탄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가 수소폭탄을 보유하기 위해 중간단계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증폭핵분열탄은 핵분열과 핵융합기술을 모두 활용해 만든다. 즉 1차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킨 다음 그 에너지로 핵융합을 일으킨다. 이를 위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 사이에 삼중수소와 중수소 등 핵융합 원료를 넣는다. 제일 안쪽에 있는 중성자를 중심으로 핵융합 원료와 기폭제가 차례로 둘러싼다. 기폭제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사용된다. 증폭핵분열탄은 핵융합반응으로 중성자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핵분열 유지를 위한 임계질량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효율성 때문에 증폭핵분열탄은 소용화에 적합한 무기이다. 폭발력은 보통의 원자폭탄의 10~20kt에 비해 2~5배 높은 40~100kt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핵무기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북한은 중상급 이상의 핵탄두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은 핵기술 면에서 핵분열탄과 핵융합탄(수소폭탄)의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세대 핵분열탄의 경우 북한이 2~3차 핵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능력을 과시했지만, 폭발력이 표준형 핵분열탄에 미치지 못해 그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왔다. 하지만 5차 핵실험에서 10~30kt의 폭발력을 과시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완성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통상 표준형 핵분열탄의 경우 그 폭발력은 20kt 내외이다.<sup>21)</sup>

북한이 1세대 핵분열탄 기술을 넘어 핵융합기술을 원용한 증폭핵

<sup>20)</sup> 정성윤,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02, 2016.1.11.), p. 3.

<sup>21)</sup> 정성윤, “북한 5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23, 2016.9.13.), pp. 1~3.

분열탄 제조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비록 만족할만한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4차 핵실험 직후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핵실험 다음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들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다”고 적시하며 “증폭핵분열탄은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북한의 ‘미니 수소탄 핵실험’ 주장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sup>22)</sup> 일본 정부도 지진과 규모와 형상, 대기 중 방사성 물질 상황 등을 볼 때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sup>23)</sup> 한국의 국방부도 ‘기껏해야 증폭핵분열탄’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sup>24)</sup>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sup>25)</sup>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의

22) “美의회보고서 “北, 증폭핵분열탄 또는 단순 핵폭탄 실험한듯”, 『연합뉴스』, 2016.1.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0/0200000000AKR20160120017300071.HTML?input=1195m>>. (검색일: 2016.5.22).

23) “日 정부, 1월 북핵실험 수폭 전단계 ‘증폭핵분열탄’ 판단”, 『연합뉴스』, 2016.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9/0200000000AKR20160209053200073.HTML?input=1195m>>. (검색일: 2016.6.1.).

2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월 3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핵실험 직후 의미 있는 원소 포집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은 기껏해야 증폭핵분열탄 실험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북 4차핵실험 수소탄 아니다…기껏해야 증폭핵분열탄”, 『연합뉴스』, 2016.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3/0200000000AKR20160503079900001.HTML?input=1195m>>. (검색일: 2016.5.21.).

25) 한국의 국방부 이상철 군비통제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2주전, 북한이 이미 증폭핵분열탄을 개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상철 단장은 2015년 12월 21일에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국방부 군비통제단장 “북한, 증폭핵분열탄 개발 가능성”, 『연합뉴스』, 2015.12.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1/0200000000AKR201512211787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6.7.). 아울러 한국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1월 21일 개최된 한 학술회의에서 4차 핵실험은 1.5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증폭분열탄”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북한 4차 핵실험의 진실과 오해’... 무엇이

또 다른 근거는 북한이 최근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필수적인 삼중수소를 5MWe 원자로를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자로를 일부 개조해 리튬6를 핵연료봉에 채워놓고 가동하면 부산물로서 핵융합에 사용되는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즉 이번 4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여기서 확보한 삼중수소를 중수소(deuterium)와 혼합한 가스를 활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2세대 수소폭탄 제조 능력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직후 자신들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4차 핵실험의 지진파 규모로 볼 때 3차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약간 작아진 것으로 보아, 만일 정말로 수소탄을 실험했다면 실험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소탄 실험은 반드시 1차 핵분열과 2차 핵융합이 연쇄적으로 발생해야 한다.<sup>26)</sup> 기술적으로 1차 핵분열만 성공하고 2차인 핵융합이 실패할 경우 수소폭탄의 외부 케이스로 인해 폭발력 감쇄효과(decoupling)가 나타나 지진파 규모가 4차 실험처럼 의외로 낮게 나올 수 있다. 만약 핵융합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전체 폭발력은 기폭제인 원자폭탄 폭발력의 5~50배에 달해야 한다. 그런데 4차 핵실험의 폭발규모는 측정 기술상의 한계와 여러 간섭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5 kt를 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따라서 핵융합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문제?,” 『KONAS』, 2016.1.21. <<https://konas.net/article/article.asp?idx=44596>> (검색일: 2016.5.25).

<sup>26)</sup> 수소탄의 기폭제로 3차 실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규모의 원폭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sup>27)</sup> 보통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하면 fire ball 크기로 폭발력을 측정한다. 하지만 지하핵 실험은 지진파 측정을 통해 핵실험 규모를 판단한다. 통상의 측정 방법은 핵실험으로 지하에 공동이 생기면 여러 위치에서 tamper 수십 개를 꺼낸 뒤에 거기에서 추출된 플루토늄과 핵분열생산물의 분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생산물과 플루토늄의 비율이 1:4이면, 1kg 분열 시 폭발력은 19.5 kt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하의 공동 상태와 압력 등 지질적 특성에 따라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한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은 과장되었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28)</sup>

북한이 1세대를 넘어 그 이상의 기술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되는 4차 핵실험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즉 4차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sup>29)</sup>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북한 스스로도 (시험용)수소탄 시험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원자탄 실험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4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낮다는 것이다. 즉 증폭핵무기는 폭발규모가 증폭하지 않을 경우의 2~5배에 달해야 하나, 4차 핵실험의 지진파 규모는 3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후 포집된 핵물질 성분에서도 이를 확정지을 만한 결과가 없었다.

또 다른 주장의 근거는 증폭핵분열탄 실험 자체가 핵무기 발전단계에서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이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sup>30)</sup> 통상 증폭핵분열탄 실험에는 플루토늄 혹은

---

동일한 실험이라도 그 측정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3차 핵실험을 분석하면 폭발력의 범위는 4~16kt이다. 안진수 “북한 핵기술의 발전과 수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발표문, 2016.7.5., p. 5.

28) 제임스 클레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2월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증언서에서 “폭발력 등으로 볼 때 수소폭탄이 아닌 단순 핵 실험 또는 증폭핵분열탄 정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北수주-수개월내 플루토늄 추출시작 가능, 이동식ICBM 배치단계,” 『연합뉴스』, 2016.2.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9/0200000000AKR20160209064151071.HTML>>. (검색일: 2016.5.21.).

29) 참고로 1kt은 TNT폭약 1000t, 1Mt은 TNT폭약 100만t 위력이다.

30) 증폭핵무기는 미소 간의 초기 핵무기 개발단계에서 고농축우라늄 생산단가가 비싸서 그것을 아끼면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간에 만든 것으로, 당시 국가들은 대용량 원자로가 많아서 삼중수소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 북한의 경우 삼중수소 보유 및 그 양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고농축우라늄과 삼중수소 1~2g, 수소 혼합물, 리튬6를 투입해 폭발력을 높이는 실험이다. 따라서 원자탄 생산능력이 있고 획득하기 어려운 삼중수소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제조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핵실험이 “단순한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 내부의 정치적 지지나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 과시를 노리고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 또 북한 과학자들이 최고지도부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말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31)</sup>

북한의 증폭핵분열탄 시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1세대 핵기술 능력을 2~3차 그리고 5차 핵실험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의 다음 방향은 수소폭탄 제조능력 확보일 것이다. 물론 북한은 증폭핵분열탄을 수소폭탄이라고 억지를 부릴 가능성 있고, 증폭핵분열탄 제조능력 확보가 궁극적 목적일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향후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가능 여부는 결국 북한이 채택하는 핵전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핵물질의 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증폭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와 리튬6가 반드시 필요하다. 삼중수소의 경우 생산 및 확보 그리고 관리가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운영 중인 5MWe 흑연 감속로와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통해 삼중수소를 획득 및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32)</sup> 특히 북한이 2010년 11월 이후 연간 40kg 정도의 고농축

31) 『연합뉴스』, 위의 글, 2016.1.20.

32)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6년 3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체 제작한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해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삼중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IRT-2000은 원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가동했으나 90년대 중반 러시아가 핵연료 공급을 중단하자 연료를 저농축에서 고농축우라늄으로 바꾸어 가동하고 있다. 즉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산량의 20% 정도를 IRT-2000가동의 연료로 투입해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으로 짧기 때문에 장기간 확보해 두었다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 직후 빨리 사용해야만 한다. 지난 4차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 실험이었다면, 그 핵실험에 사용된 삼중수소는 이 일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잔여량은 반감기가 소멸되는 시점에 다시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삼중수소와 더불어 리튬6의 확보도 중요하다. 북한의 리튬6 생산량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2005년 한 광물연감에 언급되어 있던 것으로 볼 때 북한 내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 (나) 핵무기 보유 가능량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북한 스스로가 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정확한 과학적 추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 제조할 수 있는 핵무기의 수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제조에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지를 추산한 후 이를 핵물질 보유량과 대비해 계산해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또한 상당히 불완전하다. 핵무기 제조 기술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은 양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아울러 군사적 목적에 따라 폭발력이 서로 다른 핵무기를

---

<http://isis-online.org/search/google?cx=001381580300407989689%3Aboguwei5u3k&ie=UTF-8&q=IRT+2000>. (검색일: 2016.5.12.).

<sup>33)</sup> 2005년의 한 광물 연감에서 북한의 비철 금속 광산들에 대한 해외 투자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John C. Wu, "The Mineral Industry of North Korea," *2005 Mineral Yearbook*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US Geological Survey, June 2007). 문장렬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분석 평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발표문, 2016.7.8., p. 7.에서 재인용.

제조하려 한다면 핵물질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정에 일정정도 부정확성과 불확실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1개의 제조에 대략 플루토늄 3~6kg,<sup>36)</sup> 우라늄 10~40kg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무기 제조 과정에서의 핵물질 손실률을 차등 감안한다.<sup>37)</sup> 이러한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추산할 수 있다.

우선 <표 II-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은 최소 19kg~최대 48kg 범위일 것이다. 또한 고농축우라늄의 양은 전술했던 시나리오 1의 200kg 내외 보유의 경우, 시나리오 2의 330kg수준 내외 보유 경우, 그리고 시나리오 3의 570kg 정도일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sup>34)</sup> 이러한 제한조건을 감안해 Paul I. Bernstein은 2016년경 북한이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Paul I. Bernstein, "The Emerging Nuclear Landscape" Ja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chner, eds.,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19~120.

<sup>35)</sup> 특히 핵물질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핵물질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에는 다소 편차가 있다. 국내 핵전문가들의 경우 북한의 기술력이 중급 이상일 것이므로 약 10% 내외의 손실률을 주장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통상 30%정도의 손실률을 주장한다.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추정치가 더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sup>36)</sup> 보통 핵무기의 위력에 따라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 사용량이 달라지지만 20kt 위력의 표준형 핵무기의 경우 초기 개발국은 약 6kg, 중급수준의 핵기술국은 약 4~5kg, 선진기술 보유국은 약 3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0년 전에 이미 중급정도의 핵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유력한 분석이 있다.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61, no. 33, pp. 64~67. 함형필, 『NUCLEAR DILEMMA: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년), p. 187에서 재인용. 따라서 2016년 현재 북한의 기술력은 최소 중급수준 이상이며 3kg 정도의 플루토늄으로 표준형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sup>37)</sup> 핵무기 보유량 추산에 대한 수식 가정은 국방대학교 문장수 박사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문장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분석 평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발표문, 2016.7.8., p. 5.

I
II
III
IV
V
VI
VII

**표 II-5** 2016년·2020년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정

구분	2016년 10월		2020년 10월	
	PU 보유량	HEU보유량	PU 보유량	HEU보유량
A 시나리오	19~48kg	200	31~64kg	360
B 시나리오		330		650
C 시나리오		570		1130

이러한 구분에 따른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추산하면 아래 <표 II-6>과 같다.

**표 II-6** 2016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A-Type

구분	플루토늄탄 개수	우라늄탄 개수	총계
		핵물질 사용량 10 ~ 40kg 차등 적용	
A 시나리오	3 ~ 16	5 ~ 20	8 ~ 36
B 시나리오	3 ~ 16	8 ~ 33	11 ~ 49
C 시나리오	3 ~ 16	14 ~ 57	17 ~ 73

북한이 중급 혹은 중상급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면 손실률은 20%~30% 수준일 것이다. 이는 핵탄두 제조에 더 많은 핵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보수적으로 플루토늄탄의 경우 탄두 중량을 6kg, 플루토늄 보유량을 최소치인 19kg으로 계산하는 경우, 북한은 대략 최소 3개 정도의 플루토늄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이 상급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률은 10% 정도일 것이며 선진국들처럼 3kg의 플루토늄으로 핵탄두 1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물질 보유량을 최대치인 48kg으로 했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최대치는 16개까지 가능하다. 우라늄탄의 경우

기술력이 높아 손실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형 핵무기를 제조할 경우 고농축우라늄 10kg으로도 핵탄두 1기를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손실률이 높고 폭발력이 강한 우라늄탄을 만들거자 한다면 40kg정도로 핵탄두 1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정해 각각의 시나리오 당 우라늄탄 탄두 제조 가능 수는 위 <표 II-6>과 같다.

반면 북한이 5차 핵실험에서 강조했듯이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 우라늄탄의 대량 생산에 나선다면 고농축우라늄 20kg을 일괄 활용해 핵탄두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화된 우라늄탄 1기 제조에 고농축우라늄 20kg 정도 필요하다는 통설을 적용한다면 <표 II-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시나리오의 경우 우라늄탄 10기, B시나리오의 경우 우라늄탄 16~17기, C 시나리오의 경우 28~29기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를 보유량 총합으로 환산하면 A 시나리오의 경우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합계 총 13~26개, B 시나리오의 총계는 19~33개, C 시나리오의 경우 31~45개이다.

**표 II-7** 2016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B-Type

구분	플루토늄탄 개수	우라늄탄 개수	총계
		핵물질 사용량 20kg 균등 적용	
A 시나리오	3 ~ 16	10	13 ~ 26
B 시나리오	3 ~ 16	16 ~ 17	19 ~ 33
C 시나리오	3 ~ 16	28 ~ 29	31 ~ 45

2020년 경 북한이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무기 숫자는 얼마일까?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경 북한의 예상 플루토늄 보유량은 31~64kg으로 가정한다. 물론 향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을 소모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지금과 같은 추세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핵무기 제조 기술의 일부 진전은 있을 수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손실률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10~30%로 전제한다. 2020년경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총 보유량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A 시나리오 경우 360kg, B 시나리오 경우 650kg, C 시나리오의 경우는 1130kg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2020년 경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 총량은 아래 <표 II-8>과 <표 II-9>와 같다.

**표 II-8** 2020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A-Type

구분	플루토늄탄 개수	우라늄탄 개수	총계
		핵물질 사용량 10~40kg 차등 적용	
A 시나리오	5 ~ 21	9 ~ 36	14 ~ 57
B 시나리오	5 ~ 21	16 ~ 65	21 ~ 86
C 시나리오	5 ~ 21	28 ~ 113	33 ~ 134

**표 II-9** 2020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량 추정 B-Type

구분	플루토늄탄 개수	우라늄탄 개수	총계
		핵물질 사용량 20kg 균등 적용	
A 시나리오	5 ~ 21	18	23 ~ 39
B 시나리오	5 ~ 21	32 ~ 33	37 ~ 54
C 시나리오	5 ~ 21	56 ~ 57	61 ~ 78

이상의 분석에서 유의하여 해석해야만 하는 몇 가지 전제들이 있다. 첫째, 플루토늄 3kg과 고농축우라늄 10kg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 보유가 반드시 요구된다. 2016년 현재 북한의 소형화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들이 있지만

소형화 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증할 만한 정보는 부족하다. 따라서 2016년 현 수준에서 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을 핵무기 숫자 총량을 ‘소형 핵무기’만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 즉 <표 II-6>과 <표 II-7>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현재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무기 숫자는 최소-최대 범위 내에서도 다소 보수적 차원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표 II-8>과 <표 II-9>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4년 뒤 북한의 소형화 기술의 진척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경우, 2020년 북한의 핵무기 생산 가능량의 경우 다소 적극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물질 전량을 핵무기화 했다’고 가정해 핵무기 보유 가능량을 추산했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분석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북한의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핵무기 보유량의 대부분은 고농축우라늄의 축적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확보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 연구소는 2016년 3월의 보고서에서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북한이 자체 제작한 연료봉 2개가 녹아내려 대대적인 수리를 했다”며 “이는 원자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볼 때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북한이 수백kg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면 20kg 정도가 아니라 40kg정도를 사용해 5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것이고, 이 경우 폭발력이 100kt 내외가 나올 것이므로 증폭핵분열탄의 성공 혹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과장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 지칭했던 시험용 수소탄의 진일보된 성능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38)</sup>

<sup>38)</sup> 우라늄 1kg은 핵분열 시 19.3 kt, 플루토늄은 19.5kt의 폭발력을 낸다. 화약은 완전

I
II
III
IV
V
VI
VII

셋째, 농축우라늄을 가공하여 핵무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손실률은 일반적으로 20%로 전제했다. 이는 일면 비과학적이고 편의적인 계산 방법이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추산할 때 30%의 손실률을 감안한다.<sup>39)</sup>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10% 내외의 손실률을 가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핵무기 공정과정에서 손실률을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 핵무기 보유량 추산값은 크게 달라진다. 아울러 북한이 만약 IRT-2000을 가동해 삼중수소를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연료로 소모되는 고농축우라늄 양을 다시 제외해야만 한다. 연간 7.5kg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지난 6년간 총 45kg 정도를 소모했을 것이고 2020년이면 총 누적 75kg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계산은 제외하였다. 만약 이를 고려한다면 2016년 핵무기 보유 가능량은 앞선 연구결과보다 2~4개 줄어들 것이며, 2020년 추정치에서는 3~6개 정도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추정한 핵탄두는 핵분열탄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향후 파괴력이 우수하고 소형화가 훨씬 용이한 증폭핵분열탄 중심의 대량생산을 지향한다면 핵탄두 수는 추정치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전술했다시피 증폭핵분열탄 제조에 필수적인 삼중수소를 대량 확보하기는 북한의 현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가급적 북한은 증폭핵분열탄 수를 늘여 이를 수소폭탄 보유량이라 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나, 실제 북한이 향후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의 대부분은 우라늄탄일

---

히 타버리지만 핵은 일부만 핵분열하고 나머지는 휘날려져 소실된다. 예를 들면 20kg 핵분열 시 10kt의 폭발력을 보인다고 하면, 30kg 핵분열 시 15kt의 폭발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40kg을 폭발시키면 통상 100kt내외의 폭발력을 보일 수 있다. 폭발량이 많을수록 핵분열 효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sup>39)</sup> “北위성사진 보니 핵 재처리 시설서 연기…美 연구기관 ISIS “일부러 숨기지 않을 수도,” 『동아일보』, 2016.6.15., <<http://news.donga.com/3/all/20160615/78672661/2>> (검색일: 2016.6.24.).

가능성이 높다. 은닉 시설 등에서 원심분리기 수를 늘여 고농축우라늄을 대량 확보하는 것이 플루토늄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플루토늄은 기본적으로 중성자에 반응하는 핵 특성이 좋아 고농축우라늄보다 적은 양으로도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핵탄두 소형화에는 플루토늄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북한이 가능한 대량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증폭핵분열탄의 경우에도 우라늄보다 플루토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노후한 흑연감속 원자로 설비로 인해 증산이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숫자에 집착한다면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한 우라늄탄 생산에 당분간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 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 (1) 미사일 능력 현황

북한의 미사일능력 증강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60년대 초 소련으로부터 프로그(FROG) 미사일 등을 도입하였고, 1971년 중국과 “북·중 탄도미사일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7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제 스커드B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소련은 중·소 분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운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1981년 북한은 이집트와 미사일 개발 협정을 맺고 스커드B미사일 2발과 수직 발사대를 도입했다.<sup>40)</sup> 북한은 당시 스커드 미사일을 분해한 후

<sup>40)</sup> 북한은 1976년 중국과 동평-61(DF-61)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국이 동평-61 개발을 포기하면서 북한의 계획도 무산됐다. 북한은 믿었던 중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역설계를 통해 모방생산과 자체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80년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일대 진전이 있었다. 우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의 개량형인 사거리 500km 스커드-C도 실전 배치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집권 시기 동안 북한은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 보유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북한은 1998년에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1998년 8월에는 사거리 2,5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sup>41)</sup> 북한은 사거리가 3,500km에 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무수단(BM-25)도 시험발사 없이 2007년에 실전배치했다. 특히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개발은 우주 발사체(로켓) 및 인공위성 개발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미 1998년 대포동 미사일 시험부터 북한은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발사한 것이라 공표해 왔다.<sup>42)</sup> 김정일 시기 북한은 3차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비행거리가 연장되고 발사체 중량이

---

기술 도입이 어렵게 되자 1979년 독자개발로 방향을 바꿨다. 김민석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과 대응책은?,” 『월간중앙』, 2016년 10월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3264>> (검색일: 2016.9.26.)

41)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는 Joseph S. Bermudez, Jr.,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 I. B. Tauris, 2001), pp. 237~247.; 『201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4)등을 참고 바람.

42) 자체적인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ICBM 능력을 개발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피하려는 속셈이 명백하다. 그러나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탑재체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2009년(1874호)부터 단순히 탄도미사일의 발사만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증가하였으며 엔진의 3단 분리가 성공하는 등의 부분적 진전은 있었다. <표 II-10>은 김정일 시기의 ICBM 시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10** 김정일 집권 시기 ICBM 시험 경과

구분	시기	사거리	비행거리	탑재중량	위성궤도 진입
대포동 1호 (광명성 1호)	1998.8	2,500km	1,620km	최대 700kg	실패
대포동 2호	2006.3	10,000km	490km	최대 1,000kg	실패(초기 폭발)
대포동 2호 (광명성 2호)	2009.4	10,000km	3,600km	최대 1,000kg	실패(3단분리 성공)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강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새롭게 SLBM 능력도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 시기 미미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은하 3호 발사실험을 강행했으나 1단 추진체 이상으로 발사 초기에 폭발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당시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8개월 후 똑같은 재원의 실험을 통해 궤도진입에 성공시켰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시험에 성공한 것은 북한이 실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능력이 이미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sup>43)</sup> 북한은 대포동 1호부터

<sup>43)</sup> 북한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2년 동안 작동하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전송하는 한편 지상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자세 제어가 되지 않아 정상 작동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성 3호는 약 95분 주기로 지구의 극궤도를 남북으로 돌며 2~3일에 한 번꼴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한다. 많은 우주 전문가들은 광명성 3호 2호기의 경제·과학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은하 3-1호의 발사까지 약 15년간 4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에서 10번째로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을 자력으로 성공시킨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은하 3호보다 더 개량된 형태의 은하 4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두 차례의 궤도진입 성공이라는 성과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아래 <표 II-10>과 <표 II-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처럼 발사체의 탑재중량은 김정일 시기의 1/5 이상 줄여 경량화에 성공했으며, 발사중량은 추진체 능력 개선으로 김정일 시기보다 50%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작은 핵탄두를 탑재해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인공위성의 중량을 보면 고도의 정찰이나 과학관측의 임무를 수행하기는 아직 부족하며 우주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중점은 ICBM 능력의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4)</sup> 하지만 일각에서 작전배치된 것으로 평가하는 ICBM도 시험발사에 아직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과 제어뿐만 아니라 재진입에 관련된 현재의 기술 수준 역시 평가하기 어렵다.

---

보고 있다. “우주개발? 미사일 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들,” 『한겨레』, 2016.2.1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086.html>>. (검색일: 2016.8.22.).

<sup>44)</sup> 최근 발간된 일본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1t 이하 핵탄두를 1만km 이상 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백서에서는 “2016년 2월 북한이 실시한 ICBM 발사 실험과 6월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분석한 결과, 탄두 중량이 1t 미만이면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숙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北 1t 이하 핵탄두를 1만km 이상 쏠 기술 확보” 『조선일보』, 2016.8.3. A5면

표 II-11 김정은 집권 시기 ICBM 시험 경과

구분	시기	사거리	비행거리	탑재중량	위성궤도 진입
은하 3-1호 (광명성 3호)	2012.4	10,000km 이상	500km	100kg(추정)	실패(초기 폭발)
은하 3-2호 (광명성 3호)	2012.12	10,000km 이상	궤도집입	100kg(추정)	성공
은하 4호 (광명성 4호)	2016.2	12,000km 이상	궤도집입	200kg(추정)	성공

북한의 은하 발사체 이외에도 북한의 ICBM 능력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아직 한 번도 발사 실험을 하지 않은 KN-08이다. KN-08은 2012년에 처음 공개되었고 2013년 하순과 2014년 초경 이미 엔진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5)</sup>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5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KN-08의 모습과 최근 KN-08 6기를 배경으로 김정은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KN-08의 외형에 변화가 있다. 기존 3단 로켓이 2단으로 줄어들면서 길이도 예전에 비해 짧아졌으며, 탄두의 형태가 둥근 돔(Dome)형태로 바뀌었다. 이는 북한이 KN-08의 사거리보다는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을 기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46)</sup> 하지만 북한의 ICBM 능력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어 검증된 무기로 인정하긴 어렵다. 특히 ICBM의 탄두가 마하 20 이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공기와 마찰로 발생하는 8000도의 온도와 공기 압력에 버틸 수 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 김정은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서둘러

<sup>45)</sup>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북한 분석 웹사이트 '38노스'(38-North)는 북한이 2013년 8월과 2014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 사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KN-08'의 엔진 연소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http://38north.org/2014/05/sohae050114/>> (검색일: 2016.9.3.).

<sup>46)</sup> 3단 로켓의 경우 2단 로켓에 비해 사거리가 길다. 즉 다른 조건이 같을 때 3단 로켓이 미국의 동부를 겨냥했다면 2단 로켓은 미국의 중서부 정도를 겨냥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내에서 실험한 ICBM 탄두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려면 5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47)</sup>

북한은 최근 들어 중거리 미사일 능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이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은 두 달 여 짧은 기간 동안 총 6발의 발사 실험을 했다. 이중 다섯 발은 실패했고 2016년 6월 실험 발사는 일정정도 부분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48)</sup> 특히 성공했다는 6번째 시험은 고각으로 발사하여 최대 사거리를 간접적으로 시험했으며, 유도 비행과 탄두 재진입 관련 기술의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전 발사 실험의 실패 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sup>49)</sup> 무수단 미사일은 ICBM과 더불어 전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생존성을 위하여 대부분 이동식 발사대(TEL: Trailer-Erector-Launcher)에 장착된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TEL은 총 2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sup>50)</sup>

---

47) 김민석, 위의 글. 『월간중앙』, 2016년 10월호.

48) 우리 군 당국은 무수단 미사일이 2007년경에 전력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북한이 이란에도 수출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다.

49) 북한은 당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계속적으로 실패하자 미사일 하단부에 비행을 안정시키는 그리드 핀이라는 작은 날개를 부착해 발사에 성공했다. 미사일 형태를 긴급 수정한 것이다. 김민석, 위의 글. 『월간중앙』, 2016년 10월호.

50)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KN-08 또한 이동식 발사대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일보』, 2016.8.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8512&code=11121400&sid1=pol>>. (검색일: 2016.8.30.).

북한이 2016년 들어 집중적으로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미사일인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ER이다. 북한은 2016년 3월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하반기 접어들어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8발의 노동미사일 및 스커드 ER 미사일을 발사했다. 스커드 ER은 사정거리 700km 내외이고 노동 미사일은 최대사거리가 1천300km에 달한다. 즉 한국 전역이 직접적인 사정권에 포함된다. 북한은 잇따른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목표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차반경이 줄어드는 등 정확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9월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3발은 모두 1천km를 비행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내 해상에 떨어졌는데 3발의 낙하지점이 1km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발 모두가 반경 1km 내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할 때 발생하는 오차반경인 '원형공산오차'(CEP)가 최소 2km, 최대 3~4km라는 분석치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다. 원인은 동체에 유도장치를 부착해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거나 인구밀집지역의 시설물을 공격하는 능력이 보강됐다는 것을 뜻한다.<sup>51)</sup>

북한은 상기 언급한 지대지탄도미사일 이외에 2015년부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해에서 '사출시험'이 실시된 KN-11(북한 명칭 "북극성")은 무수단 미사일과 같이 구소련의 SLBM R-27(SS-N-6)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5년 1월 23일, 수직발사관 사출시험을 실시한 데 이어 2015년 5월 8일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이나 별도의 수중시설에서 미사일 사출시험을

<sup>51)</sup> "北 노동미사일 정확도 높아졌다...1천km 비행·오차 1km 이내," 『연합뉴스』, 2016.9. 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1492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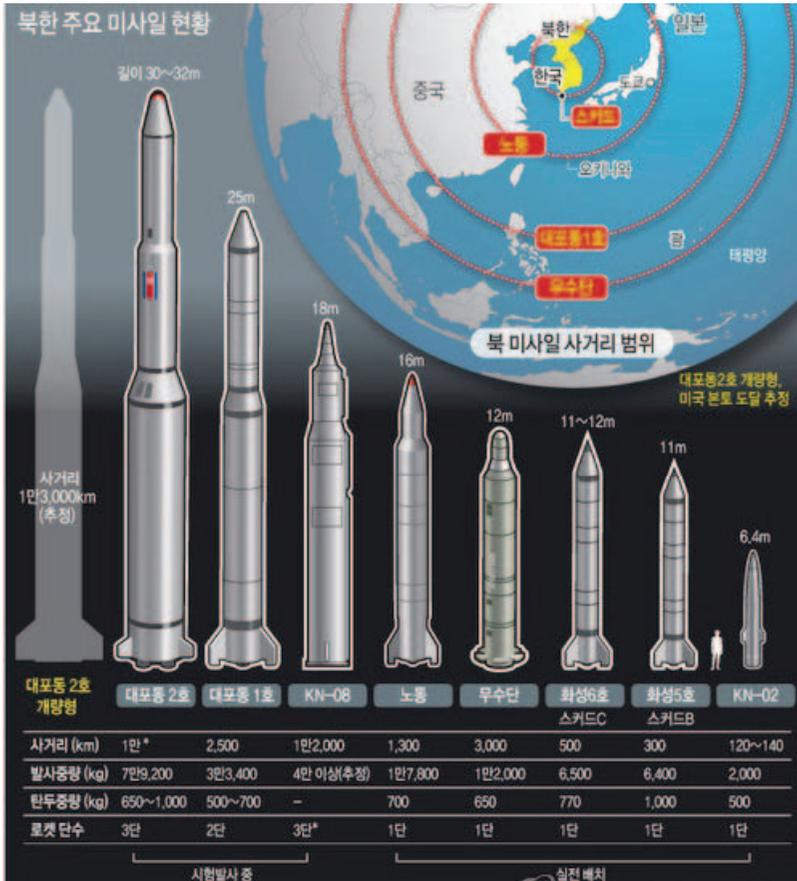
I
II
III
IV
V
VI
VII

실시해 성공했다. 2015년 11월 28일 북한은 처음으로 신포급(2천t급)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은 실패 직후인 2015년 12월 25일 사출시험을 재시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제시되었고 북한은 처음으로 사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2016년 4월 23일에 시행된 후속 시험에서, 미사일은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후 약 30km 정도를 비행했다. SLBM의 최소 사거리 약 300km에는 못 미치지 못해 일각에서 실패로 판정하나, 북한이 이미 탄착 지점 인근에 대기해 미사일 수거작업을 준비했다는 점으로 볼 때 사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특히 미사일이 일단 정상적으로 사출되고 점화되어 일정 거리를 비행했다면, “랭발사 체계”(콜드 론칭, cold launching)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미사일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한 점 등도 이전 시험과 달라진 측면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016년 7월 9일 SLBM 시험을 다시 시도했다. 북한이 쏜 SLBM이 10여km 상공에서 폭발함으로써 이 실험은 완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실패 45일 만인 2016년 8월 24일 6차 SLBM 시험을 성공적으로 강행했다. 고각발사로 인해 정상고도인 300~400km 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으며 1·2단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발사였다면 사거리가 1,000km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아울러 고체연료를 충분히 채울 경우 비행거리는 약 2,5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군 당국은 이번 SLBM이 하강 단계에서 50km 고도 상공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sup>52)</sup> <그림 II-1>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림 II-1 >> 북한의 주요 탄도미사일 현황<sup>53)</sup>



52) “北 SLBM 3500km 비행 가능…美 괌기지도 사정권,” 『조선일보』, 2016.8.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207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2078.html)>. (검색일: 2016.8.27.).

53) “〈그래픽〉 북한 주요 미사일 현황,” 『연합뉴스』, 2016.7.8.,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708143914258>>. (검색일: 2016.8.3.).

I  
II  
III  
IV  
V  
VI  
VII

## (2) 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추진 연료와 엔진의 고도화이다. 스커드급 이상의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지금까지 액체 연료를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시험 중임을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액체 연료는 추진 제어에는 유리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하기 수 시간 전에 주입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술적 측면에서나 관리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반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고 안전하며 지상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군사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강화하고 있는 SLBM 능력을 단기간 고도화하기 위해 고체연료 실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6년 4월과 8월의 SLBM 시험 발사 시 고체연료를 장착했다. 고체연료 장착 후 4월 시험에서는 30km의 비행을 기록했고, 8월 시험에서는 고각으로 발사하고도 500km를 비행했다. 액체연료는 수중 사출 과정에서 흔들리며 연료분사가 불규칙해지는 ‘슬로싱’ 현상이 발생해 비행 불안정이 초래되는데, 고체연료를 개발 및 장착해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여부도 능력 측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2016년 상반기에 군사적 기밀사항이라 볼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 북한은 둥근 돔 형태의 재진입체를 지상에서 로켓 화염으로 실험했다. 돔 형태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대기의 저항을 받으며 속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탄두 부분의 온도도 급격히 떨어진다. 보통 재진입시 속도가 1/2 줄면 저항온도는 1/8 줄어든다. 실제로 북한이 2016년 6월 22일 무수단 발사 실험 직후 공개한 영상을 보면 2015년 열병식 당시 공개했던 무수단의 탄두와 모양이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최근 KN-O8 과 무수단의 탄두 모형을 모두 바꾼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돔 모형으로 탄두 모형을 바꿈으로써 재진입 속도가 줄어들면 미사일방어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몇 년 전부터 탄두의 기동형 재진입(MARV)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4)</sup> 이 기술은 전용 정찰 위성의 도움으로 탄두의 유도 비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데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며 인공위성 발사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바로 정찰인공위성 개발과 배치를 통해 MARV 기술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단거리 및 중장거리 이동식 발사대(TEL: 북한명 자행발사대) 보유량이다. 미 국방부는 ‘2015년 북한 군사동향 의회보고서’에서 북한은 2015년 기준 TEL을 약 200기 내외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로 스커드 B,D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용 TEL 100기, 스커드 ER, 노동,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 전용 TEL 100기, 그리고 ICBM용 TEL 6기 정도와 SLBM용 수중 TEL 1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sup>55)</sup> 특히 TEL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위성 등을 통해 조기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Kill

<sup>54)</sup> 군사분석기관인 IHS제인스는 2012년에 “북한과 시리아가 시리아의 스커드미사일 D, 지대지미사일, 기동형 재진입 핵탄두(MARV) 개량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기관은 “북한의 조선단군무역회사 기술자들이 시리아 소재 과학연구조사센터(SSRC)의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99’라는 이름 하에 스커드D 미사일 개량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북한과 기동식 핵탄두 개량화 진행중,” 『데일리 NK』, 2012.6.28.,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0900&num=95891>> (검색일: 2016.7.12.)

<sup>55)</sup> “北, IRBM용 TEL 100기 이상 보유… 동시다발 核타격 목표,” 『문화일보』, 2016.6.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2401070530114001>>. (검색일: 2016.7.13.).

I
II
III
IV
V
VI
VII

Chain)의 효용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56)</sup>

그렇다면 향후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탄미사일의 양을 단기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2016년 현재 스커드미사일 200~800기, 노동미사일 90~200기, 무수단미사일 50기 미만, ICBM 6기 이상 등 대략 300~9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sup>57)</sup> 북한이 대북제재의 여파로 인해 당분간 획기적으로 탄도미사일 수를 늘리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본격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기술능력 향상에 힘쓸 것이다. 우선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 사용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즉 기존 미사일의 고체연료 엔진 교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새로 개발되는 ICBM과 SLBM에도 높은 추력의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큰 영향 없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비교적 덜 어렵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2020년경이면 상당히 진척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 능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 미사일 성능이 확보된 스커드 ER, 노동미사일부터 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의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은 핵탄두 지름이 1m 내외이다. 하지만 북한이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는 증폭핵분열탄은 70~80cm 정도이다. 북한이 지난 봄 표준화된 핵탄두라고 선보인 핵탄두는 직경이 60~80cm 정도일 것이라 추정된다. 북한이 이번 9월 5차 핵실험에서 밝힌 바와

---

<sup>56)</sup> 한국이 2020년대 중반에 구축 완료하고자 하는 킬체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정찰자산을 통해 사전에 탐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sup>57)</sup> 문장렬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분석 평가” 한국군사학회 발표논문(2016.6.24.), p. 18.

같이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가 바로 증폭핵분열탄에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 규모이다. 이러한 단일화된 80cm 내외의 핵탄두를 대량 생산한다면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탄도탄미사일에 이를 장착할 수 있다.<sup>58)</sup>

셋째,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꾸준히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두 번의 성공을 거둔 위성의 궤도 진입에서 더 나아가 인공 위성의 정상적인 회수 시험을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인공위성 회수를 위해서는 발사는 물론이고 궤도상 위성에 대한 통신과 제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구 대기권 재진입과 안전한 지상 낙하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공은 핵폭탄의 기폭 기술이 구현된 상태에서 사실상 완전한 ICBM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를 받게 한다. 북한이 2020년까지 그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는 의문시되지만 적어도 그 모든 기술을 시험하기 위하여 발사를 계속하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넷째, SLBM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그것을 장착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SLBM 개발을 여타 탄도미사일 개발에 비해 가장 최근에 착수했지만 기술적 진보 수준은 상당히 가파르다. SLBM 역시 탄도미사일이므로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발사 조건만 충족시키면 단시일 내에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실시된 시험의 성공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북한은 2020년까지 적어도 수중발사 기술은 확실히 습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SLBM을 작전배치하기 위한 잠수함의 개발도 병행할 것이다.<sup>59)</sup> 북한이

<sup>58)</sup>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의 경우 직경 80~90cm 수준이면 장착 가능하며, 노동미사일의 경우는 1.1~1.3m, 무수단과 SLBM(북극성)은 1.2~1.5m이면 장착가능하다. 이상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발전과 수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2016. 7.5.) 내용

<sup>59)</sup> 미국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I
II
III
IV
V
VI
VII

수 년 내에 명실상부한 3천톤 이상의 전략 급 핵추진 잠수함을 새롭게 개발·건조·배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건설해야만 하는데, 잠수함용 원자로 제조에 있어 소형화·고출력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런 고난이도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0)</sup> 따라서 2020년까지 SLBM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된다면 일단은 2천톤 급인 신포 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SLBM을 장착한 후, 핵연료와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핵추진 엔진의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이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SLBM의 원형은 구소련이 개발한 R-27이다. 하지만 R-27은 액체연료엔진을 사용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올해 북한이 공개한 SLBM 실험 사진을 보면 고체

---

연구원은 2016년 8월 24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주최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의 SLBM 발사 빈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북한은 최소 연간 5기 또는 그 이상의 SLBM 생산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4년 12월을 시작으로 2015년 5회, 2016년 4회의 SLBM 발사 실험을 했다. 그는 "북한은 24일 SLBM을 발사한 신포 급(2000t)보다 큰 잠수함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이면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현재 운용 중인 로미오 급(1800t) 잠수함 건조에 18개월~2년 6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해 2배의 시간을 잡더라도 약 4년 뒤(2020년)면 SLBM과 운반수단인 잠수함까지 모두 갖게 된다는 것이다. 『北, SLBM 年5기 생산력 보유, 『동아일보』, 2016.8.26., <<http://news.donga.com/3/all/20160826/79979120/1>>. (검색일: 2016.9.2).

<sup>60)</sup> 북한은 현재 핵추진잠수함의 동력원인 리액터(reactor)를 적어도 2m 이하로 소형화 하는데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있다. 북한이 리액터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한다면 이를 가동할 수 있는 핵연료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잠수함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자연상태의 우라늄 U-235를 20%~90% 수준에서 농축해 사용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이러한 농축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다량의 원심분리기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건조되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농축도 90% 이상의 핵연료를 사용해 30여년동안 연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북 핵잠수함 보유 추진... 넘어야 할 핵심 기술은," 『세계일보』, 2016.8.25.,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5/20160825002722.html>>. (검색일: 2016.8.29).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SLBM 실험 당시 단분리(stage separation)기술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원래 R-27은 단일 로켓(1단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R-27K라는 변형모델은 과거 구소련이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ASBM용으로 개발했지만 실제 전력화는 하지 않았던 모델이다. R-27K는 사거리가 R-27의 1/3 수준보다 짧은 약 900km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거리가 짧아진 반면 2단으로 제조할 경우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잠수함 발사용 ASBM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 항공모함 전단의 진입을 거부하거나 유사시 주일미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3.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 가. 핵역지와 지역 중소국가 핵전략

##### (1) 핵역지의 종류 및 특징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떠한 핵역지를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실제 북한이 지향하는 역지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명이 요구된다. 핵역지에 대한 주요 개념과 이론적 명제는 상당히 다양하다.<sup>61)</sup> 하지만 북한의 핵전략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원용해야만 하는 역지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up>61)</sup> 다양한 역지에 대한 주요 개념들은 전성훈 박사의 아래 연구에 소상히 정리되어 있다. 전성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12-01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13~31.

I
II
III
IV
V
VI
VII

우선 억지의 구체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거부적 억지(deterrence by denial)와 징벌적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로 나눌 수 있다. 거부적 억지는 적대국에게 자신들이 목표로 한 정치군사적 승리가 결국은 좌절(거부)될 것이라고 확신시킴으로써 안정이 유지되는 상황이다.<sup>62)</sup> 즉 적대국이 도발을 통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수록 거부적 억지는 높아진다. 전쟁을 시작했으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발국은 전쟁개시를 주저한다. 징벌적 억지는 전쟁 발발 시 상대국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대국이 전쟁 도발을 포기하는 상황이다.<sup>63)</sup>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credible retaliatory capability)”의 보유가 중요하다. 즉 도발 잠재국의 입장에서 도발을 통한 이익보다 도발로 인해 감당해야 할 대가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도발이 억지된다.<sup>64)</sup> 즉 도발에 의한 이익보다 징벌이 크므로 도발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억지가 작동하는 것이다.

억지는 군사적 위기의 수순 혹은 정도와 관련해 일반억지(general deterrence)와 긴급억지(immediate deterrence)로도 대별할 수 있다. 일반억지는 적대국으로부터 당장의 도전은 예상되지 않지만 미래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억지력을 보유하는 상황이다.<sup>65)</sup> 즉 억지의 대상인 잠재적 도발국으로 하여금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sup>62)</sup>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24.

<sup>63)</sup> *Ibid.* p. 24.

<sup>64)</sup>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8.

<sup>65)</sup> T.V. Paul,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p. 24.

미연에 낙담시키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대국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암시하고 이에 합당한 군사력 보유 및 실전배치에 초점을 맞춘다. 긴급역지는 위기상황이 실제 발생하고 조만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군사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전쟁의 발발을 막는 상황이다. 2015년 8월에 DMZ 지뢰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긴급역지는 주로 일반역지가 작동하지 않고 적대국이 도전행위를 감행해 위기상황이 고조될 때 발생한다. 방어측이 적대국이 공격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믿고 공격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지를 작동시키는 상황이다. 적대국이 심각하게 공격을 고려하지만 방어측이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보복위협을 성공적으로 가할 때 형성되며, 일단 위기가 발생한 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처하는 상황을 말한다.<sup>66)</sup>

## (2) 강대국의 핵역지 전개과정

냉전 시기 이후 지금까지 핵전략 이론들의 대부분은 핵무기를 통해 전쟁을 억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핵역지가 핵전략의 핵심이다. 보통 역지는 상대방의 선제공격(1차 공격) 이후 피해국이 강력한 2차 공격으로 1차 공격을 강행한 국가에게 심각한 보복을 할 수 있을 때 성립된다. 즉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갈등 국가 어느 쪽도 선제 도발을 주저할 때 억지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억지의 기본 논리는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핵역지와 이에 따른 핵전략의 진화는 미국이 주도해 왔다. 핵역지는 1953년 미국이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을

<sup>66)</sup>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p. 7.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략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량보복전략은 2차 공격으로 상대방의 대도시나 산업중심지에 대한 막대한 타격(counter-value strike)을 상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대량보복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이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60년대 미소가 채택했던 핵전략은 대량보복전략에 기초한 상호 확증파괴전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핵전쟁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상호 간에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67)</sup> 70년대에는 군사표적에 대한 핵공격을 증시한 핵전략으로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이 등장했다. 따라서 핵공격 대상으로 전략미사일, 레이더, 잠수함, 폭격기 기지를 비롯해 지휘통제시설, 핵 저장고 등이 확대 검토되었다.<sup>68)</sup> 80년대는 대탄도 요격미사일체제 강화를 통한 전략적 방어력 및 억지력 구축이 강조되었다.

탈냉전시기에는 소련의 멸망으로 인해 초강대국 간 직접적인 핵전쟁의 위협은 감소되었지만, 핵확산으로 인한 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로부터의 위협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핵전력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으로부터 자국과 우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억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 개념이 강화되었다.<sup>69)</sup>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적이 WMD로 공격한다면 소극적 안전보장

<sup>67)</sup> Robert 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p. 74~82.

<sup>68)</sup> 60~70년대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Francis J. Gavin, *Nuclear Statecraft: History and Strategy in America's Atomic Age*,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pp. 12~29.

<sup>69)</sup> 하경석, 정성윤, “핵확산 논쟁과 북핵문제: 다차원적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1호 (2015), pp. 152~153.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조치를 철회하고<sup>70)</sup> 핵무기를 동원해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적의 핵 선제공격이 아니더라도 핵보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부시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즉 부시 행정부는 공세적 예방공격 독트린을 채택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적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sup>71)</sup>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의 연장에서 2010년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북한과 이란 등 7개국을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이라는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sup>72)</sup>

70) 미국은 1978년부터 소극적 안전보장(NSA) 정책을 채택해왔다. 카터행정부 당시 밴스(Cyrus Vance) 국무부장관이 1978년 유엔군축특별회의에서 했던 관련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NPT 혹은 기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협정에 가입한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 단 해당 국가가 다른 핵보유국과 동맹을 맺거나 협력해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소극적 안전보장에 충실히 따르면 북한이 핵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즉 북한이 NPT가입 등 국제규범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pp. 164~165.

71) 선제공격은 전략적 수준에서 전쟁의도를 가진 적의 전쟁 임박 징후를 포착했을 때 적보다 우선적으로 공격을 실시하는 개념이다. 이는 적대의사를 가진 적에 대해 전쟁 준비상태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예방전쟁(preventive attack)과 차별된다.

72) 미국의 2010년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미국은 NPT에 가입해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런 NSA는 핵국의 일반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으로서 관행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 보호의 의무로 인해, 소위 ‘조건부 NSA’ 정책을 견지하였다. 조건부 NSA에 따르면, “미국은 NPT의 비핵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국가가 다른 핵국과 동맹을 맺거나, 연대하여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 안보 공약국을 공격할 경우 예외로 한다.”

I
II
III
IV
V
VI
VII

### (3) 지역 중소국가 핵전략의 특징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지역 국가들 즉 중소 핵보유 국가들에 대한 핵전략은 연구대상으로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냉전기에 핵전문가들의 관심은 주로 강대국 간 핵전쟁 방지와 핵무기 감축에 집중되었다. 탈냉전기에는 점차 비핵국가의 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핵확산과 그리고 비국가행위자들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핵안보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근 개별 중소 핵보유국가들의 핵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개별 중소 핵보유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핵교리에 대한 사례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 핵보유국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중소 핵보유국의 핵전략을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sup>73)</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비핀 나랑(Vipin Narang) MIT 교수의 핵전략태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중소 핵보유국의 핵전략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나랑 교수는 중소 지역 핵보유국의 핵전략태세를 촉매형(catalytic posture), 확증보복형(assured retaliation), 비대칭확전형(asymmetric escalation)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핵태세 유형을 차별화하는 변수로 후원 강대국의 존재,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국가의 존재, 적극형과 위임형의 민·군관계 여부, 자원의 제약 여부 등 4개의 잣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태세와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 나랑 교수의 연구결과를 원용할 것이다.

---

<sup>73)</sup> 이러한 경향의 최신 연구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Neil Narang, Erik Gartzke, and Matthew Kroening, ed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Nuclear Posture: Causes and consequences f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먼저 촉매형 핵태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제 3국의 군사적·외교적 관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목적으로 핵모호성을 유지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74)</sup> 즉 특정지역 국가가 핵 개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국가와 후원 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후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핵무기의 정치외교적 효용과 목적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지역국가의 조그마한 핵도발 이더라도 지역 균형과 같은 후원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침해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핵태세에는 과도한 핵능력 보유 보다는 핵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얼마나 잘 견지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군사독트린에 핵능력을 포함하지 않고, 2차 핵공격 능력이나 전술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sup>75)</sup> 또 핵 개발 지역국의 입장에서는 제재나 핵선제공격으로부터 초래되는 비용 부담을 우회하며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확증보복형 핵태세는 촉매형과는 달리 핵보복 등의 위협을 통해

<sup>74)</sup> 나랑 교수는 1966년부터 1990년 사이의 이스라엘과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촉매형 핵태세를 견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촉매형 핵태세가 냉전기간 동안 가능했던 이유는 지역국들이 핵확전에 대한 위협을 통해 미소와 같은 강대국들의 행동을 견인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랑 교수는 촉매형 사례가 냉전시기에만 발견되는 것은 아닐 거라 전제한다. 왜냐하면 촉매형 핵태세는 기본적으로 제3국인 강대국이 인지하는 신뢰성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1 spring 2015. pp. 75~77.; "What does it take to deter? Regional power nuclear postur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 Neil Narang, Erik Gartzke, and Matthew Kroening, ed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Nuclear Posture: Causes and consequences f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pp. 235~267.

<sup>75)</sup>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적대국에 대한 억지 신호(deterrent signals) 보다는 후원 관계의 제3국을 향한 호소나 공갈이 강조된다.

I
II
III
IV
V
VI
VII

적대국의 핵공격과 핵강압을 직접적으로 억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촉매형과는 달리 믿을 만한 후원국이 없지만 가상 적대국의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하지 않다면 다소 여유로운 핵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이 아닌 확실한 보복용만으로 활용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의 핵태세이다. 즉 확실한 보복 능력을 통해 적대국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목표로 하는 2차 공격능력의 구축을 강조한다. 따라서 2차 공격력의 확보를 위해 적대국의 선제공격에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sup>76)</sup> 이러한 핵능력은 무엇보다도 촉매형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높은 수준의 핵능력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핵무기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 배치 패턴은 모호해야만 한다.<sup>77)</sup> 또한 정치지도부가 핵무장을 군부로부터 확실히 통제하는 독단적 체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실제 전장에서 재래식 공격에 대한 거부억지를 위해 핵무기 활용 계획을 구축하기 보다는 대가치 표적을 목표로 징벌적 억지를 추구한다. 그리고 전술핵무기의 배치 필요성도 높지 않다고 본다.<sup>78)</sup> 1964년 이후 중국과 1974년 이후 인도가 이러한 확증보복형 핵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비대칭확전 핵태세는 세 가지 핵태세 유형 중 가장 공격적인 핵태세이다. 믿을만한 후원국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적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우, 지역 핵국가는 비대칭확전 태세를 갖추

76) 핵무기의 절대적 수량 확보 뿐 아니라 핵무기의 은닉이나 산개 배치, 전략 잠수함 능력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이러한 생존 능력을 통해 적대국에게 선제공격의 낮은 효용을 인지시키려 한다.

77) 촉매형은 능력과 배치가 모두 모호해야 하지만 확증 보복형의 경우에는 능력의 공개는 확실해야하나 배치와 관련해서는 모호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술하는 비대칭 확전형의 경우는 능력과 배치 모두가 확실해야만 한다.

78) 거부적 억지를 위해 전술핵무기 위주의 핵무기 배치는 궁극적으로 2차 핵공격력의 생존성을 낮춘다고 나랑 교수는 분석한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 77.

고자 한다. 즉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소규모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핵공격(보복)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sup>79)</sup> 따라서 신속한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고려한 핵태세이고, 그 대상으로 대군사 표적과 대가치 표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벌적 억지의 속성을 당연히 포함한다. 또한 적대국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핵무기는 실제 전쟁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즉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임형 지휘통제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그러한 위임을 받은 현장지휘관은 거부전략의 입장에서 적의 우세한 재래식 능력에 대해 전술 혹은 전략 핵무기 운용의 책임을 맡는다. 따라서 비대칭확전 핵태세는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핵무기의 과감한 선제 사용을 전제로, 억지의 목적으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포함하며, 표적과 관련해 대가치·대군사적 타격을 구분하지 않으며, 거부와 징벌적 억지를 모두 수용한다. 또한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반응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대칭확전 핵태세를 견지하는 국가가 많은 수의 핵무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적대국에 비해 압도적인 핵우위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핵무기의 절대적·상대적 능력 보유 보다는 핵무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실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능력과 배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비대칭확전태세 국가는 생존 가능한

<sup>79)</sup> 나랑 교수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재래식 군사력의 억지를 위해 혹은 적대국의 재래식 군사 공격에 대응해 비대칭무기체계인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동원해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에서 비대칭 확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대칭확전 태세도 외부의 제3국가에 대해 경고를 보내면서 촉매형 태세와 같은 효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촉매형 태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제3국가가 아닌 적대국에게 '직접적(directly)'인 핵무기 선제 사용 위협을 '명확하게(explicitly)' 보내는 점이다.

I
II
III
IV
V
VI
VII

2차 핵 공격능력을 갖출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프랑스가 1960년 이후, 파키스탄이 1998년 이후 비대칭확전태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2차 핵공격능력을 구축했지만 파키스탄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sup>80)</sup>

## 나.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구상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확립된 기준과 내용은 없다. 여전히 핵역지 이론이 핵전략의 핵심이기에 역지 이론을 특정국가의 특정시기 핵전략이라 부르기도 한다. 북한의 핵전략을 최소역지전략 혹은 실존역지라고 일각에서 통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는 역지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 논리 혹은 가정들을 핵전략이라 규정짓기도 한다. 냉전기간 미소의 핵전략을 대량보복전략 혹은 상호확증파괴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핵전략을 단지 이론적 명제와 전략적 논리에 국한하지 않고 광의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략이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비단 전략적 논리 뿐 아니라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차원의 교리, 태세 등을 핵전략의 구성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즉 소위 2차 북핵 위기가 전개된 직후부터이다. 북한은 2차 핵위기 발발 이후 자신들의 핵 개발 이유가 자위 즉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역지 차원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

<sup>80)</sup>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p. 78~79.

핵능력으로 과연 핵보유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이론적 문제가 줄곧 제기되었다.<sup>81)</sup>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소량의 핵무기 보유국과 압도적인 다량의 핵무기 보유국 간의 억지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최소 억지와 이에서 파생하는 실존적 억지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전략의 특징을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핵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핵전략은 핵억지 대상·핵억지 태세(nuclear deterrence posture)·대량보복원칙(massive retaliation)·핵무기 선제 사용 교리·표적선정(nuclear targeting) 원칙·핵무기 지휘통제(nuclear command and control)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그 고유한 특징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82)</sup>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6가지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을 분석한다.

<sup>81)</sup> 실제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핵전략이 공세적이지는 않다는 유력한 연구가 있었다. Scott D. Sagan &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3) pp. 184~191.

<sup>82)</sup> 이러한 광의의 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핵전략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파키스탄의 핵전략을 분석하는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Bhumitra Chakma의 연구다. Chakma는 2006년 파키스탄의 핵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도중심의 최소억지전략·대량보복원칙·핵 선제사용 원칙·표적 선정으로서 counter-value·위임적 핵지휘통제 등 5가지 전략개념으로써 파키스탄의 핵전략을 분석했다. Bhumitra Chakma, "Pakistan's Nuclear Doctrin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 Dilemmas of Small Nuclear Forces in the Second Atomic Age", *Security Challenges*, Vol 2, No.2, July 2006. 함형필, 『NUCLEAR DILEMMA: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p. 191에서 재인용.

## (1) 핵역지 대상

우선 핵역지 개념은 적대국에 대한 공격 혹은 보복능력을 전제로 하기에 무엇보다 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억지태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이는 핵역지의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 보유 국가가 인식하는 혹은 전략적으로 설정된 최우선적인 안보 위협 대상이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핵위협에 따른 안보불안감이 핵 개발의 직접적 원인을 줄곧 강조해 왔다.<sup>83)</sup>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인지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현실은 핵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억지 뿐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래식능력을 가진 한국에 대한 억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유사시 최우선적으로 한미연합전략의 군사력에 대한 억지 또한 심각히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에게 핵역지 대상은 단지 미국이라고 협의로 단정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전략적 복잡성과 딜레마를 간과하는 것이다.

북한은 1차 북핵 위기 시부터 지금까지 공공연히 그들의 핵역지 대상은 바로 미국임을 줄곧 주장해왔다. 즉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한미연합훈련을 핵전쟁연습이라 규정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의 순항마저도 핵무력 배치의 일환이라 주장해 왔다. 즉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의 핵무기로 인한 위협이 핵보유의 이유이며 미국이 바로 핵역지 대상이라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핵역지 대상으로 미국만을 겨냥하고 있을까? 이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대한 핵역지

---

<sup>83)</sup> Brad Roberts, ed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69~74.

만을 목표로 핵 고도화를 증강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연합전력 혹은 한국의 재래식능력에 대해서는 핵역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이 미국만을 핵역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다 결정되었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북한이 전력을 다해 핵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대등한 핵역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현저한 핵기술 및 전력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 핵역지는 기본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본토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역지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이 비단 미국의 핵전력 뿐 아니라 한국 혹은 한국에 배치된 한미연합전력의 재래식 능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최근 북한 수뇌부의 참수작전을 포함하는 공세적인 작계5015를 채택함에 따라, 북한이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위협수준도 상당히 증가되었을 것이다. 아직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경우에,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핵역지를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과 안보현실을 감안해 김정은 정권은 현재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핵역지 전략을 같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북한이 ICBM 능력 뿐 아니라 한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집중 강화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과거 북한이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집중했던 반면에,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점차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며 공세적인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이다. 셋째, 북한의 2013년 발표한 소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이하 핵보유국법이라 통칭)’상에도 미국만을 핵역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기 법령 5조에 의하면 “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4)</sup> 이는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연합전력을 구축하여 북한과 교전을 벌인다면, 한국에게도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2016년 3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전 배비된 핵무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군사적 공격 수단들을....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 미국 본토를 정밀 조준하고 섬멸적인 발사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sup>85)</sup>

## (2) 핵역지 태세

핵역지 태세는 보통 최소역지(minimal deterrence)·최대역지(maximum deterrence)·제한역지(limited deterrence)로 구분된다. 우선 최소역지 개념은 전략 환경이 냉전시대와 크게 다른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이 핵무기에 과도한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최소역지의 핵심은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2차공격 능력’이다. 즉 적대국에

<sup>84)</sup> 북한은 2016년 3월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에서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 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을 핵타격 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들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게 규제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은 법령 5조의 해석에 한국에 대한 핵타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6. 3.16.

<sup>85)</sup> “우리의 경고를 오판하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16.3.9.

의한 선제타격 이후 잔존한 핵전력으로 적대국에게 ‘대량보복’을 가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격적인 핵계획을 지양하고 핵무기의 현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sup>86)</sup> 아울러 최소역지에서는 그리 많은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소량의 핵무기로 적대국의 주요 도시 몇 개를 파괴하고 인구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면 역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sup>87)</sup> 반면 최대역지는 냉전기간 미소 강대국의 ‘대핵전력 교전교리(Nuclear counter-force warfighting doctrine)’에 바탕을 둔 역지개념이다. 적대국의 핵능력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반면 방어자의 손실은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선제타격의 이점’에 기반을 둔 핵교전 능력과 핵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역지를 추구하는 전략개념이다.<sup>88)</sup> 제한역지는 최대역지에서 추구하는 핵교전 능력보다는 다소 제한된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어떠한 수준의 분쟁에 대해서도 적의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적대국의 승리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반격력(counter-force)과 대가치(counter-value) 핵공격 능력만을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국지적 영역에서의 제한 핵전투(nuclear warfighting) 수행능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은 현재까지 스스로 자신들이 어떠한 핵태세를 견지하는지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하지만 분명히 북한의 능력 상 최대역지태세를 추구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 북한이 선제타격을 통해 미국의

<sup>86)</sup> 최소역지력의 규모는 적대국에게 핵전쟁을 시작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 정도로 충분한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큼만의 핵전력이면 된다. 최소역지를 추구하는 국가는 핵전쟁에서의 승리가 목표가 아니다(이는 거부 전략과 동일). 유일한 목표는 상대방이 먼저 핵을 사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다, 전성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p. 23.

<sup>87)</sup> Patrick M. Morgan,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23.

<sup>88)</sup> 따라서 이러한 억지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요 군사표적 공격이 가능할 만큼의 다양하고 정밀한 핵무기 체계와 선제타격 시 적대국의 모든 군사표적에 대한 타격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 수량을 구비해야만 한다.

I
II
III
IV
V
VI
VII

핵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미국과의 핵전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억지태세를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sup>89)</sup> 실제 북한의 능력구비와 전략적 효용성 평가와는 별개로, 김정일 집권 기간 동안의 핵태세는 최소억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 개발 방향이 실전에서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이나 1차 공격능력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2차 보복공격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 정권 스스로도 미국의 본토 보복능력을 강조해왔으며 2006년 이후 줄곧 ‘공식적’으로는 핵선제 불사용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간 최소억지태세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현재 최소억지태세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이 점차 고도화되고는 있지만 당분간 최소억지태세를 추구하기에는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소억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규모 이상의 핵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즉 상대의 1차 공격을 받은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반격을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최소억지력을 보유할 정도의 핵능력 구비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최소억지를 추구하는 파키스탄의 경우 대략 70~8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sup>90)</sup>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최소 130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sup>89)</sup>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최용환, “북한 핵개발 전략과 그 지정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no 2 (2004); 함형필, 『NUCLEAR DILEMMA: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pp. 197~199;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4년 여름(통권 제104호) p. 173; 박휘락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9호), 2016년 7월, pp. 89~90.

<sup>90)</sup> E. Sridharan eds., *The India-Pakistan Nuclear Relationship* (Routledge, 2007) pp. 58~63.

있기 때문에,<sup>91)</sup> 북한의 경우에도 최소역지태세를 견지하려면 최소 이 정도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이 2016년 현재 생산 가능한 핵탄두 수는 약 8~36개 수준이다. 그리고 2020년에도 14~57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수치도 북한이 해당시기 보유한 핵물질을 전량 핵탄두로 전환했을 때의 예상수치이므로, 실제 보유량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상당히 고도화하고 있지만 아직 2차 공격을 통해 미국의 다수 대도시와 주요 산업시설을 위협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2016년 현재 북한은 ICBM의 절대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2020년 경에도 이 부문에 대한 수량적·기술적 수준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SLBM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보유는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은 기대할 수 없고 설사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대미 핵억지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김정은 정권의 핵태세의 특징은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핵태세를 추구할 것인가? 과거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의 효능과 자국의 핵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략적 효용 여부와는 상관 없이 최소역지태세를 추구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핵태세는 길게는

---

<sup>91)</sup> 프랑스의 경우 냉전시기 소련의 1차 핵공격을 받은 이후에도 소련의 핵심 목표 100곳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2차 타격능력을 전제로 1984년 당시 132개의 전략핵탄두를 유지했다. 영국의 최소역지태세는 소련 모스크바 한 곳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초점을 닦은 것으로, 이를 위해 영국은 SLBM 폴라리스 시스템과 모스크바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셰벌린(chevaline)을 구축한 바 있다. Forsyth Jr., Saltzman, and Schaub Jr., "Remembrance of Things Past-the Enduring Value of Nuclear Weapons," *Strategic Studies Quarterly*, Spring (2010)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 핵무기 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2). p. 149에서 재인용.

지난 2009년 2차 핵실험 직전까지, 가깝게는 2013년 3차 핵실험 직전까지 ‘촉매형’에 가까웠다. 비록 북한의 부족한 핵능력으로 최소억지력의 달성은 불가능했지만,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지렛대 삼아 중국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즉 대미 핵억지력을 추구하기에 핵능력은 부족했지만 핵능력에 대한 모호성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sup>92)</sup> 특히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제재에 직면할 때 마다 중국의 후원으로 제재 감당 비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측면도 촉매형 핵태세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태세는 기존 촉매형 태세에서 가장 공세적 형태인 ‘비대칭확전’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국경을 접한 한국을 겨냥한 핵능력 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가 가능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강행한 것도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를 용이케 하여 한국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최근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핵보복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그 어느 시기보다 한미연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핵무기를 동원해 선제타격도

<sup>92)</sup>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정권이 추진했던 핵모호성 전략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핵실험을 지시한 것을 공개한 바 있으며, 핵과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 현장에 직접 나타난 모습을 언론에 과감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공화국의 핵능력의 수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핵무기는 내가 직접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행보이다. 정성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분석 (4): 국제관계와 안보”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5. 2016.5.18.), pp. 3~4.

불사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핵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한미연합전력의 재래식공격에도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93)</sup> 셋째, 비대칭확전 태세를 지향하는 국가는 반드시 핵무기 선제 사용 교리를 채택한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자의적인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명분을 다양하게 축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확전 태세를 효과적으로 견지하기 위해서는 위임형 지휘통제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북한의 지휘통제체제는 절대권력자인 김정은이 배타적으로 핵 지휘 통제권을 장악한 독단적(assertive)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발사준비 단계에 있어 언제라도 정치군사적 결정에 따라 최단시간 내 발사할 태세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즉 독재국가의 특성상 핵은 김정은 본인이 직접 통제하고 있지만 그 배치와 사용과 관련해서는 위임형 지휘통제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up>93)</sup> 북한은 2016년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아주 엄격히 해석하면 ‘실사 적대국의 공격이 있더라도 재래식 무기만 사용한 비핵공격이라면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문맥으로만 보면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핵선제 불사용 원칙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국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책임 있는 핵보유지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반감을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북한의 핵보유국법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상대의 핵 또는 비핵공격(재래식 공격)에 대한 핵보복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위의 글, pp. 3~4.

### (3) 대량보복 원칙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원칙은 제한보복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핵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선제타격에 의한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해 타격받은 그 이상으로 적에게 보복을 가하겠다는 군사적 대응개념이다. 이는 적절히 사용만 된다면 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대량보복 원칙이 공식적인 군사적 대응 원칙으로 천명되고 적대국이 이를 충분히 인지했을 때 억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량보복 원칙은 그 속성상 보복에 관한 것이므로 2차 타격능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적대국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충분한 핵능력의 보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핵능력의 구비 없이 선불리 천명한다면, 특히 위기발발의 초기 국면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상대국이 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 취약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아울러 대량보복 원칙의 채택은 핵보유국이 징벌적 억지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적 억지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뢰성이 좌우되기도 한다. 거부적 억지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보복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상대국이 이를 사실상 징벌적 억지전략의 구사로 오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대량보복 혹은 그 반대인 제한보복과 관련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무자비한 보복’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량보복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이 표명하고 있는 적대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독트린의 위협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미국이나 미국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량보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세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정은 정권이

대량보복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우선 만약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북한의 선제공격이나 위기고조(escalation) 과정에서 촉발될 것이다. 특히 전면전 상황보다는 국지적 분쟁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북한이 대량보복을 실제로 구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량보복 원칙을 천명하기에는 또 다른 전략적 딜레마가 있다. 즉 북한이 핵태세 교리로 비대칭확전을 채택하고 그 궁극적인 군사적 목적이 유사시 한미연합전력의 승리를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량보복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징벌적 억지를 추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이 선제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할지 혹은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 (4) 핵 선제(혹은 일차)사용 교리

핵 선제 사용 교리(Nuclear First Use)는 기본적으로 우선 전쟁 발발 이전 기습적 공격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동원해 선제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선제공격이라는 것이 전쟁 발발 이전에 적의 공격 혹은 전쟁 개시가 임박한 경우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의미한다는 논리에 충실한 것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의 선제 핵공격이나 재래식 공격의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든지 혹은 오판했을 경우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 선제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핵무기 선제 사용 교리는 핵무기 보유국 간 전쟁 발발 후 적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상대 핵보유국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군사교리이다.<sup>94)</sup> 이는 북한이 한미연합군과

I
II
III
IV
V
VI
VII

제한전 혹은 국지적 무력충돌의 과정에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거나, 실제 전면전에 돌입했을 경우 전쟁 초기에 한미동맹의 전쟁수행 능력 및 의지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공격옵션으로 핵 선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든 미국보다 핵무기를 우선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북한은 핵보유국법에서 적대국의 공격에 대한 핵억제와 핵보복을 강조했다. 비록 북한이 핵보유국법에서 핵 선제공격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 선제공격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27일 인민군최고사령부 명의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표하면서 “(대남)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을 포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핵보유국법에서 억지와 보복을 위한 사후적이고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종 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포기하였거나 이를 상징적인 규정이라 치부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5)</sup>

특히 북한은 2016년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주장을 집중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의 4차 및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압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

<sup>94)</sup> 즉 상대의 핵공격에 대응차원으로서 핵을 ‘대량보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원칙과는 배치된다.

<sup>95)</sup> 전봉근, “김정은 정권의 핵운용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안,”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2016.7.13.), pp. 2~8.

북한은 3월 7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총공세를 언급하면서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훈련이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며 “정의의 ‘핵선제타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적한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북한 외교부도 ‘핵선제타격권’이란 제목의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핵선제타격을 주장했다. 3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시 한 번 선제타격론을 강조했다. 또한 4월 24일 인민군 창건 8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중앙보고대회에서 리명수 인민군총참모총장은 보고에서 “.....백두산 혁명강군은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처절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도 있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전쟁 개전과 핵 선제공격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과 압살정책, 정전체제 붕괴로 인한 사실상 전쟁상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핵전쟁 도발 등이 그런 핵 선제공격의 명분에 해당된다. 2016년 6월 북한이 수차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을 남한이 거부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초강경적인 공세”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을 위협하였는데, 이런 성명도 핵공세의 명분이 된다. 북한은 핵보유국법에서 선언적으로는 핵 선제공격을 부정하면서, 핵억제 및 핵보복전략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 핵전략은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핵보유국’으로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명분용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sup>96)</sup>

I
II
III
IV
V
VI
VII

## (5) 핵 표적 선정 교리

핵 표적 선정에 관한 정책은 핵전략 구성의 필수적 요소로서 핵공격 대상으로서 어떠한 유형의 표적을 겨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에게는 대군사표적 선정(counter-force targeting) 정책과 대가치표적 선정(counter-value targeting)정책의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한데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주로 전략적 타당성과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전쟁승리에 대한 기여도, 핵 보복의 회피 가능성,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 사후 공격의 정당성 확보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특히 대가치 표적 선정은 대량보복전략의 채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냉전 초기 미국은 2차 공격으로 상대방의 대도시나 산업중심지에 대한 막대한 타격(counter-value strike)을 상정해 상대방의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칭적 핵전력 관계에 있는 상대적 약소국도 대가치표적을 염두에 두고 핵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통상 핵무기 보유능력이 억지 대상 적대국에 비해 열세이고 이로 인해 최소 억지전략을 채택하는 경우에 핵보유국은 대가치표적을 고려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핵능력 보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군사 표적을 공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가치표적 선정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최소억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전제는 소량의 핵무기로 미국 본토의 주요 대도시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핵무기를 활용해 선제공격을 할 때, 그 목표는 대군사적 가치를 주요 표적으로 한다.<sup>97)</sup> 즉 1차 공격은 적의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한

<sup>96)</sup> 위의 글, pp. 3~7.

<sup>97)</sup> 실제 미국과 소련은 냉전기간 최대억지 태세에 기반해 핵전쟁의 궁극적 승리를 목표를 지향한 적이 있다. 이 경우 1차 공격에서 대가치 표적 보다는 대군사 표적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적의 핵전략을 초기에 꺾어버리는 것이 우선적 목표이다.

타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보복공격인 2차 공격은 대부분 상대의 수도나 주요산업시설과 같은 광범위한 타격에 초점을 맞춘다. 만약 북한의 핵역지에 한국이 포함되거나 혹은 김정은 정권이 핵고도화의 초점을 한국 공격이라는 목적에 맞추고 있다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서울과 같은 한국의 대도시나 주요 산업시설보다는 한국 내 군사적 전략 거점지역에 대한 핵타격을 우선 고려할 것이다.<sup>98)</sup>

실제 북한은 2016년 7월 19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주일미군기지 7함대 사령부 증원 전력인 한반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부산항과 울산항 등을 타깃으로 삼아 스커드 C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2발 발사 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실험 다음날인 20일 노동신문에 ‘전략군 화력타격계획’ 제목과 함께 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된 한국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해 이러한 의도를 노출시킨 바 있다.<sup>99)</sup> 즉 미군의 증원이 이뤄질 항만과 비행장 등 주요 통로를 파괴하거나 미국의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핵무기를 우선 투사할 것이다.<sup>100)</sup>

---

Robert 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pp. 76~79.

<sup>98)</sup> 2016년 5월 8일 북한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은 “명령만 내리면 원수들의 정수리에 선군조선의 핵 뇌성이 터칠(터트릴)것”이라고 말하며 “남반부 전지역의 주요 대상물을 두들겨 펠 위력한 타격수단이 이미 배비(배치) 됐고”라고 위협하였다. “〈北대회〉 리명수 “명령만 내리면 선군조선 핵뇌성 터칠 것”, 『연합뉴스』, 2016.5.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8/020000000AKR20160508032300014.HTML?from=search>〉. (검색일: 2016.6.2.).

<sup>99)</sup> “北김정은, ‘한국 타깃’ 핵미사일 발사훈련 참관…韓공격계획 지도 보여”, 『동아일보』, 2016.7.20., 〈<http://news.donga.com/3/all/20160311/76943607/1#csidx50ce1b0e5792866a955cc965afc1902>〉. (검색일: 2016.7.23.).

<sup>100)</sup> 북한의 핵전략이 미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미연합전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억지용일 가능성과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개입을 차단하여 한미동맹의 승리를 거부하는 거부전략(denial strategy)의 채택일 가능성,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해 국제·국내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Victor D.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 no. 2 (2002)

I
II
III
IV
V
VI
VII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과 미국의 증원병력이 배치된 일본과 괌 등을 타격하기 위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정밀도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과거보다 급속하게 증강시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이 2016년 상반기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6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이유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진기 지인 괌에 대한 타격능력을 시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괌은 미 공군의 전략자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 공군의 즉각 출동을 지연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가 높은 곳이다. 현재 일본에는 주일미군기지 3곳과 유엔사 후방기지 7곳에<sup>101)</sup>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아울러 북한이 2016년에 사거리 1,3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적극 실험한 목적 중 하나는 유사시 주일미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며,<sup>102)</sup> 북한이 8월 3일 유례없이 일본의 EEZ 영역으로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유이다. 특히 노동미사일은 1차적으로 주일미군을 겨냥한 후 2차적으로 일본과 괌의 지원병력과 군수물자가 집결하는 한국의 남부지역을 겨냥하는 다목적 포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현재 징벌적 억지보다는 거부적 억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p. 230.

<sup>101)</sup>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은 전시증원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51년 일본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 사이에 체결된 '유엔군 지원에 관한 교환 공문'에 근거한 것이다.

<sup>102)</sup> 2016년 현재 주일미군 병력은 약 3만 9000명 규모이다. 요코스카와 사세보를 모항으로 하는 제7함대 함선과 병력 약 1만 2,000명까지 포함하면 미군 태평양전력의 약 1/6인 5만명이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한다. 이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의 두 배에 육박한다. 미국은 작전계획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을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동으로 한반도로 출동한다는 입장이다. 『北미사일, 駐日미군 왜 노렸나?』 『문화일보』, 2016.8. 4., <<http://www.munhwa.com/news/view.htm?no=2016080401070430114001>>. (검색일: 2016.8.11.).

## (6)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핵전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는 유사시 핵무기의 사용승인, 명령 전파 및 하달, 명령이행 및 운용과 관련된 권한, 조직, 통신망 및 경보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통상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는 적대국의 공격을 경계하는 경보장치(sensors),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을 담당하는 군사조직으로 전달하는 통신망(communication links),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계획과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sup>103)</sup>

따라서 핵 지휘통제체계와 관련해서는 과연 핵전력에 대한 지휘 및 통제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실질적인 핵무기의 지휘 통제권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는 의도적이든지 또는 비의도적이든지 승인받지 않은 핵사용을 방지하고 오로지 정상적인 국가승인절차에 의한 핵사용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한다.<sup>104)</sup> 즉 핵무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자가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을 때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평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최고정치지도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통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 주안을 두는

<sup>103)</sup> Ashton B. Carter, John D. Steinbruner, and Charles A. Zraket, "Introduction," in Ashton B. Carter, John D. Steinbruner, and Charles A. Zraket(eds.), *Managing Nuclear Operation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87), pp. 1~3. 김보미 "핵확산 논쟁을 통해 본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한반도 위기구조와 통일·평화 담론의 재구성』 (2016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6) p. 183에서 재인용.

<sup>104)</sup> Bruce G. Blair, *Strategic Command and Control*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1985). 함형필, 『NUCLEAR DILEMMA: 김정일체제의 핵전력 딜레마』, pp. 207~208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VI
VII

독단적(assertive) 지휘체계와 사전 규정된 조건아래서 적시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예하 사령관에게 핵무기의 발사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적(delagative) 체제로 구분된다.<sup>105)</sup>

북한의 핵보유국법 4조에 따르면,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조항만을 볼 때 핵통제권의 군부 위임이 아니라 김정은에 의한 민간통제를 명시하는 등 선진형의 신중한 핵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듯이 보인다. 즉 현재 법적으로 북한의 핵지휘통제권은 김정은 개인에게 있다. 즉 북한은 적극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대외발언들과 “임의의 순간에도 핵탄두를 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sup>106)</sup> 그대로 수용한다면, 김정은 개인 뿐 아니라 일선 지휘관 다수도 핵무기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는 분권화된 지휘체계 또한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이든 실질적이든 북한의 지휘통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김정은 개인에게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이 부대지휘와 관련해서 해당 부대의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해 통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핵전력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핵무기 탈취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규군의 지휘체계와 분리하여 평시에도 최고사령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별개의 지휘체계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sup>107)</sup> 북한이 4차

<sup>105)</sup> Peter D. Feaver, “Command and Control in Emerging Nuclear N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3 (Winter 1992/3) pp. 168~170. 함형필, 『NUCLEAR DILEMMA: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p. 208에서 재인용.

<sup>106)</sup>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3.4.

<sup>107)</sup> 김보미, 핵확산 논쟁을 통해 본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p. 189.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 TV를 통해 공개한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군수 공업부의 핵실험 승인요구에 직접 서명하는 모습과 친필사인인 핵실험이 최고 권력자 개인의 명령이라는 단일지도 형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휘통제체계는 쿠데타 세력이나 체제붕괴로 인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핵무기 탈취를 예방하고 우발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sup>108)</sup> 반면 지도부 참수공격이 성공하여 최고사령관이 유고될 경우 지휘체계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sup>109)</sup> 즉 핵전력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외부 위협세력에 의한 위기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은 향후 김정은 체제에 있어 지속적인 딜레마로 남을 것이다.

<sup>108)</sup> 위의 글, pp. 189~190.

<sup>109)</sup>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지도부 참수나 국가지도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긴다면 북한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는 일시적으로 위임적 지휘체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근욱,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예측”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p. 110.



# Ⅲ.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영향

이동선(고려대학교)





## 1. 도입

이 글에서는 북한 핵무장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역량, 동맹체제, 주변국관계, 핵 확산과 관련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역량에 관해서는 다음 문제들을 다룬다.

북한 핵무장의 진전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이 미국본토 타격능력을 갖추에 따라 미국이 대북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견지할 것인가? 북한이 이차타격능력을 갖춘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sup>110)</sup>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의 억지력을 저평가함에 따라 동맹을 통한 대북확장역지가 약화될 것인가?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이 대북확장역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이차타격능력을 보유할 경우 확장역지는 무력화될 것인가?

북한 핵무장이 동맹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다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확장역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동맹을 약화시킬 것인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가 확장역지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것인가? 북한의 이차타격능력이 동맹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인가?

북한 핵무장이 북중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맹의 균열을

---

<sup>110)</sup> 이차타격능력이란 핵공격(일차타격)을 받은 후에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보복타격을 적에게 가할 수 있는 핵능력을 일컫는다.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란 적이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편익을 상회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차타격능력을 논할 때에는 자국의 핵전력에 대한 적국의 기습전면타격을 일차타격으로 상정한다. 이차타격능력을 보유하려면 생존 가능한 핵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Kenneth N. Waltz,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4, no. 3 (1990), pp. 731~745.

I
II
III
IV
V
VI
VII

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복원을 초래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장이 주변국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북핵이 진영형성과 대립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냉전”을 불러올 것인가? 주변국 간 안보딜레마와 상호불신을 얼마만큼 조장할 것인가?

북한 핵무장이 핵확산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북한 핵무장은 세계비확산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것인가?

상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은 북한 핵문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과소·과잉대응을 피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정책·역량, 동맹체제, 주변국관계, 핵확산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의 핵심주장을 미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강경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북핵의 직간접 위협에 대한 자체대응능력을 갖춘 미국은 북한의 협조를 구할 필요 없다. 또 북한을 깊이 불신하기에 상호협력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억지를 무력화할 수 없다.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다각적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억지를 뒷받침하는 확전 위험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북한 핵무장은 미국의 지역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핵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공약을 더 유용하게 여길 것이며, 영향력 증대를 원하는 미국도 동맹강화 요청에 적극 호응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중단기적으로 북중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국 사이에 경쟁과 대립을 조장한다. 군사대응 조치를 유발하여 안보딜레마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비현실적 상호기대와 실망의 과정을 촉발함으로써 국가 간 불신을 키운다. 그러나 세간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을 초래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 및 군사기술·장비 해외이전 전력을 갖고 있으며,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주요 비핵산업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이 세계비확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핵 위협의 지리적 범위는 동북아에 한정되고, 그 전시효과도 미약하다. 아울러 북핵의 도전은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 보강노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2. 미국의 대북정책과 역량

### 가.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이 미국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이 실전 배치되는 등 북한의 핵무장이 진척되면, 핵동결과 확산방지를

I

II

III

IV

V

VI

VII

위한 북미협상이 재개되어 “과도적 합의”를 낳을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 또는 우려가 있다.<sup>111)</sup>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예상이다.

### (1) 타협의 효용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군비통제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수천기의 고성능 핵무기, 재래식 정밀타격능력, 미사일방어체계를 두루 갖춘 미국은 북한의 미약한 핵전력에 대한 거부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sup>112)</sup> 재래식무기/핵무기를 이용한 선제 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전력을 대폭 줄인 후에 나머지를 미사일방어체계를 활용해 공중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sup>113)</sup> 다시 말해 미국은 일차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우위(nuclear superiority)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한 처벌적

---

<sup>111)</sup> 조한범, “북핵문제의 과도적 합의에 대한 우려,”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7, 2016.5.24.); “북의 2차 핵보복 능력에 대한 우려,” 『문화일보』, 2016.7.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0401033011000002>>. (검색일: 2016.8.5.);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II),” 『이데일리』, 2016.2.1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_sid=01971286612550520&DCD=A00602&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_sid=01971286612550520&DCD=A00602&OutLnkChk=Y)>. (검색일: 2016.5.20.); 김재천,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pp. 1~23.; 박휘락,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69호 (2016), pp. 101~102.

<sup>112)</sup> Keir Lieber와 Daryl Press의 국방연구원 발표(2016.6.7); Matthew Kroenig, *Approaching Critical Mass: Asia's Multipolar Nuclear Posture*, NBR Special Report No. 58 (Seattle, W.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6).

<sup>113)</sup> 미국이 핵 일차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전량을 파괴할 수 없다면 북한이 이차타격능력을 갖게 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미국의 재래식 타격능력, 대잠수함전능력, 미사일방어체계 등도 일차타격능력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감내하지 못할 만큼 큰 피해를 미국에게 입힐 수 있으려면 여러 기의 북한 핵무기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 핵무기를 전량 파괴할 수 있어야만 북한의 이차타격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핵무기의 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면 된다. 이차타격능력에 관한 잘못된 주장의 예: 최영범, “북의 2차 핵보복 능력에 대한 우려.”

억지력도 항구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기술력 및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북한이 일차타격을 통해 미국의 핵보복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래전력만으로도 미국은 북한에 가공할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이 아무리 핵전력을 증강하더라도 미국의 차별적 억지력은 결코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경제적으로 현저한 열세에 처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안정적 핵보복능력을 갖추어 미국의 핵우위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조차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듯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군비통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 또한 핵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강제로 중단시킬 방도도 없다.

군비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이 군비통제에 나설 이유도 없다. 북한과 군비경쟁이 시작되더라도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수십 년 앞서 핵 개발을 했으며 기술·경제력에서 압도적인 미국이 군비경쟁에서 북한에 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우위를 큰 어려움 없이 유지할 공산이 크다. 군비경쟁에 드는 비용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어차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핵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 강대국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핵전력은 그보다 약한 북한을 억지하는 데에도 충분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핵우위를 유지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 수준이 미국 같은 경제대국에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핵우위를 포기하더라도 핵보복능력에 기대어 북한의 핵공격을 쉬이 억지할 수 있다.

핵도미노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반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 상황에서 추가핵실험의 중단(핵실험 모라토리엄)은 핵도미노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을

I
II
III
IV
V
VI
VII

위협하여 핵무장 의향을 갖게 하는 요인은 북한의 핵능력이지 핵실험이 아니다. 따라서 단지 북한의 핵실험만을 막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의 핵 개발을 막기에 충분한 자체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안보·경제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미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을 대체할 동맹후보국 겸 경제파트너를 두고 있지 못하다. 또한 스스로 충분한 자위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 충분한 레버리지를 가진 미국은 이들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북한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핵물질의 이전을 막는 데에도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 북한에 인접한 국가들은 모두 핵확산을 저지하고 싶어 한다. 북한의 핵물질이 적대세력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며, 북한의 확산활동이 국제사회의 경제·군사적 보복으로 이어져 자신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므로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들은 북한의 핵물질 반출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sup>114)</sup> 따라서 북한의 반출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물질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미국에 대한 이차타격능력을 갖추려면 북한은 앞으로 핵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희소한 핵물질을 다른 국가와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북한의 도움을 받아 제조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북한정권은 생존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보복을 받게 될 수 있다. 공격에 사용된 핵무기의 출처는 감식을 통해 밝혀질 공산이 크다.<sup>115)</sup>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핵물질 이전에 주저할 것이다.

---

<sup>114)</sup> 2016년 6월 경제전략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관련 밀수(nuclear smuggling)에 대비한 협력확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러한 노력의 일례이다.

<sup>115)</sup>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Why States Won't Give Nuclear Weapons to Terroris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1 (2013), pp. 80~104.

실제로 북한이 타국의 핵무장과 직결된 활동에 가담한 일은 드물다. 파키스탄의 A. Q. Khan 네트워크를 통해 소량의 uranium hexafluoride를 리비아에 제공하고,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준 것이 확인된 핵확산 활동의 전부이다.<sup>116)</sup> 북한이 버마의 핵프로그램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sup>117)</sup>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을 여러 차례 이전했지만, 이는 핵 개발과 직결된 활동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지금은 이러한 활동조차 매우 어려워졌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과 파키스탄의 A. Q. Khan 네트워크는 붕괴했으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반란세력의 도전을 받아 쇠약해졌다.<sup>118)</sup> 이란은 2015년 합의 이후 핵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진척되면서 UNSCR 2270호를 위시한 북핵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불신도 핵동결과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적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미국은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합의를 모두 위반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1994년 협정은 민주당이, 2005년 공동선언은 공화당이 체결했으므로 북한에 대한 불신은 초당적이다. 일반국민도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다. 때문에

<sup>116)</sup> Chung Min Lee, *Fault Lines in a Rising Asi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p. 312~319; Sheena Chestnut,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pp. 80~111.

<sup>117)</sup>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 Collins, 2012), p. 233.

<sup>118)</sup> 근래 북한과 파키스탄이 핵물질을 거래했다는 인도 언론의 보도가 있으나, 이 거래에서 북한은 제공자가 아닌 수령자였다. “Pakistan’s Sale of Nuclear Materials to N Korea Hushed up by China,” *The Indian Express*, June 22, 2016.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조치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며 협상을 마다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고수해왔다.<sup>119)</sup>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비확산 약속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sup>120)</sup> 따라서 군비제한을 위한 북미협상에 나서기를 주저할 것이다. 설사 미국이 협상에 임하더라도, 합의도출과 이행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불신하는 미국이 철저한 이행검증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군사정보유출과 주권침해를 우려해 미국의 사찰활동을 크게 제한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21)</sup>

## (2) 타협의 실현가능성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다. 미국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북한은 이차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핵전력 증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차타격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충분히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sup>122)</sup> 따라서 이차타격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북한은 안보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데 북미 양국 간 국력격차를 감안할 때 북한은 매우 오랫동안 미국과 상호이차타격능력에 기초한 “공포의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이차타격능력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핵무장에 대한 제한을 수용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sup>123)</sup>

<sup>119)</sup> 김재천,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pp. 1~23.

<sup>120)</sup>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의 약속을 믿더라도 비확산 합의는 소용없다. 북한이 2013년에 이미 비확산 의무를 지키겠다고 국내법 제정을 제정하며 공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믿는다면, 별도의 합의 없이 이 법의 이행을 기대하면 된다.

<sup>121)</sup> Tongfi Kim, “Asymmetric Strategic Problems in Nuclear Nonprolifer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4, no. 2 (2014), pp. 191~213.

<sup>122)</sup>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pp. 240~241.

실제로 북한은 이차타격능력에 기초한 확증보복전략(assured retaliation posture)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24)</sup> 적의 일차타격에서 살아남아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KN-08을 비롯한 이동식 지상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sup>125)</sup> 위치추적이 어려운 이동식 미사일은 고정식 미사일에 비해 높은 생존능력을 가지며, 수중에서 은밀히 이동할 수 있는 SLBM이 특히 그러하다. 또한 연료주입이 진행되는 동안 공격에 취약해지는 액체연료추진 미사일의 결점을 극복한 고체연료추진 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소수만 생존해 적지에 도달해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도 이차타격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장국으로 자처하며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증보복전략을 채택했음을 방증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했고 유일사상 10대원칙 개정판에도 “핵무력”을 포함했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이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재차 선포했다.<sup>126)</sup> 이후에도 김정은 당위원장이 각종 미사일의 시험성공을

<sup>123)</sup> 이 장에서 사용하는 세 핵전략유형(확증보복전략, 비대칭확전전략, 촉매전략)은 다음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sup>124)</sup> 전력이 미약했던 핵무장 초기에는 북한이 실존억지전략(existential deterrence)을 잠시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보복 가능성에 기초한 억지전략으로서, 핵보복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확증보복전략과 구별된다. John Park and Dong Sun Lee, “North Korea: Existential Deterrence and Diplomatic Leverage,” in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up>st</sup> Century Asia*, ed. Muthiah Alagapp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69~295.

<sup>125)</sup> Chung Min Lee, *Fault Lines in a Rising Asia*, p. 309~310;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 (Office of the U.S.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Military\\_and\\_Security\\_Developments\\_Involving\\_the\\_Democratic\\_Peoples\\_Republic\\_of\\_Korea\\_2015.PDF](http://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Military_and_Security_Developments_Involving_the_Democratic_Peoples_Republic_of_Korea_2015.PDF)>. (검색일: 2016.7.28.).

I
II
III
IV
V
VI
VII

자화자찬하며 핵전력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다.<sup>127)</sup> 확증보복전략을 채택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핵능력 보유사실을 이처럼 명백히 밝히려 한다.<sup>128)</sup>

핵전력의 지휘통제권을 최고지도자에게 집중시킨 것도 북한이 확증보복전략을 채택했음을 시사한다. 2013년 4월 1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129)</sup> 정치지도자가 핵전력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확증보복전략의 특징 중 하나이다.

북한이 확증보복전략 실행에 필수적인 이차타격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핵전력, 재래식 타격능력, 대잠수함 전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망라한 미국의 일차타격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여 단기간에 이차타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sup>130)</sup> 그들의 주장과 달리, SLBM에 대한 “유효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다. 북한 잠수함은 비교적 큰 소음을 내는 (소련/러시아에서 설계한) 동력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탐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또한 북한 잠수함이 미국에 접근하기

---

126) “북, 비핵화 대화에 사실상 대못...6자회담 동력 더욱 고갈,” 『연합뉴스』, 2016.6.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AKR20160623180700083.HTML>>. (검색일: 2016.7.26.).

127) “북 김정은, 핵무력 계속 확대해야..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 『연합뉴스』, 2016.7.15.,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09/06/1801000000AKR20160906015800014.HTML>> (검색일: 2016.7.26.).

128)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p. 22.

129)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3-11, 2013.4.8.).

130) 박휘락,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pp. 98~9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과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6-05, 2016.5.10.).

위해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소수의 지리적 관문(choke point)을 통과해야만 하므로 동선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약점을 지닌 북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세계최고의 대잠수함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러시아·중국의 잠수함대를 상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는 것이다. 수중정보 공유를 비롯한 국제 협력이 진척되면,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sup>131)</sup>

북한의 SLBM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이다.<sup>132)</sup> SLBM이 배치됨에 따라 북한의 핵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리라는 전망은 타당하지만, 예측과 대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잠수함이 대서양이나 카리브해까지 항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SLBM 공격은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본토를 지키는 미사일방어체계는 동편으로부터의 공격에만 대비하면 된다. 하와이와 괌을 비롯한 태평양도서는 예외적으로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겠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방위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다.

북한이 효과적인 SLBM 전력을 갖추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SLBM을 수중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잠수함을 개발하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류 기술력을 보유한 중국조차도 최근야 비로소 핵·미사일을 장착한 견실한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효과적인 초계작전에 필요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북한에게 벽찰 것이다. 2016년 9월 현재 북한은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을 단 한 척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sup>133)</sup> 그조차도 실제

<sup>131)</sup> “한미, 북한수역 수중정보 공유한다,” 『연합뉴스』, 2016.8.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6/0200000000AKR20160826117900014.HTML>>. (검색일: 2016.8.29.).

<sup>132)</sup> 이 같은 주장의 예: 박휘락,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pp. 97~99.

I
II
III
IV
V
VI
VII

작전상황과 흡사한 환경에서 시행된 현실적 성능시험을 거친 적이 없다. SLBM 탑재 잠수함은 큰 경제적 비용도 수반한다. 최소 한 척의 잠수함을 항시 작전수역에 배치하려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4척 정도로 구성된 함대를 보유해야 한다. 열등한 북한경제가 이만한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차타격능력에 기초한 확증보복전략을 추구하는 북한은 핵군비제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확증보복전략이 아닌 다른 유형의 핵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각 대안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 제한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한미동맹의 우세한 재래전력을 상쇄하기 위해 북한이 비대칭확전전략(asymmetric escalation posture)을 채택할 수 있다.<sup>134)</sup> 한미동맹과 재래전이 벌어지면, 패배를 면하기 위해 상대보다 먼저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세한 재래전력만을 활용한 한미동맹의 공격을 역지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전략핵무기에 더하여 수많은 전술핵무기도 생산할 것이며, 충분한 수를 갖기 전까지 핵전력 제한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비대칭확전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핵 일차 불사용 정책(no-first-use policy)을 천명한 것이 그 증거이다. 북한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7차 당대회에서 선언하였다.<sup>135)</sup>

---

<sup>133)</sup> John Schilling, “North Korea’s SLBM Program Progresses, But Still Long Road Ahead,” 38 North (August 26, 2016), <<http://38north.org/2016/08/slbm082616/>>. (검색일: 2016.9.1.).

<sup>134)</sup> Vipin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p. 73~91.

<sup>135)</sup> “김정은, 자주권 침해 않는 한 핵무기 먼저 사용 안 해,” 『조선일보』, 2016.5.8.,

이 선언은 외교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핵전략유형 판별에 중요한 것은 (선언의 진정성이 아니라) 북한이 핵 일차 불사용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이다. 핵 일차 불사용 선언은 재래식공격에 대한 핵 억지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비대칭확전전략의 목적에 반한다. 일반적으로 비대칭확전전략을 활용한 (재래식 공격에 대한) 억지는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공연한 위협에 기초한다.

이론적으로는 우호적인 강대국의 개입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용도로 핵무기를 활용하는 촉매전략(catalytic posture)을 북한이 채택할 수도 있다.<sup>136)</sup> 이 경우 북한은 낮은 수준의 핵능력만 갖춘 채 고도화를 자제할 것이다. 촉매기능만을 수행하는 데에는 이차타격능력이나 전술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원한다면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되고 진전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촉매전략을 채택한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전력을 제한할 것이므로 굳이 미국이 군비통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

중국을 불신하며 안보의존을 기피하고 있는 북한이 촉매전략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공산도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강행하면 중국이 위기관리를 위해 개입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북한이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사활을 중국의 손에 맡기는 일도 주체와 강성대국을 표방하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의 촉매전략 채택은 북중동맹이 현저히 강화되어야만 가능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8/201605080023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8/2016050800236.html)). (검색일: 2016.7.25.); 정성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4): 국제관계와 안보”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5, 2016.5.18).

<sup>136)</sup> Narang은 북한이 실제로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촉발하는 촉매전략을 채택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지원 감소와 북중동맹의 약화를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촉매전략을 채택했다고 보기 어렵다. Narang,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pp. 81~85.

그러나 핵 개발을 두고 북한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북중동맹의 강화가 어렵다.

러시아를 염두에 둔 촉매전략도 마찬가지로 불신과 의존문제 때문에 북한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사태 수습과 경제난 극복에 급급한 러시아가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북한이 기대하기 어렵다.<sup>137)</sup>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시험을 반복하며 핵능력을 서둘러 고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촉매전략을 채택할 의향이 없음을 나타낸다.

다른 핵무장국의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북한의 핵군비제한 전망은 어둡다. 세계 3위의 핵대국인 중국조차도 이차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군비통제를 마다하고 전력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보다 앞선 핵전력을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조만간 핵군비제한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의 “세계 비핵화” 관련발언이 비핵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은 무리이다.<sup>138)</sup> 세계적 군축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자국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해온 수사에 불과하다.<sup>139)</sup>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을 했기에 자국도 따라할 수밖에 없었으며,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자국도 그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세계 비핵화가 매우 요원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발언은 핵무장을 고수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

<sup>137)</sup> 현승수, “북한 4차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09, 2016.4.19.).

<sup>138)</sup> “북, 비핵화 대화에 사실상 대못...6자회담 동력 더욱 고갈,” 『연합뉴스』 2016.6.23.

<sup>139)</sup> Avery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up>st</sup>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p. 117.

## 나. 미국의 확장억지력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무력화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본토 타격능력을 갖추는 순간 미국의 확장억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표명되고 있다. 북한이 장차 이차타격능력까지 갖추면 미국의 핵우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sup>140)</sup> 이는 미국이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무릅쓰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여느 국가처럼 자국의 이익을 타국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호놀룰루나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sup>141)</sup> 이를 알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핵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처방으로 종종 이어진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이 반복되면서 한국의 조야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우선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냉전시대에 소련이 보유했던 수만 기의 핵무기도 미국의 확장억지를 무력화하지 못했다. 과거 소련이 양적으로 우세한 핵전력을 보유했던 시기에도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는 건재했으며, 소련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못했다. 미국의 확장억지는 탈냉전기에 들어서도

<sup>140)</sup> 최영범, “북의 2차 핵보복 능력에 대한 우려,” p. 30.

<sup>141)</sup> 박휘라,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p. 99;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데일리』, 2016.2.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781046612547896&DCD=A00602&O=utLnkChk=Y>>. (검색일: 2016.5.26.).

I
II
III
IV
V
VI
VII

수천 기의 핵무기를 지닌 러시아와 수백 기를 보유한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 그 결과 미국의 동맹들이 건실하게 유지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회원국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삼가고 있다. 이런 엄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십~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북한이 미국의 확장역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우위를 유지하는 한 핵우산은 건재하다. 북한이 한국에게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차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전력을 꺾어버린 후에 핵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응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이 미국에 대한 이차타격능력을 갖추어 미국의 핵우위를 종식시키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은 효력을 잃지 않으며 확장역지는 유지된다. 북한의 이차타격능력 보유에 따라 증대된 위협에 노출된 미국의 핵보복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sup>142)</sup> 하지만 효과적 핵역지는 확고한 핵보복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핵역지의 성공은 보복 의지가 아니라 능력에 달려있다.<sup>143)</sup> 핵역지는 보복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핵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다. 적국의 공격이 의도치 않은 확전을 통해 핵전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존재하면 핵역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sup>144)</sup> 적국의 공격에 대해 자국이 확전 위험성을 높이는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효과적으로

---

<sup>142)</sup> Matthew Kroenig, *Approaching Critical Mass*, p. 27.

<sup>143)</sup> Kenneth N. Waltz,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pp. 733~734.

<sup>144)</sup> Robert Jervis,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재래전도 안보딜레마, 군부의 공격선호, 불확실성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의도치 않은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Barry R.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위협할 수 있다면 핵억지는 더욱 강건해진다.<sup>145)</sup> 핵전쟁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확전위험성이 작더라도 공격의 기대비용은 기대편익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억지가 성공한다. 이 같은 원리는 핵우산을 이용한 확장억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146)</sup>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전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sup>147)</sup> 예를 들어, 재래 전력으로 북한의 핵전력·시설을 타격하거나 제한적인 연합공세를 단행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를 한반도나 인근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도 확전 위험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경고용으로 북한에 소수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설령 미국이 확전을 우려해 대응하지 않으려 해도, 한국 또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전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들 동맹국이 NATO 회원국들처럼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억지를 위한 확전위험은 더한 신뢰도를 갖게 될 것이다.<sup>148)</sup> 핵공격을 당한 국가가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을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숙적들이 핵공격을 받고도 전혀 보복하지 않으리라고 북한이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언제라도 핵공격을

<sup>145)</sup>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6), p. 121. Schelling은 이런 위협을 “the threat that leaves something to chance”라고 표현했다.

<sup>146)</sup> 동맹국을 보호하는 확장억지는 자국을 수호하는 직접억지에 비해 어렵다. 확장억지 상황에서는 적의 공격에 대한 핵보복 의지가 약해서 확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장억지가 절대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의도치 않은) 확전 위험성이 충분히 크다면 확장억지가 성공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sup>147)</sup> 확전 위험성을 높이는 다양한 군사조치들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시오: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sup>148)</sup> NATO는 핵정책을 관장하는 Nuclear Planning Group를 두어 비핵 회원국들도 핵전력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 핵무기 일부의 보관 및 투발에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제도를 시행한다.

해올 수 있다고 믿으며 자칭 핵억지력을 개발해온 북한이 자신이 먼저 공격해도 미국이 핵보복을 단행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처럼 피해망상적인 성향을 지닌 국가일수록 적국의 보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 마련이다.<sup>149)</sup> 또한 핵공격을 받은 미국이 자제력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핵 불사용 규범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고 북한이 단정할 수도 없다.<sup>150)</sup>

핵공격을 고려하는 북한이 의도치 않은 확산의 위험성을 완전히 없앨 방도는 사실상 없다. 확산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핵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을 무장해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핵전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sup>151)</sup> 환언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일차타격 성공의 불확실성(first strike uncertainty)을 제거할 수 없다.

북한은 크지 않은 확산 위험성이라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위험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북한과 달리 미국은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52)</sup> 그러므로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를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

<sup>149)</sup> Patrick M. Morgan, *Deterrence 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63.

<sup>150)</sup> Paul C. Avey, "Who's Afraid of the Bomb? The Role of Nuclear Non-Use Norms in Confrontations between Nuclear and Non-Nuclear Opponents," *Security Studies*, vol. 24, no. 4 (2015), pp. 563~569.

<sup>151)</sup> 북한의 미사일방어능력과 재래식정밀타격능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sup>152)</sup>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를 확증보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확증파괴란 적 사회를 기능불가 상태로 만들 정도의 대량파괴를 의미하는데, 순손실을 적에게 부과하는 확증보복은 이러한 대량파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 즉, 확증보복은 확증파괴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Dong Sun Lee, "Nuclear Policies and Security," in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eace*, ed., Nigel You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253~256.

### 3. 동맹체제

#### 가. 미국의 지역동맹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지역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개연성이 크다. 북한 핵무장의 결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유용한 안보수단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확장억지는 북한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확장억지의 효용성을 극단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동맹국들은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1945년 이래 적대국의 핵무장 때문에 미국의 안보공약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동맹을 이탈한 국가는 없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효력을 의심하고 독자 핵무장까지 선택했던 프랑스도 NATO를 탈퇴하지는 않았다.<sup>153)</sup> 프랑스는 1966년에 NATO의 통합지휘구조(Integrated Military Command Structure)에서 이탈했지만, 동맹의 일원으로 남아서 협력을 계속하다가 2009년에 통합지휘구조에 복귀했다. 통합지휘구조를 떠났었던 것도 확장억지의 효용을 의심해서라기보다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에서 벗어나 정치적 자주성을 확립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sup>154)</sup>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충하기 위해서 추진하였다.<sup>155)</sup> 마찬가지로 미국의 확장억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 핵무장의 길을 걸었던 영국도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으로 남았다.<sup>156)</sup>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타

<sup>153)</sup>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up>st</sup> Century*, pp. 197~198.

<sup>154)</sup> *Ibid.*, p. 182.

<sup>155)</sup> *Ibid.*, p. 191.

<sup>156)</sup>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Palgrave

I
II
III
IV
V
VI
VII

NATO 회원국들은 핵무장도 마다한 채 미국의 확장역지에 의지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동맹국들의 위협인식을 제고하여 미국과 동맹을 오히려 강화하도록 만들 것이다. 불안해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전략자산 배치를 희망하거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려는 것이 일례이다. 또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어체제와 킬체인 구축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 강화조치는 위협의 증대에 따라 방기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자연스런 행동이다.<sup>157)</sup>

이들 국가가 독자 핵무장보다는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이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전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세계최고의 핵우산에 양과 질에서 못 미칠 것이다. 또한 자체 핵전력에 비해 동맹의 용도는 다양하다. 독자 핵역지력은 영토 등 국가생존과 직결된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효과적이며, 사회적 중요성을 갖지 못한 국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효용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 해상수송로를 위협하는 적의 무력행사에 대한 핵보복 위협은 신뢰성을 갖지 못해 효과가 없다. 반면에 미국은 생존보장을 위한 핵역지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부차적인 국익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 해군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주는 것이 그 일례이다. 이 점에서

---

Macmillan, 2003), chapter 20.

<sup>157)</sup> 북한의 핵무장은 연루의 위험성도 증대시킨다. 핵전쟁에 연루되는 일은 재래전에 연루되는 것보다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약소동맹국들에게 연루의 위험성은 방기의 위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약소동맹국들은 방기 위험성을 줄이는 일에 치중한다. 반면에 강대동맹국인 미국에게는 연루의 위험성이 방기 위험성보다 비교적 크다. 그러므로 미국은 약소동맹국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여 연루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다.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I
II
III
IV
V
VI
VII

동맹은 자체 핵전력보다 더 유용하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 한,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는 작업에 치중할 것이다. 그리고 동맹 강화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협력에도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군사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각서를 2014년에 체결한 것이 그 첫걸음이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한일의 동맹 강화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지역동맹체제의 강화는 미국 안보전략의 주요목표이다. 아시아에서 최고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동맹의 강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북한 핵무장에 위협을 느낀 동맹국들의 대미 접근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이 같은 동맹의 강화는 미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지 않는다. 우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한 북한과 무력충돌을 피하고자 더 각별히 노력할 것이므로 미국이 연루될 위험성이 줄어든다.<sup>158)</sup>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지원을 더욱 필요로 함에 따라 얻게 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미국이 지원비용의 상당부분을 한국과 일본에게 분담시키고 자체전력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 나. 북중동맹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중단기적으로 북중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무장을 추구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바라는 중국과 대립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 핵무장을 증대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한다.<sup>159)</sup> 북한의

<sup>158)</sup> 실제로 연루되었을 때 치르게 될 비용은 커졌지만, 이 문제는 연루 위험성의 감소에 의해 충분히 상쇄된다.

<sup>159)</sup> 이동선, “동맹국 제지의 이론과 실제: 북중동맹 사례,” 『국제관계연구』, 제19권 1호

핵무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경쟁자인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일조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안보의존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들면, 한국과 미국 등도 북한문제에 관해 예전처럼 중국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되면 의장국 겸 중재자 지위에서 비롯된 중국의 영향력도 사라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중국이 원하는 국제적 안정도 저해한다. 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시범을 간헐적으로 되풀이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진배치하고 한국과 일본도 군사력을 증강하면, 군비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또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탈북자가 동북지방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안해진 북한정권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위험성도 있다. 만일 북한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경우, 중국은 정치군사적 완충지대와 한반도문제에 관한 레버리지를 단번에 잃을 위험에 처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하면, 목표상충으로 인한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초래한 북중 균열은 동맹을 와해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북핵을 둘러싼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에게 유용한 존재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정치군사적 완충지이자 외교적 레버리지이다. 그리고 북한에게 중국은 가장 믿을만한 후원국이자 체제유지를 위한 안전판이다. 북핵문제로 인한

---

(2014), pp. 21~24.

양국의 마찰도 이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없다.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될수록 생명선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세간의 인식과 반대로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sup>160)</sup>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편중은 매우 심하다. 북한경제가 무시하지 못할 자생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지만, 석유와 같은 필수전략자원은 대부분 중국에서 얻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이차 타격능력을 갖추기 때까지 북한은 북중동맹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래에 동맹의 내실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1961년에 체결된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이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양국이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는 한, 북중동맹은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북핵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미·일과 대립하게 되면 북한의 유용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효과적인 핵억지력을 갖추면 북한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위해 더욱 든든한 완충국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또한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에게 더 쓸모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돕고 인도 견제에 활용해왔듯이 핵무장한 북한을 미일 견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장기적으로 북중동맹 강화를 향한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sup>160)</sup> 무역의존도는 수출입 총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14년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99.5억 달러, 국민소득은 189억 달러로 추산된다. 따라서 그 해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52.6퍼센트에 이르렀다. 김병연, “북한 경제의 변화와 대북제재의 효과,” 『도전받는 동북아 안보와 한중일 협력』 (화정평화재단 주최 한중일 연례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2016.9.2.), pp. 15~16.

## 4. 주변국관계

북한의 핵 개발은 주변국관계에 여러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안보딜레마, 거품으로 인한 불신, 신냉전의 허상이 그 대표적 예이다. 북핵이 이 문제들의 씨앗을 뿌리고, 유관국의 관리미숙이 이를 싹 틔우며 기르고 있다.

### 가. 안보딜레마

북한의 핵무장은 유관국 간에 안보딜레마를 조장한다. 북핵이 초래한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본의 아니게 제3국의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북핵은 한·미·일-중러 간 의심과 대립을 심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의 위협인식을 제고하여 제각기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불안해진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협의하여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보강하고자 한다. 이런 움직임은 의도치 않게 중국과 러시아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대응조치를 유발한다.<sup>161)</sup> 양국은 자국의 대미 억제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중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한미 동맹 강화를 자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비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와 미사일방어체계 공동구축에 대해서도

---

<sup>161)</sup> 김홍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pp. 25~58.

마찬가지로 격하게 반발한다.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62)</sup>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반응은 양국에 대한 한·미·일의 의구심과 안보불안을 유발한다.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자위조치에 중리가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안보딜레마를 조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능력 및 역할 증대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영유권 및 역사문제를 두고 일본과 대립하는 한국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처하고자 미사일을 비롯한 원격타격능력을 증강함에 따라 인접한 일본도 불안해하고 있다.<sup>163)</sup>

물론 이 같은 대립이 순전히 안보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의 충돌도 대립과 경쟁의 주요원인이다.<sup>164)</sup> 한국과 중국은 해양경계선·이어도와 관련해 입장을 달리하며,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독도와 관련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다.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최고리더 지위를 놓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방도서 문제에 관해 일본과 입장차를 보이며 미국과는 동유럽을 놓고 세력권 경쟁을 벌인다. 안보딜레마와 이익갈등의 상대적 중요성은 관계마다 다르다.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일찍이 나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한중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한중 대립이 불가피한 이익갈등보다는 안보딜레

<sup>162)</sup> 현승수, “북한 4차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09, 2016.4.19).

<sup>163)</sup> Kroenig, *Approaching Critical Mass*, pp. 29~30.

<sup>164)</sup> Adam P. Liff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2014), pp. 52~91.

마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에 중일 갈등은 안보딜레마보다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미중관계는 중일관계와 더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미일-러 대립은 일차적으로 영토/세력권분쟁 등 이익갈등에 기인하며, 한러 대립은 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안보딜레마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보딜레마는 북핵문제 유관국들의 양자관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 나. 거품으로 인한 실망과 불신

북한 핵 개발은 거품을 만들어내고 터뜨림으로써 유관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sup>165)</sup> 거품이란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나친 기대는 실망을 자아내어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거품은 근래 한중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협조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어왔다. 강력한 비핵화 압력을 북한에 가하도록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고 한국은 한중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늘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반면에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에 과도한 기대를 걸어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을 포섭하여 한미동맹의 강화를 막고 더 나아가 분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

<sup>165)</sup> 이동선, “한중관계와 미국: 통념과 현실,” 『성균 차이나 브리프』, 제4권 1호 (2016), pp. 64~69.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시험은 이 같은 비현실적 기대를 무너뜨렸다. 한국은 중국의 희망과 달리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중국은 한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에 주저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에게 유용한 완충지대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중국과 미국은 동맹을 유지하여 북한과 한국을 각각 자국 세력권에 붙들어두려 한다. 접경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고 인접강국들도 경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한국에게도 역외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은 매우 유익하다. 한중관계를 둘러싼 거품은 이 엄연한 지정학적 현실과 충돌하고 말았다. 그 결과 거품이 터지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실망과 불신이 불거지게 되었다. 중국정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신과 한국정부를 향한 시진핑 주석의 불만은 모두 거품이 초래한 결과이다.<sup>166)</sup>

이러한 실망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거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UNSCR 2270호의 채택을 전후해서 거품이 오히려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한국 조야의 일각에서는 사드이슈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중국이 북한에 강한 비핵화 압력을 가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결의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표명을 대북제재 이행의지의 명백한 증거로 해석하며 기대를 품기도 한다. 그러나 결의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이행이란 중국에게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에게 제재는 협상을 이끌어내고 진척 시키기 위한 부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핵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여타 유관국과 함께)

I
II
III
IV
V
VI
VII

<sup>166)</sup> 김흥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pp. 40, 46.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성급한 대화가 일차적 비핵화 수단인 제재의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며 주저한다. 이러한 한중 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다시 부풀어 오른 상호기대는 조만간 실망과 불신으로 한 번 더 이어질 것이다.

미중관계도 북핵이 유발한 거품 때문에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합의가 2003년에 깨어진 후부터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북한이 9.19 공동선언과 후속합의 이행을 거부한 2009년 이후부터 미국은 대북압박을 비롯한 주도적 역할을 중국에 기대해왔다. 중국이 유일동맹국 겸 최대무역 파트너로서 갖고 있는 독보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만들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었다. 반면에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미국에 기대하였다. 미국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포함한 보상을 북한에게 제공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성사시켜주기 바란 것이다.

하지만 미중의 이러한 상호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중국은 사회경제적으로 허약한 동맹국을 강력히 제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칫 북한의 불안정 또는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위협적인 적국에게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기를 꺼린다. 이미 몇 차례 약속을 어긴 북한을 깊이 불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말았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내비친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국제적 위신과 영향력을 손상하려는 기도로 간주하며 반발한다. 반면에 미국도 자국의 무관심과 경직성을 탓하는 중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양국 사이에 실망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 다. 신냉전의 허상

북핵문제가 한·미·일·북·중·러 두 진영이 대치하는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다.<sup>167)</sup> 오히려 북한 핵 개발은 불용 입장을 분명히 취한 중러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북한 사이에 불화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당위원장은 북핵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상회담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보다 소극적인 러시아도 핵실험이 불러온 제재국면으로 인해 대북 경제교류협력 확대에 주저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북·중·러 협력의 촉진제가 아니라 장애물이다.

북핵문제가 초래한 사드 배치와 한미·미일동맹 강화에 대해 북·중·러 모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의 여지는 작다. 중국이 이들 사안을 두고 러시아·북한과 공조할 경우 한·미·한일동맹 강화에 오히려 일조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위협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가까워지려 애쓰는 한국을 일본과 같은 친미연합의 충직한 일원으로 변모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 공조가 필요하

<sup>167)</sup> “사드배치로 한반도 신냉전 소용돌이... 제2의 남중국해?” 『동아일보』, 2016.7.8; “사드가 쏘아올린 동북아 신냉전,” 『경향신문』, 2016.7.8.

구(舊)냉전이 한·미·일·북·중·러 간 진영대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착각이다. 중국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명실상부한 동맹을 유지한 것은 1950년대 전반부에 국한된 일이었고, 양국은 1960년대부터 적대관계에 접어들었다. 이후 1970-80년대에는 중국이 소련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과 제휴하였다. 그러므로 한·미·일·북·중·러 간 대치상태가 실령 출현하더라도, 이를 냉전의 재현을 의미하는 신냉전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
II
III
IV
V
VI
VII

지도 않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핵역지력을 위협한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판단한다면, 이들은 각자 핵·미사일의 수를 늘리거나 교란장치(decoy) 등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대미 핵역지력을 보존할 수 있다.<sup>168)</sup> 또한 사드를 겨냥한 재래식타격수단을 확충함으로써 맞대응할 수도 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중국 공군의 폭격기 편대가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 기지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sup>169)</sup> 이런 대응조치와 관련한 중러 군사협력은 필요치 않다. 역사적으로 우방보다는 라이벌로 지낸 기간이 길었던 중국과 러시아 간에 전략적 제휴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력보강을 위한 중러 협력은 장기적인 위협의 소지마저 내포한다.

북한을 포함한 삼각공조도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익하지 않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의 핵역지력 보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없다. 따라서 사드와 관련한 삼각공조는 강대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용하지 않으므로 북한이 추구한다고 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북한이 삼각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지정학적 편익도 없다. 망하거나 적대세력과 결탁하지 않는 한, 북한은 중러가 바라는 완충국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 그런데 당분간 북한이 친미연합에

<sup>168)</sup> Charles L. Glaser and Steve Fetter,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the Future of U.S. Nuclear Weapons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2001), pp. 40~92. 미사일 한 기를 생산·배치하는 비용은 이를 탐지·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작다. 미사일에 교란장치를 장착하면 미사일방어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커진다.

<sup>169)</sup> “중국군, 한국의 사드 기지 1시간이면 파괴 가능,” 『조선일보』, 2016.2.24.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드가 중국의 대미 핵역지력을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확증보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미국에 발사하는 상황은 미국의 핵 일차타격을 받고난 이후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사드를 먼저 제거한 후에 보복타격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때문에 중국의 공격에 취약한 사드는 중국의 이차타격능력을 위협할 수 없다.

가담하거나 중리의 후원에도 불구하고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적극적 협조를 얻으려 굳이 애쓸 필요 없다.

한·미·일은 한미·한일 양자동맹을 매개로 이미 수십 년 동안 동일진영에 속해왔다. 하지만 아직 삼각동맹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제약요인과 동기부족 때문에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 삼각군사협력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는 한일 군사협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만큼 중대하지는 않지만, 위안부를 비롯한 역사문제도 한일 사이에 불신을 키워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다. 중국의 반대도 삼각군사협력을 선뜻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지리적 인접성과 북한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각별히 바라는 한국에게 특히 그러하다. 또한 삼각군사협력을 추진할 동기도 강하지 않다. 삼각동맹 결성의 관건인 한일 군사협력은 양국에게 유용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한국과 일본은 제각기 자체국력과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활용해 안보상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동맹이 건재하고 자체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편치만은 않은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굳이 서로 협력할 절실한 이유가 없다. 북한의 핵위협도 이런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치 않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한 추동력을 내기 어렵다.

북핵이 실제로 신냉전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신냉전의 허상이라는 위험요인의 씨앗을 뿌린다. 현실에 대한 곡해가 길러낸 신냉전의 허상은 실질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신냉전의 도래에 대한 공연한 걱정은 북핵문제 유관국 간의 안보 딜레마를 증폭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의 도래를 불가피한 추세로 간주할수록, 한·미·일의 북핵 대응조치를

자신들에 대한 봉쇄기도의 일환으로 의심할 공산이 커진다. 냉전은 미국주도연합에 의한 봉쇄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리의 의구심은 앞서 설명한 안보딜레마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리 간 전략적 제휴를 고정불변의 현실로 받아들일수록 미국과 일본은 그 저의를 의심하며 도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리가 북한을 같은 편으로 여기며 두둔한다고 믿으면, 한·미·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북한 핵전력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전념할 것이다. 이런 군사적 대비와 대응은 본의 아니게 중국과 러시아를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안보딜레마를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

현실성을 결여한 신냉전론은 북한의 위험한 오판도 초래할 수 있다. 북핵이 (북·중·러가 한 진영을 이루는) 신냉전을 불러온다고 북한이 믿으면 핵무장을 더욱 서두를 것이다. 북·중·러 삼각공조의 복원은 북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냉전론을 믿는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중리의 지원을 얻어낼 호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또한 신냉전이 이미 도래했다고 오판할 경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를 기대하며 한·미·일에 대해 호전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 5. 국제비확산체제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 도전이다. 북한은 NPT에 조인했다가 탈퇴선언한 후 핵무기를 만든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퇴요건을 규정한 NPT 제10조를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로써 이란을 비롯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한 NPT 회원국들이 향후 악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선례

를 남겼다. 이런 점에서 NPT에 아예 서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같은 핵무장국에 비해 비확산체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들이 고무할 수 있는 NPT 미가입국은 핵 개발 능력을 갖지 못한 남수단뿐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독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핵보유 여부에 관해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스라엘이나 기정사실화에 그친 인도·파키스탄과 달리, NPT에서 규정한 5개 핵무장국가와 동등한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핵질서에 정면도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처럼 고도의 핵 개발 잠재력을 갖춘 국가들에게 직접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란에 비해 큰 핵도미노 위험성을 수반한다. 이란이 핵무장에 나서면 불안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터키 등이 그 뒤를 따를 수 있지만, 이들은 핵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sup>170)</sup> 아울러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대외확산활동에 활발히 참가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과 인도 등 여타 핵무장국가 구별된다.<sup>171)</sup>

그러나 북한 핵무장이 세계비확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북한의 직접적 핵위협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국한된다. 북한이 ICBM과 SLBM을 갖추어 타 지역까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역외 국가들과 북한 사이에는 중대한 이익상충이

<sup>170)</sup> Kroenig, *Approaching Critical Mass*, p. 35.

<sup>171)</sup> 이스라엘이 1975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핵무기 판매를 제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비용문제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 수 개의 기관들이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이란과 이라크에 이전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Revealed: How Israel Offered to Sell South Africa Nuclear Weapons,” *The Guardian*, May 24, 2010; Arms Control Association, “Arms Control and Proliferation Profile: India,”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indiaprofile>). (검색일: 2016.7.28).

I
II
III
IV
V
VI
VII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역외 국가들의 핵무장 동기를 강화하지 않는다. 영국이 현재 운용중인 핵잠수함을 신형모델로 교체하기로 최근 결정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지만, 이는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사실상 외교적 수사에 가깝다.<sup>172)</sup>

북한 핵무장의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도 미약한 편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작은 편익, 큰 비용, 규범적 반감, 국내정치적 제약 때문에 핵무장을 꺼린다.<sup>173)</sup> 다섯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NPT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의 선례에 고무되어 핵무장에 나설 국가들은 현 시점에 없다시피 하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란은 국제합의 하에 핵 개발을 자제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강화조치를 보며 핵 개발에 따르는 큰 대가를 새삼 자각할 것이다. 내전에 휩싸인 시리아는 북한을 모방할 형편이 못된다.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한 강대국들의 노력도 북한 핵무장의 충격을 반감시킬 것이다. 비확산체제는 모든 강대국에게 유익하다. 국력우위를 잠식하고 전력투사를 방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적대국 및 경쟁국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성을 줄이기 때문이다.<sup>174)</sup> 따라서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북한발 핵도미노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실패사례가 드러내듯 강대국의 능력과 의지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 비핵화에 관한 공통이익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책임분담 등 여타사안에 대한 이견이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지노력이 거듭 실패해서 핵도미노가 연이어 쓰러질 가능성은 적다. 역사적으로 핵도미노 현상은 매우 희소

<sup>172)</sup> “MPs Vote to Renew Trident Weapons System,” *BBC News*, July 19, 2016.

<sup>173)</sup> John Mueller, *Atomic Obsession: Nuclear Alarmism from Hiroshima to Al Qaed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chapter 9.

<sup>174)</sup> Matthew Kroenig, *Exporting the Bomb: Technology Transfer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하다.<sup>175)</sup>

북핵의 도전은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을 촉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핵연료 재처리)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 시설 보유를 허용하는 NPT의 허점을 북한처럼 핵 개발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핵물질의 국제이동을 차단할 목적으로 미국과 우방국들을 주축으로 PSI가 창설되었다. 현재 105개국이 PSI에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sup>176)</sup> 핵분열물질 생산시설 규제와 PSI는 아직 유효한 국제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NPT가 보장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과 주권의 원칙적 제한을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최대의 무역국이자 북한의 제1교역 파트너인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허점이다. 하지만 중국 등 PSI 불참국도 독자적으로 또는 유엔결의안에 의거해 핵물질·기술 이전 차단에 동참한다. 이란 같은 확산우려국의 농축·재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국제합의에 의한 개별적 제한이 부과되고 있다. 미진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비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sup>175)</sup> Philipp C. Bleek, “Does Proliferation Beget Proliferation? Why Nuclear Dominos Rarely Fall,” (Ph.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2010).

<sup>176)</sup>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공식웹사이트, <<http://www.psi-online.info/Vertretung/psi/en/03-endorsing-states/0-PSI-endorsing-states.html>>. (검색일: 2016.7.28.).



# IV. 남북관계에 대한 파급영향

김상기(통일연구원)





## 1. 도입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으로 천명했고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고도화 되어왔다. 2012년 4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명기하였고,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는 ‘동방의 핵대국’ 지위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선포했다. 그 사이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2016년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최소 7개에서 최대 2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77)</sup>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직접적 위협 혹은 억지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에 있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sup>178)</sup> 또한 핵 투발수단으로서 잠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예, 스커드 B, C 계열 및 노동 미사일)을 1,000여기 보유하고 있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보전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sup>179)</sup>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대치상태에

<sup>177)</sup> 이러한 평가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물질의 양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제II장 참조.

<sup>178)</sup>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이미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실험을 진행했음을 밝힌바 있으며,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직후에는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 2013.2.12., 2016.9.9. 또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조엘 위트(Joel Wit)는 2015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만큼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Joel S. Wit and Sun Young Ahn,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February 2015), p. 7.

<sup>179)</sup>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Kenneth N. Waltz and Scott D. Sagan, *The Spread*

I
II
III
IV
V
VI
VII

있는 남북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군사 핫 라인까지 차단된 전면적 대화·교류의 단절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경제제재의 강화를 추진하는 등 공조를 다지고 있지만,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따라서 향후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진전이 남북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고도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의 발생 가능성 및 양자 간 위기교섭(crisis bargaining) 능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탐구는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고 향후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남북관계의 악화 또는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포괄적 논의를 전개하거나 또는 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와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면서 북핵문제의 파급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지만,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sup>180)</sup>

---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Thir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3), pp. 186~187.

<sup>180)</sup> 예를 들어, 김옥성, “국력의 비대칭성 완화 노력이 속적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사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 (2010), pp. 209~242; 황지환,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한반도 리더십 변수의 재검토,” 『국제관계연구』, 제18권 1호 (2013), pp. 39~65; 엄상윤, “북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상관성,” 송대성 외, 『북핵문제:

북핵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지구적 차원(global level)에서 국가의 핵 지위 변화, 핵 확산, 또는 군사력 분포 변화의 일반적 효과를 탐구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sup>181)</sup> 군사 분쟁의 가능성 또는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설명과 경험적 발견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은 다시 북핵 고도화 과정에서 실제로 전개된 남북관계 사례의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한 추론 그리고 최근 전개된 남북한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북핵 고도화의 남북관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전망하고자 한다.

남북한 관계의 분석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가정을 필요로 한다. 남북한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정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

---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성남: 세종연구소, 2014), pp. 357~384. 이 중에서 남북한 간 힘의 비대칭성 완화가 숙적관계 지속의 원인임을 주장하는 김옥성의 연구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북핵 고도화에 따른 남북한 간 군사위기 발생 가능성 및 교섭능력의 변화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지는 않는다.

<sup>181)</sup> 예를 들어, Daniel S. Geller, “Power Differentials and War in Rival Dyad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2 (1993), pp. 173~193; D. Scott Bennett, “Security, Bargaining, and the End of Interstate Rival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 2 (1996), pp. 157~184; Kyle Beardsley and Victor Asal, “Winning with the Bomb,”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pp. 278~301; Erik Gartzke and Dong-Joon Jo,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pp. 209~233;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7 (2013), pp. 173~195; Mark S. Bell and Nicholas L. Miller, “Questioning the Effect of Nuclear Weapons on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1 (2015), pp. 74~92.

I
II
III
IV
V
VI
VII

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82)</sup> 첫 번째 가정은 1991년 남북한의 동시 유엔(UN: United Nations) 가입이라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며, 두 번째 가정은 1991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관계를 기본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남북한이 군사, 안보 측면에서 상호 간에 직면한 현실에 더욱 부합할 뿐 아니라 군사력 분포 또는 핵 지위의 변화가 초래하는 효과에 관한 국제정치이론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 장(chapter)의 다음 섹션들(sections)에서는 첫째,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남북한 간 군사력 변화를 논할 것이다. 둘째, 핵무기 보유 또는 군사력 분포의 변화가 초래하는 일반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관한 추론을 제시하고, 그 추론을 최근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셋째, 군사력과 교섭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북핵 고도화 이후 남북한 간 위기교섭능력의 변화에 대한 추론을 제시하고,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후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의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상대적 군사력의 변화

국제정치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이 강조하듯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포함한 군사력의 수준 혹은 분포는 국제관계의 안정과 불안정, 분쟁

<sup>182)</sup>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구갑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12권 2호 (2004), pp. 130~161.

가능성, 국가들의 대외전략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다.<sup>183)</sup> 국제정치의 주된 변수로서 힘의 분포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와 같은 설명은 국가 간 관계로 가정되는 남북한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남북한 간 군사적 능력의 변화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핵무기 보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때,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군사력 측정의 한 가지 방법인 단순개수비교를 통해 평가할 때 북한의 군사력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sup>184)</sup> 단순개수비교 방법은 병력의 숫자를 비롯하여 전차, 함정, 항공기, 미사일 등의 숫자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병력과 무기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유·무형의 군의 조직적 능력 차이도 간과하기 때문에 군사력 평가에 관한 오해 또는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sup>185)</sup>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더욱 타당하며 신빙성있는 군사력

<sup>183)</sup>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Alfred A. Knopf, 197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sup>184)</sup> 2014년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 수는 63만여 명 대(對) 120만여 명, 전차 수는 2,400여 대 대 4,300여 대, 전투함정 수는 110여 척 대 430여 척, 전투기는 400여 대 대 820여 대로, 단순개수비교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우월하다. 『2014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4), p. 239. 남북한 간 군사적 능력에 관하여, 2013년 11월 5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국회 질의에서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이 1대1로 싸우면 진다”고 답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군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충분히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한국일보』, 2013.11.7.

<sup>185)</sup>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사실과 평가방법,”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 (1997), pp. 27~60; 함택영, “북한 군사력 및 군사위협 평가 재론,” 『현대북한연구』, 제7권 3호 (2005), pp. 53~96; 이정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 (2014), pp. 296~331.

I
II
III
IV
V
VI
VII

평가 지표로서 군사비 투자 규모를 사용해왔다.<sup>186)</sup> 예를 들어, 함택영은 군사비 지출액이 “일국의 무장력을 위한 인적·물적·조직적 역량에 투자한 ‘요소비용의 총계’로서,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임을 강조한다.<sup>187)</sup> 군사비 규모로 평가할 때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88)</sup>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WMEAT 2015)에 의하면 2002년 기준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의 약 5배에 가까우며, 2012년에는 약 9배를 넘어섰다(〈표 IV-1〉 참조). 더욱이 전쟁 수행 능력을 잠재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력의 격차가 2012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약 77배에 달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남한의 재래식 군사 능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89)</sup>

표 IV-1 남북한 간 군사비 지출 비교, 2002-2012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한	군사비	19.4	20.1	21.1	23.3	24.7	25.8	28.0	29.7	30.2	31.9	32.5
	GDP	840.0	865.0	907.0	942.0	991.0	1,050.0	1,080.0	1,080.0	1,150.0	1,200.0	1,220.0
	GDP 대비 군사비 (%)	2.31	2.32	2.33	2.47	2.49	2.46	2.59	2.75	2.63	2.66	2.66
북한	군사비	3.9	4.0	3.6	3.7	3.7	3.7	3.8	3.4	3.4	3.5	3.5
	GDP	14.5	14.8	15.1	15.7	15.5	15.3	15.8	15.7	15.6	15.7	15.9
	GDP 대비 군사비 (%)	26.90	27.03	23.84	23.57	23.87	24.18	24.05	21.66	21.79	22.29	22.01
남북한 간 군사비 비율 (남/북, %)	497.44	502.50	586.11	629.73	667.57	697.30	736.84	873.53	888.24	911.43	928.57	

주 1) 이 표는 2015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 군사비 및 무기이전에 관한 보고서

<sup>186)</sup> 함택영과 이정우 이외에 현인택의 연구에서도 군사비 지출 규모가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 가지는 유효성이 강조된다. 현인택, 『한국의 방위비』 (서울: 한울, 1991).

<sup>187)</sup> 함택영, “북한 군사력 및 군사위협 평가 재론,” p. 80.

<sup>188)</sup> 위의 글, pp. 56~59.

<sup>189)</sup> 이정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 pp. 299~302.

(WMEAT: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5 Edition)에 근거함.<sup>190)</sup>

2) 군사비 지출액 및 국내총생산액(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모두 2012년 미국 달러 불변가치(constant 2012 US \$, billion)로 기록됨.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2016년 기준 약 7~28개의 핵무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재래식 군사 능력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핵무기는 북한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대칭적 핵보유가 한반도 내 군사력 분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재래식 무기가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핵무기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역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sup>191)</sup> 그러나 전시에 파괴할 수 있는 범위 및 파괴의 속도 측면에서 여전히 재래식 무기의 '효율성'은 핵무기에 비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92)</sup> 더욱이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거대한 버섯구름, 방사능 피폭, 그리고 황폐화된 도시 등의 이미지로 각인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위협까지 가중시킨다.<sup>193)</sup> 북한의 종합적 군사력은 핵 능력 고도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남북한 간 군사력 비교에서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할 것은 미국에

<sup>190)</sup>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5 Edition," (U.S.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2015). <http://www.state.gov/t/avc/rls/rpt/wmeat/2015/index.htm> (2016년 8월 3일).

<sup>191)</sup> William J. Perry, "Desert Storm and Deterrence," *Foreign Affairs*, vol. 70, no. 4 (1991), pp. 66~82; Michael S. Gerson, "Conventional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Parameters*, vol. 39, no. 3 (2009), pp. 32~48.

<sup>192)</sup> Alyssa Demus, "Conventional versus Nuclear: Assessing Comparative Deterrent Utilities,"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ugust 25, 2012), pp. 1~25.

<sup>193)</sup> *Ibid.*

I
II
III
IV
V
VI
VII

의한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제공이다. 확장핵 억지는 제공자의 동맹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보복위협을 통해 적국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94)</sup> 미국은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연례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처음 명문화 한 이래 매년 SCM에서 확장핵억지 제공을 확인해왔으며, 이는 단순히 동맹국 안보 차원 또는 시혜적 차원이라기보다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에 따른 대가이다.<sup>195)</sup> 확장핵억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그 신뢰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sup>196)</sup> 특히, 퍼만(Fuhrmann)과 세셔(Sechser)의 최근 연구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비핵국가가 핵보유국과 군사동맹을 맺을 때 유의미한 억지의 혜택을 얻게 되는 반면, 자신의 영토에 동맹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억지력이 더 강화되지는 않는다는 경험적 발견을 제시하면서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sup>197)</sup> 따라서, 미국의 확장핵억지는 남북한 간 군사력 비교에서 북한이 가지는 비대칭적 핵 능력의 장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쇄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재래식 군사력과 핵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군사적 능력의 계량적 비교·분석이 쉽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194) 전성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p. 3.

195) 위의 글, pp. 125~131; 전호원,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2호 (2008), pp. 29~57.

196) 예를 들어, Paul K. Huth, “The Extended Deterrent Value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2 (1990), pp. 270~290.

197)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2014), pp. 919~935.

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 군사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의 분포가 역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재래식 군사력의 평가 지표로서 군사비 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 남한이 북한의 9배 이상이며, 잠재적으로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에 있어서도 남북한 간 격차는 77 배에 달한다. 그리고 미국의 확장핵역지는 북한의 핵보유의 잠재적 이점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킨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이전 시기 남한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던 군사적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신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남북한 간 군사력 격차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서, 이 글에서 이후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력의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과거에 비해 균형 상태에 가까워 졌다고 전제한다.

### 3.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남북한 간 군사력의 분포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남북관계 변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국가 간 힘의 분포 변화 또는 핵 지위 변화와 군사적 분쟁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관한 추론을 제시하고, 그 추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I
II
III
IV
V
VI
VII

## 가.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추론

상대적 군사력을 핵심으로 하는 힘의 분포가 군사분쟁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제정치의 오랜 논쟁 사안이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전형적인 주장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국가들의 힘이 균형상태에 있을 때 또는 균형에 가까워질 때 전쟁 혹은 군사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sup>198)</sup> 주된 이유는 힘의 균형 상태에서는 전쟁을 통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전쟁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와 상반되는 주장은 국가 간 힘의 격차가 클 때 군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으로, 핵심적인 논리는 힘의 불균형 상태가 전쟁 혹은 군사분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므로 국가들은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서 전쟁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sup>199)</sup> 후자와 유사한 이론으로서, 특히 세력전이 이론은 힘의 균형이 전쟁 발생 가능성을 조건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데, 그 조건은 적어도 한 국가가 가지는 국제체제 혹은 관계의 현상유지(status quo)에 대한 불만이다.<sup>200)</sup> 이 이론에 따르면, 체제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있더라도, 힘의 격차가 뚜렷한 상태에서는 군사분쟁의 가능성이 적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남북한 간 힘의 분포가 균형상태에 보다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주장들은

---

<sup>198)</sup>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Kenneth M.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sup>199)</sup> Geoffrey Blainey, *The Causes of War*, Third ed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William Reed, David H. Clark, Timothy Nordstrom, and Wonjae Hwang, "War, Power, and Bargaining,"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4 (2008), pp. 1203~1216.

<sup>200)</sup>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Woosang Kim and James D. Morrow, "When Do Power Shifts Lead to W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4 (1992), pp. 896~922.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에 관한 상반된 추론을 낳는다. 즉, 북한의 핵 고도화는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조시킬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전망하기 위한 보다 더 의미 있는 추론은 국가쌍(dyad)을 분석단위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통해 가능해지는데, 그 연구들은 두 국가 사이의 힘의 분포가 균형에 가까울 때, 군사분쟁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sup>201)</sup>

국가쌍을 분석단위로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욱 특화된 분석단위인 숙적관계(rivalry)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sup>202)</sup> 그 결과는 특히 남북한이 바로 그러한 숙적관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의 전망을 추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겔러(Geller)는 1816년부터 1986년까지 국제체제에서 모든 숙적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힘이 압도적일 때에 비해서 두 국가가 힘의 균형 상태에 있을 때 또는 균형 상태에 가까워질 때에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약 두 배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한다.<sup>203)</sup> 이러한 발견은 숙적관계의 지속 또는 종결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도 대체로 부합된다. 바스케즈(Vasquez)는 두 국가의 힘의 격차가 크다면 약한 쪽이 군사적 갈등/긴장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숙적관계는 두

<sup>201)</sup> 예를 들어, John R. Oneal and Bruce D. Russett, "The Classic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2 (1997), pp. 267~293.

<sup>202)</sup> 숙적관계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호간에 잦은 군사분쟁(militarized dispute)을 경험하는 양자관계로 정의되며, 기간 및 분쟁 발생의 빈도에 따라서 초기적 숙적관계(proto rivalry), 지속적 숙적관계(enduring rivalry)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Paul F. Diehl and Gary Goertz,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sup>203)</sup> Daniel S. Geller, "Power Differentials and War in Rival Dyads."

I
II
III
IV
V
VI
VII

국가의 힘이 동등한 수준에 있을 때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sup>204)</sup> 여기서 숙적관계의 지속은 그 자체로 군사적 분쟁 또는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스케즈 이외에도 여러 기존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sup>205)</sup>

학자들은 또한 국가들의 핵 지위 변화 또는 핵보유 여부가 군사적 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탐구해왔다. 그 영향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존재한다. 어떤 학자들은 핵무기의 확산이 고유한 억지력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주장, 즉 핵확산이 우연, 오인, 또는 예방 목적 등에 의한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면서 국가 간 재래식 분쟁 혹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한다.<sup>206)</sup>

<sup>204)</sup> John A. Vasquez, "Distinguishing Rivals that go to War From Those That Do Not: A Quant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Two Paths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 4 (1996), pp. 531~558.

<sup>205)</sup> 예를 들어, William R. Thompson, "Explaining Rivalry Termination in Contemporary Eastern Eurasia with Evolutionary Expectancy Theory," *Montreal: REGIS Working Paper*, no. 17 (2005), pp. 2~3; James P. Klein,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The New Rivalry Dataset: Procedures and Pattern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3 (2006), pp. 331~348. 기존의 모든 연구들이 두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베넷(Bennett)은 힘의 균형/불균형과 숙적관계의 지속 또는 종결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ennett, "Security, Bargaining, and the End of Interstate Rivalry."

<sup>206)</sup> 낙관론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왈츠(Waltz), 미어샤이머(Mearsheimer) 등이 있으며, 비관론자로는 저비스(Jervis), 세이건(Sagan) 등이 있다. Kenneth N. Waltz,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4, no. 3 (1990), pp. 731~745; John J. Mearsheimer,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3 (1984), pp. 19~46; Robert Jervis, *The Il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Scott D. Sagan, "The Perils of Proliferation: Organization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4 (1994), pp. 66~107.

핵확산이 가질 수 있는 효과에 관한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온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 주지는 않는다. 핵무기가 재래식 군사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전형적인 억지론을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지지하는 반면,<sup>207)</sup> 가르츠크(Gartzke)와 조동준(Dong-Joon Jo)은 핵확산의 군사분쟁 가능성에 대한 효과는 미약하거나 또는 부재하다고 주장한다.<sup>208)</sup> 가르츠크와 조동준의 연구는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비해서 군사분쟁의 개시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거나 또는 더 낮다는 증거가 없으며, 대신 핵무기는 보유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209)</sup>

하지만 핵 비대칭 국가쌍(asymmetric nuclear dyads)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핵무기가 군사적 위기, 특히 저강도 분쟁(low-level conflict)의 발생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라우카우스(Rauchhaus)는 모든 국가쌍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둘 중 한 국가만 핵보유국인 비대칭 조건에서는 저강도 분쟁과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sup>210)</sup> 라우카우스가 이용한 자료에서 누락된 사례들을 포함시켜

<sup>207)</sup> 예를 들어, Bruce Bueno de Mesquita and William H. Riker. "An Assessment of the Merits of Selective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6, no. 2 (1982), pp. 283~306; Paul K. Huth and Bruce Russett, "General Deterrence between Enduring Rivals: Testing Three Competing Mode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1 (1993), pp. 61~73.

<sup>208)</sup> Erik Gartzke and Dong-Joon Jo,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s."

<sup>209)</sup> *Ibid.*

<sup>210)</sup> Robert Rauchhaus,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vol. 53, no. 2 (2009), pp. 258~277. 여기서 전쟁은 정규전을 통해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I
II
III
IV
V
VI
VII

더욱 정교한 통계적 분석법을 적용한 벨(Bell)과 밀러(Miller)의 최근 연구는 두 국가 간 핵 비대칭 조건에서 핵보유국이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국가가 저강도 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sup>211)</sup> 이러한 경향성은 자신의 핵능력이 상대국의 보복적 공격을 차단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 연구는 상대국(핵무기 미보유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우월할 경우에는 핵보유국이 저강도 분쟁의 개시자가 될 것 같다는 증거가 없다는 흥미로운 발견을 함께 제시한다.<sup>212)</sup>

선행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남북 간 군사적 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추론의 제시를 도울 수 있다. 두 국가 사이에 군사력 격차가 감소하거나 힘의 분포가 균형에 가까워질 때 군사적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한반도에 적용할 때 우리는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핵확산 또는 핵 지위 변화 자체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에 부합하는 핵 비대칭 조건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북핵 고도화가 남북 간 재래식 군사위기 또는 저강도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남한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 능력을 고려하면, 벨과 밀러의 연구가 함의하듯이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반드시 높아졌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

<sup>211)</sup> Mark S. Bell and Nicholas L. Miller. "Questioning the Effect of Nuclear Weapons on Conflict."

<sup>212)</sup> *Ibid.*

## 나. 경험적 분석과 전망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추론은 최근 남북한 관계의 관찰을 통해 실증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립변수는 북핵 고도화 및 그에 따른 남북한 간 군사력 변화이며 종속변수는 남북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다. 따라서 경험적 분석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2013년 초 3차 핵실험 이후와 그 이전의 남북관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3년을 북핵 고도화의 시점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가 실제적 위협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이 3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에 관한 연도별 현황 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국방부가 발표한 『2014 국방백서』에 근거하며, 경미하게는 북한 어선의 NLL(Northern Limit Line) 침범부터 심각하게는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분명한 위기상황을 포괄한다. 『2014 국방백서』는 국지도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으며, 2010년 이전의 국지도발은 연례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제시되는 모든 국지도발을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외에 사용가능한 대안적 자료는 부재하기에 본 연구는 국방부의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다.<sup>213)</sup>

2010년대에 국한시켰을 때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은 한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그 특징은 2010년 이후에 국지도발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sup>213)</sup> 대안으로서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하는 『군사정전위원회편람』의 정전협정위반 사례 집계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편람이 제공하는 사례는 2009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합동작전본부 군정위연락단 편,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8집』(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pp. 227~272.

I
II
III
IV
V
VI
VII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 도발 횟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IV-2〉 참조).

이러한 추세의 한 가지 해석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추론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고도화 및 남북한 간 군사력 격차 감소로 인해 한반도에서 더욱 빈번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핵능력과 군사력의 강화에 힘입어 북한은 자신이 저강도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남한이 보복공격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에 근거한다.

**표 IV-2** 1990년 이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현황

국지도발 유형	90년대	0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8	276	10	18	21	29	45
군사분계선 월선	8	10	0	0	0	0	4
지상 총·포격 도발	17	12	2	0	0	0	2
북한 경비(단속)정 NLL 침범	101	110	2	5	2	9	11
북한 어(상)선 NLL 침범	3	115	2	12	17	19	15
포격 및 소규모 해전	11	2	3	1	0	0	2
영공 침범	0	2	0	0	0	0	4
기타	28	25	1	0	2	1	7

주) 이 표에 기재된 자료의 출처는 『2014 국방백서』.<sup>214)</sup>

그러나 국지도발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일 수 있다. 『2014 국방백서』의 구체적 사례 기술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증가된 대남 국지도발의 상당수는 북한의 NLL 침범이며, 이 경우

<sup>214)</sup>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255.

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경고통신 이후 북상 조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마무리 되었다. 더욱이 NLL 침범의 적지 않은 사례들은 북한의 경비정이 아닌 어(상)선에 의한 월선이며, 이를 군사적 위기로 간주하는 것도 과도한 판단일 수 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라 대남 국지도발이 격화되고 군사적 위기가 증폭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2010년 이전 10년 간 북한의 연평균 대남 국지도발 횟수가 27.6으로서 2013년과 비슷하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2014년의 경우 비무장지대 또는 NLL 인근에서의 수차례의 총·포격 도발 및 소규모 해전이 기록되지만, 이 사례들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평가되기 어렵다. 『2014 국방백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군사적 위기로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을 들 수 있다.<sup>215)</sup>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전 및 핵실험 이전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다른 위기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은 핵 고도화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2010년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심각한 군사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그리고 핵실험 이전인 1999년과 2002년에 발생한 1차, 2차 연평해전도 뚜렷한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군사분쟁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에 관한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는 양자관계에 있어서 군사력 균형 상태로의 근접 또는 핵 비대칭 조건이 군사적 위기를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한반도에는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그에 따른 남북한 간 군사력 격차 감소가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혹은 저강도 분쟁 도발을 촉진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sup>215)</sup>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함.

I
II
III
IV
V
VI
VII

이와 같이 선행연구로부터의 추론과 상이한 분석결과는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 한국의 우월성과 관련될 수 있다. 벨과 밀러는 상대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우월할 경우에는 핵보유국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분쟁을 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sup>216)</sup>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잘 설명한다.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핵 비대칭 조건에서도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억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이 분석결과는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도 관련될 수 있다. 학자들 사이의 통념적 견해(conventional wisdom)는 북한이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도모, 즉 생존을 위한 억지전략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며,<sup>217)</sup> 북한이 인식하는 주된 외부 위협은 미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은 북핵 고도화와 대남 군사적 국지도발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시작된 지 오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군사분쟁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경험적 분석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관찰

<sup>216)</sup> Mark S. Bell and Nicholas L. Miller. "Questioning the Effect of Nuclear Weapons on Conflict."

<sup>217)</sup> 이러한 주장은 왈츠(Waltz)를 비롯한 여러 해외 학자들뿐 아니라, 국내의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2016년 8월 통일연구원이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관련 국내 학자/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9명(70%)이 "북한이 체제 유지, 방어를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체로 또는 매우 동의했다. 신중호 외, 『전환기 남북관계 도전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근간).

가능한 분석기간이 북핵 고도화가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전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한계는 향후 수년 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선행연구가 함의하듯이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가 더 빈번하게 또는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남북한 간 군사적 분쟁을 촉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전망은 북핵 고도화 시점을 2013년으로 삼고 관찰 가능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분석기간의 한계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로부터의 추론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4. 교섭능력의 변화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때 두 국가는 종종 교섭 혹은 협상의 기회를 가지며, 그 교섭에서 누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군사적 위기는 둘 중 한쪽의 교섭능력이 강할 때 물리적 충돌 없이 강한 쪽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해소될 수도 있다. 교섭능력의 우열을 가르는데 있어서 양자 간 군사적 능력의 분포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북한의 핵 고도화 및 한반도 내 군사력 분포의 변화가 종속변수인 남북한 간 교섭능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추론하고,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I
II
III
IV
V
VI
VII

## 가.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추론

양자 간 위기교섭 능력에 있어서 군사력 변수의 작용방식은 앞에서 검토했던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때와는 조금 다르다. 군사적 위기 발생 여부가 힘의 분포가 균형에 가까운지 또는 격차가 큰 불균형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교섭능력은 조금 더 단순하게 누가 더 힘이 강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자 간 힘의 분포와 교섭능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둘 중 힘이 더 강한 국가가 더 큰 교섭능력을 가진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sup>218)</sup>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논리는 한 국가가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할 때 그 국가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무력분쟁에 이를 정도의 더욱 ‘신뢰도 높은’ 위협(credible threat)을 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군사력에서 열세에 있는 국가는 자신의 요구조건을 철회하거나 요구의 수준을 낮추면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up>219)</sup> 결국, 이 논리는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신뢰도 높은 위협을 가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교섭 과정(bargaining process)에서 더 큰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력 분포가 가지는 교섭능력에 대한 효과가 단순하고 뚜렷한 반면, 군사력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한 핵무기 보유 자체의 효과는 그렇지 않다. 어떤 학자들은 핵능력이 교섭능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

<sup>218)</sup> 예를 들어, Paul Huth and Bruce Russett, “What Makes Deterrence Work? Cases from 1900 to 1980,”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96~526; Paul Hut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8); Robert A. Pape, “Coercive Air Power in the Vietnam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2 (1990), pp. 103~146; James D. Fearon,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2 (1994), pp. 236~269.

<sup>219)</sup> Fearon,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있다고 주장하지만,<sup>220)</sup> 다른 학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sup>221)</sup> 핵심적 논점은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억지(deterrence)의 강화를 넘어서 강압(compellence) 능력이 증가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sup>222)</sup>

위기 협상에 있어서 핵무기의 이점을 강조하는 논리는 핵무기가 가지는 고유한 파괴력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군사적 우월성이 교섭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갈등상태에 놓여있을 때, 핵무기 미보유국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분쟁의 예상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따라서 교섭과정에서 양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up>223)</sup> 즉, 핵보유국은 국제관계에서, 특히 핵무기 미보유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우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224)</sup> 예를 들어, 비어드슬레이(Beardsley)와 아살(Asal)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00년까지 국가 간 모든 군사적 위기 상황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핵비대칭 관계에서 핵보유국이 상대국에 대해 우월한 교섭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면서 핵무기가 강압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sup>225)</sup>

<sup>220)</sup> Gartzke and Jo,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s."; Beardsley and Asal, "Winning with the Bomb."

<sup>221)</sup> Sechser and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sup>222)</sup> 강압과 억지는 모두 군사력에 기초하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다. 강압은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의 상황(status quo)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며, 억지는 상대국이 현재 상황의 변경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노력이다. Walter J. Petersen, "Deterrence and Compellence: A Critical Assessment of Conventional Wisd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0, no. 3 (1986), pp. 269~294.

<sup>223)</sup> Beardsley and Asal, "Winning with the Bomb."

<sup>224)</sup> Gartzke and Jo,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s."

<sup>225)</sup> Beardsley and Asal, "Winning with the Bomb."

I
II
III
IV
V
VI
VII

그러나, 이 주장은 세셔와 퍼만의 연구에 의해 반박된다.<sup>226)</sup> 그들은 핵무기가 억지력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 강압능력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강압수단으로서 핵무기가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핵무기의 실제 사용은 (강압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목표마저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up>227)</sup> 강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은 종종 특정한 지리적 공간 또는 영토와 관계되는데, 핵무기는 그것이 가지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공격 대상 지역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sup>228)</sup> 둘째, 어느 국가든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받게 되는 국제적 비난, 제재, 또는 군사적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난, 제재, 반격으로 인한 손실은 핵무기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sup>229)</sup> 핵무기는 역사상 1945년 8월에 두 차례 밖에는 사용된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세셔와 퍼만은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양자 간 교섭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핵무기는 강압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핵무기가 교섭 능력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230)</sup> 세셔와 퍼만과 유사하게 겔피(Gelpi)와 그리스도르프(Griesdorf)의 연구도 핵무기가 상대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갖지만, 자신이 현상타파를 하기 위해, 즉 강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sup>226)</sup> Sechser and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sup>227)</sup> *Ibid.*, p. 177.

<sup>228)</sup> 예를 들어, 만약 인도가 파키스탄과 영토분쟁 중인 캐쉬미르(Kashmir)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며, 인도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 *Ibid.*, p. 177.

<sup>229)</sup> *Ibid.*, p. 177.

<sup>230)</sup> 세셔와 퍼만은 핵위협은 단지 해당 국가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때 신뢰할만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핵무기는 억지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가능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Ibid.*, pp. 177~178.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sup>231)</sup>

지금까지 검토한 교섭능력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이 우월한 국가는 더 강한 교섭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핵보유는 반드시 그러한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가지는 가공할 파괴력은 상대국가의 잠재적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핵보유국의 교섭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파괴력이 핵무기의 실제적 사용 가능성을 - 생존 위협에 직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희박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교섭능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북핵 고도화가 초래하는 위기교섭능력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우선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종합적 군사력에서 남한이 여전히 북한에 비해서 우월하므로, 남한의 교섭능력이 북한보다 우월할 것 같다. 둘째, 핵 개발로 인해 북한의 군사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신장됨에 따라 북한의 교섭능력은 과거에 비해서 신장됐을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적 군사력의 우열과는 관계없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한 교섭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추론과 더불어 북핵 고도화가 남한 대비 북한의 상대적 교섭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상반된 추론을 함께 도출할 수 있다. 어떤 추론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남북한 관계의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

---

<sup>231)</sup> Christopher F. Gelpi and Michael Griesdorf, "Winners or Losers? Democracies in International Crisis, 1918-9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2001), pp. 633~647.

## 나. 경험적 분석과 전망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상대적 군사력 변화가 남북한 간 위기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표적인 남북 간 군사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및 이후 남북교섭을 분석하고자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그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 고조된 이후, 협상의 과정을 통해 타결된 전형적인 사례로서(〈표 IV-3〉 참조), 북핵 고도화 이후 남북 간 교섭능력의 변화를 검토하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북한의 핵보유 및 군사력 증대와 남북 간 교섭능력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사태 수습과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message)를 함께 보냈으며, 고위당국자 접촉을 먼저 제안했다. 둘째, 한국은 북한의 군사행동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8·25합의 이전에는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셋째, 협상과정에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핵심적 논쟁거리였지만, 결국 북한은 한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표 IV-3**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사건 및 남북협상 일지

날짜	주요 진행 사항
8월 4일	· 서부전선(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수색 중 목함지뢰 폭발로 한국군 2명 중상
8월 10일	· 한국 합동참모본부,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 ·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 유엔군사정전위원회, 북한에 장성급회담 제의, 북한의 거부

날짜	주요 진행 사항
8월 11일	· 청와대, 목함지뢰매설을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합의 위반 규정, 책임자 처벌 촉구
8월 13일	· 유엔군사정전위원회, 북한에 장성급회담 2차 제안, 북한의 거부
8월 15일	· 북한, 확성기방송 중단 공식 요구, 이행하지 않을 시 군사행동 전개 경고
8월 17일	· 한국과 미국, (이미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훈련 개시
8월 20일	· 북한, 오후 4시경, 남한 연천군 야산 및 군사분계선 남쪽에 각각 고사포 1발, 직사화기 3발 포격 · 북한, 오후 4시 50분, 48시간 이내 확성기방송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 개시에 관한 전통문 및 사태수습과 관계개선 위한 의사 표명 전통문 동시 발송 · 한국, 오후 5시 4분,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에 자주포 29발 포격 · 한국, 오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대북확성기 방송 지속 방침 밝힘 · 북한, 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소집,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 요구 및 미이행 시 군사행동 개시 최후통첩
8월 21일	· 한국, 북한의 포격도발을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 합의 위반 규정,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및 대응책 논의 · 북한, "21일 또는 22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하자"는 통지문 발송 · 한국, "대상자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하자"는 통지문 발송
8월 22일	· 북한, 2대2(북은 황병서, 김양건, 남은 김관진, 홍용표) 접촉 제안 통지문 발송 · 한국, 북한 제안 수용, 당일 오후 6시에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제안 · 2+2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
8월 25일	·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및 6개항 합의문 발표

주) 이 표는 『뉴시스』 보도에 근거함.<sup>232)</sup>

핵 비대칭 조건에서 양자 간 교섭능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한 가지 추론은 핵능력 진전으로 인해 북한의 강압이 용이해짐에 따라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함지뢰 사건은 이러한 추론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sup>232)</sup> “北 지뢰도발부터 南北 협상 타결까지,” 『뉴시스』, 2015.8.2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5\\_0010245012&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5_0010245012&cID=10301&pID=10300)>. (검색일: 2016.8.28.).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이 군사행동 개시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사태수습 및 관계개선에 대한 의사를 함께 전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확전에 따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신뢰도 높은’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목함지뢰도발이 발생한 8월 4일부터 양측이 협상을 타결 지은 8월 25일까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성명 어디에도 남한에 대한 핵무기 타격 위협은 언급되지 않았다.<sup>233)</sup>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여러 기관 명의의 성명서에서 핵과 관련한 언술은 단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핵 전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이라는 북한의 요구가 (8·25합의 이전에는)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북한이 비대칭적 핵능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남한보다 우월한 교섭능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및 이후 남북협상의 사례는 북한의 핵무기가 강압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한 교섭능력을 가지도록 기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검토한 세셔와 퍼만의 연구결과에 부합한다. 핵무기가 역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만, 강압을 위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는데, 그 이유는 핵무기가 가지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타격대상 지역 점령을 통해 이득을 얻기 어렵고, 감당해야 할 비용은 막대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한 사용가능성이

<sup>233)</sup> “조선인민군 전선연합부대들의 공개담화,” 『조선중앙통신』, 2015.8.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8.15;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조선중앙통신』, 2015.8.1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5.8.16;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5.8.19. 8월 15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의 공개경고장에 “우리의 군사행동은 있을 수 있는 도전과 확전까지 예견한 무차별적인 타격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타 성명서들과 종합해서 해석할 때 이를 핵공격 위협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희박하다는 사실을 교섭 당사자들이 모두 인식하기 때문이다.<sup>234)</sup> 또한 앞서 도출한 다른 추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남한의 종합적 군사력이 북한을 앞선다는 점도 북한이 우월한 위기교섭능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사례는 또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 증대가 북한의 교섭능력을 ‘과거에 비해’ 신장시킬 것이라는 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고위당국자 간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sup>235)</sup> 이 조항은 한국 정부 당국에 대한 직접적 유감 표명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 스스로 이 협상을 ‘승리’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경우를 제외하면 과거에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sup>236)</sup> 따라서, 북한의 교섭능력이 핵 개발 또는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력 증대 이전과 비교하여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즉, 군사력의 증대가 강압을 용이하게 하여 교섭능력의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로부터의 추론이 남북한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목함지뢰 사건은 남북한 관계에서 양자 간 상대적 교섭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례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북핵 고도화가 북한의 남한 대비 상대적 위기교섭능력을 강화하지는

<sup>234)</sup> Sechser and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sup>235)</sup> 2015년 8월 25일 합의된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의 6개 조항 전문은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ikorea.go.kr>> (2016.8.8.).

<sup>236)</sup> “북한 ‘유감 표명’ 수준은.. ‘이례적, 의미있는 성과’”, 『연합뉴스TV』, 2015.8.25., <<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50825011600038&input=1825m>>. (검색일: 2016.8.26.).

I
II
III
IV
V
VI
VII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즉 핵능력 고도화가 북한의 대남 강압전략을 용이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핵 개발에 따른 군사력 증대가 북한의 교섭능력을 과거에 비해 신장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러한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하나의 사례에 의존한 것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북핵 고도화 이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사례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한 간 위기상황에서 반드시 목함지뢰 사건과 유사하게 교섭의 과정이 전개되리라는 법은 없으며, 북한이 비대칭적 핵능력을 대남 강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 이후 남북한의 교섭능력 변화에 대한 사실상 첫 분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역지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남한에 대한 강압수단으로서 교섭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 결과는 향후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의 전략 구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교류 및 협력의 전망

양자 관계에서 한 국가의 비대칭적 핵전력 또는 군사적 균형으로의 근접은 양자 간 재래식 군사분쟁 또는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이 존재한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핵비대칭 관계에서 핵무기는 상대국에 대한 강압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들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향후 남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내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 및 위기교섭능력 변화와 관련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위와 같은 주장이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대남 국지도발을 촉진함으로써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뚜렷한 경험적 증거는 없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핵 고도화가 북한의 대남 강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섭능력을 강화한다는 증거도 아직까지는 부재한 것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한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 및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에 의해 지지되며, 또한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대남 군사적 도발 또는 대남 강압 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체제보전을 위한 억지에 있다는 주장과도 부합된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및 대남 강압을 촉진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전망이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예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교류 및 협력의 전망과 관련하여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보딜레마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무력증강이 상대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7)</sup> 안보딜레마의 발생을 한반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남한에 대한 실제적인 공세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남한을 위협하고 남북한 간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며 그에 따라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보딜레마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준도 다양할 수 있다. 저비스(Jervis)에 따르면, 공격과 방어 중에 무엇이 더 큰 이득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방어를 위한 무기와 정책이 공격을 위한 것과 구분되는지에 따라 안보딜레마의 수준은 심각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수

<sup>237)</sup>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1978), pp. 186~187.

I
II
III
IV
V
VI
VII

있다.<sup>238)</sup> 팽창을 통해 안보를 추구할 때 안보딜레마의 발생은 명약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가 공격보다 더 큰 이득을 낳으며 무력증강의 주된 목적이 방어일 때 한 국가의 안보는 타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지 않을 수 있다.<sup>239)</sup> 저비스는 특히 방어의 이득이 공격보다 크며 국가들의 군사력이 동등한 수준에 가까울 때, 안보딜레마가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할 가능성은 감소하며, 침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지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40)</sup>

본 연구의 분석은 북한 핵무기의 주된 목적이 공격보다는 체제 방어를 위한 억지일 것이라는 통설을 지지하며, 북한에게 있어서 체제의 존속이라는 억지의 이득이 공격을 통한 현상타파가 제공할 이득을 능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저비스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북핵 고도화로 인한 안보딜레마가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구속하는 수준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즉, 북핵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핵 고도화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인 또는 우발적 요인 등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북핵 개발의 의도와 목적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안보딜레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핵화 목표는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안보딜레마의 논리에 포획되어 남북관계의 개선 및 교류·협력의 여지를 부정하거나 그 과제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다. 비핵화와 교류·협력을 반드시 대치되는 정책으로 간주

---

<sup>238)</sup> *Ibid.*

<sup>239)</sup> *Ibid.*

<sup>240)</sup> *Ibid.*

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이 매우 축소되거나 사실상 부재한金正은 정권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2016년 3월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 제재 효과의 중요한 지표인 북중 간 교역 규모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16년 8월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의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전공 학자/전문가 70명 중에서, 51명(약 73%)이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교류 및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혹은 매우 동의했다.<sup>241)</sup> 핵 비대칭 관계에서도 교류·협력의 지속은 긴장완화 및 평화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242)</sup>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위협이지만, 그 위협에 대한 과도한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 핵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강압 및 군사적 위기 촉발은 여전히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며, 생존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군사적 위협에 대한 단일한 인식은 금물이며 ‘튼튼한 안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과도한 위협인식은 국력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여 국가이익을 훼손하고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VI
VII

<sup>241)</sup> 신중호 외, 『전환기 남북관계 도전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sup>242)</sup> Jin Myung Lee, “Is Liberal Peace Likely in Nuclear Asymmetr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no. 1 (2015), pp. 29~61.



# V. 한국에 대한 파급영향

고봉준(충남대학교)





## 1. 도입

제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즉 핵 국가로 공인되고 있는 다섯 나라와 그 외 비공인 핵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폭탄과 투발수단의 결합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핵무장을 법제화하고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하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며 핵무기 소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략군을 창설함으로써, 북한은 그간 주장해온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단계적 대응과 아울러 중장기적 대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최근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 유례없는 강도의 경제 제재 등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는 이런 수단만으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저지하거나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불안정은 더욱 고조되고 따라서 통일의 전망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한국에 미칠 다차원적인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적 토론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여 결과적으로 핵무장을 완성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근본적인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이는 그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당파적 갈등과 맞물려 이념 또는 관점에 따라 정치·사회적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이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군사도발을 강화하거나 한반도 불안정을 의도적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I
II
III
IV
V
VI
VII

한국으로서도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체계적이고 국가전략과 합치되는 대응방안보다 조급하고 단기 처방적이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할 위험성도 생긴다.

아울러 차원이 달라지는 북핵문제는 그간의 비핵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외교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한국에 대내외적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장은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의 편의상, 정치·외교 분야, 군사·안보 분야, 그리고 사회·경제 분야로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정치·외교 분야

### 가. 정치적 영향: 실효적 대안에 대한 요구 증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주장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그 일환의 하나로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또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비확산 체제의 당사자로서 비핵정책을 견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핵무장론을 경계하던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핵옵션 주장이 확산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sup>243)</sup>

---

<sup>243)</sup> 그런 이유는 북한의 행보로 보아 북한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고, 그렇다면 임시 처방 외에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전문가 그룹서도 ‘핵무장론’...정성장 “실보다 득이 많

전반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핵옵션에 대한 여러 주장이 향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sup>244)</sup>

이는 결국 지난 20년간의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피로감 증대와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획기적이고 실효적 대안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북한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결국 핵무장한 북한을 가정한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공론화의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향의 정치적 고려가 진행될수록 실효성 있는 통일정책과의 연결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직면한 한국이 북한의 핵능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방법에 대한 정치적 토론과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다만 이런 노력은 각 대안들의 효율성과 현실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의 비확산 정책 추진을 고려할 때 핵 옵션의 본격적 추진은 한국의 입장에서 과도한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핵우산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

다.” 『연합뉴스』, 2016.1.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2/0200000000AKR201601120770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5.30.). 참조.

<sup>244)</sup>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국방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한 언론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미군의 전술핵무기 한·미 공동 운영하자.” 『중앙시사 매거진』, 201607호, 2016.6.1.,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1963>>. (검색일: 2016.7.20.). 참조.

I
II
III
IV
V
VI
VII

핵사용을 억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그렇다고 독자적 핵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핵우산과 관련된 한미동맹의 공조 강화와 동시에 한국의 대북 억지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한국을 사정권 내에 두고 있는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형화가 진행된 핵탄두를 여기에 탑재하여 한국에 대해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무장을 통해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고도화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모두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보통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을 견뎌낼 수 있는 기술 등을 포함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의 구현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난점을 북한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한국은 이미 북한의 핵공격 가능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공격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핵 옵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령 한국이 자체 핵 옵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핵우산보다 북한에 대해 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근거를 이론적·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체계적 주장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가 결국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미동맹의 억지 이행지침 등을 도출한 상황

이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sup>245)</sup> 또한, 정치적으로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분위기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주한미군의 확장억지력 보호와 한국 내 전략적 자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급한 조치라는 주장이 일정 정도의 설득력을 획득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드만 가지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외에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을 충분히 염두에 둔 억지력의 제고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향후에 지속적인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이 선제타격과 KAMD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지상 이동형 KN-08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구현하는 경우 배치가 예정된 사드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사드’는 일종의 거부적 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가운데 부수적인 안보이익이 있다는 주장보다는, 중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과 북한이 억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한 전면적 고려를 통해 거부적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하여 사드 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의 도출 과정에서 국내 정치 세력 간 적절한 대응책과 보다 광범위한 대북·통일 정책을 둘러싼 당파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 북한

<sup>245)</sup> 한미 양국 정상은 2016년 9월 6일 아세안 정상회의 회동에서 확장억지를 북한에 대한 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북한 핵능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미정상, 사드·확장억제로 강력한 억지력 유지... 중 역할 중요.” 『연합뉴스』, 2016.9.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6/0200000000AKR20160906194900001.HTML>>. (검색일: 2016.9.6.).

I
II
III
IV
V
VI
VII

으로부터의 급증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간극의 문제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그간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과 결부되어 북한의 도발과 고도화하는 핵능력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었던 처방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기조로 한 신중한 대북 정책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도발 억지 및 강력한 대응을 기조로 한 정책적 처방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여전히 희망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주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치적 간극은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해왔고 결국 사회적 균열구조(social cleavage)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적 균열구조란 사회공동체 내의 구성원 및 집단들 사이에 형성되어 내재되는 정치적·사회적 대립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립관계가 정치체제에 반영되어 집단 간 갈등과 경쟁의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sup>246)</sup> 실효성있는 대북정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균열구조의 영향력은 위에서 지적한 이유로 약화되기보다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균열구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즉 이슈의 정치화(politicization)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당분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당파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울러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런

---

<sup>246)</sup> 대표적으로 Seymour Lipset and Stein Rokkan, "Cleavage Structure,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Lipset and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p. 1~64 참조.

정치적 간극(신중론과 강경론)은 한국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정책적 처방과 관련된 논쟁에서 이미 관찰되어오던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정치이론의 현실주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개념 중의 하나가 국제무정부성이다. 즉 국가보다 상위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상위 주권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무정부 하에서 국가는 안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해 상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주의이론의 전통 속에서도 적절한 자구책에 대한 처방이 다르다. 한편에서는 적의 무력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여 그런 의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억지모델)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은 결국 위기가 나선형으로 고조되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나선형 모델)이 제기된다. 이론적으로는 두 주장이 일정 정도의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과 관련하여 여전히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북핵 정책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구상에서 이탈하여 아래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군사적 대응에 중점으로 두는 방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소위 ‘코리아 포뮬러(Korean Formula)’를 추진해온 바 있으나,<sup>247)</sup>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이런 정책 대안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조속히 단일한 정책 대안의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

<sup>247)</sup> 전봉근,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5 (2016.2.19.), p. 6.

I
II
III
IV
V
VI
VII

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외교적 영향: 통일외교와의 충돌 가능성

북핵 능력의 고도화로 당분간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의 외교력이 집중될 필요가 생긴다. 이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국 등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어야 하는 국가들과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간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공조나 협력을 필요로 했던 국가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질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외교적 이슈가 단순화되면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의 적극적 기여보다는 필요한 도움만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굳건한 한미동맹 및 공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교에 있어서 대미경사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어, 주변 국가들에게 균형 있는 협력을 얻어내는 데에 근본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4차 핵실험 직후에 진행된 외교부의 2016년 업무보고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였으며,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적시한 것이었다. 특히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 6자회담의 틀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강조한 바 있다.<sup>248)</sup> 물론 북핵 문제의 근본적

---

<sup>248)</sup> 위의 글, pp. 7~8.

해결은 통일에 있다는 점이 동 업무보고에서 강조되었지만, 결국 이는 당분간 한국 외교의 최우선 현안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자회담과 지난 20년 간 북한 비핵화 모델이 성과를 거두는데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모델의 새로운 해법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미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기본으로 하여 안보와 경제가 교환된 성격인 우크라이나 모델, 국제 사회의 중재와 정치적 빅딜이 중요했던 리비아 모델, 그리고 냉전 종식이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정권 교체라는 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sup>249)</sup>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의 로드맵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병행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기본적으로 남북대화의 가능성과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동북아의 다자 대화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조건과 구상의 이러한 불일치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막대한 외교적 비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북한이 핵무장으로 경제발전과 김정은 정권의 체제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북핵 포기가 북한에 이롭다는 설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게 한다.

외교적으로는 북핵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sup>249)</sup> 위의 글, pp. 11~12.

I
II
III
IV
V
VI
VII

선택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치명적이고 그에 반해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경로를 택했을 때 보상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손익계산을 한국과 북한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핵능력 고도화의 구체적 단계에 대한 최저 양보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별로 비용과 이익과 관련된 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sup>250)</sup> 여기에는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역으로 주변 국가들의 효과적인 대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우선적으로 한·미·일 삼국 협력체제의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 등의 반발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지역 전체의 향후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이고도 실질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 통일외교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강대국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이미 기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해온 미국은 주한미군의 보호와 한국의 방위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강화에 사드의 배치가 도움이 되는 실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한미와 미일 간에 공조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논리는

---

<sup>250)</sup> 위의 글, p. 16.

사드 배치로 인해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이 가시화되는 등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이와 아울러 한·미·일 공조로 중국에 대한 포위 및 봉쇄가 가속화되고, 실질적으로도 사드 배치 레이더의 탐지로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는 DF 계열 탄도미사일<sup>251)</sup>의 동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과 유사하게 사드 배치 결정으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훼손되고 한반도 비핵화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과 공유하는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공조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252)</sup>

결과적으로 북핵 능력 고도화로 촉발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증장기적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외교적 난제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북핵 능력의 고도화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간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었던 한중 관계에 파열이 생기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등의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라는 차원에서 중국에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결국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따르면 향후에도 한국이 북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자위적 차원에서 모색할 미국 및 일본과의 각종 협력을 중국은 자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 것이고, 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종결된 북방 3각 대 남방 3각의 대립구도를 재현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sup>251)</sup> 사정거리가 1,500km에 이르고 수평선 너머의 함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과 공해전투 독트린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의 핵심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sup>252)</sup> 이상 주변 국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응은 통일연구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방안』 KINU 통일나침반 16-05 (2016)을 주로 참고했음.

I
II
III
IV
V
VI
VII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5차 핵실험 등 도발의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고려할 때, 한국과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쉽게 조정될 가능성은 약하고, 오히려 양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의 확대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 외교를 추진하는 역량에 큰 장애물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외교적으로는 안보의 근간의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의 대안을 모색하고, 북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단기적이고 군사적인 대응 외에 중장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군사·안보 분야

#### 가. 군사적 영향: 실효적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

제5차 핵실험에까지 이른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한국으로서도 모든 수단을 망라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국제정치 현실의 냉엄한 현실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탄두를 마음대로 생산하게 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이제 한국의 핵전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결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범위를 좁히더라도 사드의 배치만으로 북핵 능력의 고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북한이 한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은 전면전을 의미할 것인데, 그 상황에서 한정된 지역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의 개전 초기에 탄도미사일을 다량으로 집중적으로 발사한다면 사드의 기능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대규모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국이 반격을 하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반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즉 확전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희망적 사고에 해당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기제이지만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미국 본토의 경우 사드는 동시에 발사된 최대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실제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미 중간 단계에서 사전에 요격이 실시된 이후에 잔존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사드가 요격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가 중층적인 체계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애초에 중간 단계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드에 매몰되어 다른 대안을 배제하기 보다는 억지력 증대의 다른 수단에 대한 정치적이고 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국방태세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한국의 미래 비전에 부응하는 총체적인 군사안보 기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시킬 것이다.<sup>253)</sup>

<sup>253)</sup> 사드의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2020년대 중반을

I
II
III
IV
V
VI
VII

사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군사 분야이다. 그간 막대한 국방비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THAAD+PAC-3), 선제타격(Kill-Chain) 및 다른 방식의 억지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남북한 간에 중단기적으로 군비경쟁을 강하게 촉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sup>254)</sup>

현재까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책은 유사시 선제 타격하여 무장해제할 수 있다는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의 피력과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거부적 억지에 대한 의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255)</sup> 그런데 선제타격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를 지닌다. 선제타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공격이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자,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한국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북한이 미사일을

---

목표로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KAMD 체제와 사드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다. KAMD의 구성 요소는 PAC-2(고도 15-20km), M-SAM(~40km), L-SAM(50-150km) 인데, 이 중 L-SAM과 사드의 요격 범위가 중복되고 2018년에 도입 예정인 PAC-3와 M-SAM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sup>254)</sup> 2016년 8월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보도 이후, 한국 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북핵 대응에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북핵 능력의 고도화에 무대응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자원 동원력이 허용하는 한 대응 무기체계를 확충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sup>255)</sup> 선제타격 능력의 궁극적 완성은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고, 미사일방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이런 능력의 지나친 확신이나 과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발사할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그 목표가 어디인지 밝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객관적으로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선제공격과 예방 공격 사이의 명확한 구분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선제 타격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2차적, 3차적 결과에 대한 고려, 즉 전면전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 경우 선제타격으로부터 이어지게 될 전면전에 대한 결정을 과연 누가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sup>256)</sup> 만약에 타격 이후에도 완벽하게 확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의 의지가 정확히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선제타격 계획을 구축한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 군부 또는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 사용과 관련하여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오고 있다. 만약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위자라면 선제 타격 이후에 확전 통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제타격은 전면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음을 선제타격 계획의 구체화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도 미사일방어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이 한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라면

<sup>256)</sup> 아직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정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 미군을 배제하고 선제타격 명령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하달되어 이행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I
II
III
IV
V
VI
VII

우리의 물리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외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선제타격이나 미사일방어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고민 때문에 최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수행 능력의 강화에 기반을 둔 ‘실전기반 억지’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sup>257)</sup> 주장의 핵심은 보복 차원에서의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 개시가 있으면 방어 후 신속히 공세로 전환하여 전격적으로 신속결전을 추구하여 적의 붕괴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야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58)</sup>

미국은 냉전기에 소련의 핵능력의 고도화에 직면하여 유연반응전략이라는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파멸적인 전면전과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굴복이라는 양 극단의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수동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아래의 <표 V-1>에서처럼 전쟁 수행 능력에 주안점을 둔 군사전략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전략 주장의 핵심이다.

---

257) 박창희, “한국의 ‘신군사전략’ 개념: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2011).

258) 관련하여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는데,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키 리졸브 연습과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독수리 훈련에는 한국군 30만명, 미군 만 7000명의 연인원이 참석하여 최대 규모의 병력 참가를 기록하였고, 이들 훈련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 및 4D 작전을 구사하는 작계 5015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연구원,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KINU 통일 나침반 16-04 (2016), p. 22.

표 V-1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sup>259)</sup>

구분	군사전략	중심 개념	목적
국지도발 대비	응징적 억제	보복 및 거부	추가도발 방지
전면전 대비	방어적 공세	수도방어, 전격전 및 신속결전	정권붕괴 및 통일 추구
핵위협 대비	선제적 억제	전술적 핵반격 / 전략핵 선제대응	전략핵 억제, 대응, 보복

물론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sup>260)</sup>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국방선진화추진 위원회'에서 기존 대북 거부적 억제 전략을 비판하면서 제시했던 적극적 억제 개념을 이어받은 개념이다.<sup>261)</sup>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능동적 억제는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전면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선제적인 대응조치는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비군사적 모든 조치를 포함한 개념”이고, 전면전 도발 징후가 명백·임박한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sup>259)</sup> 박창희, “한국의 ‘신군사전략’ 개념: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p. 50.

<sup>260)</sup> 정부에서는 deterrence를 의미하는 개념을 주로 ‘억제’로 쓰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억지’와 ‘억제’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왔다. 이 글에서 필자는 deterrence를 의미할 때 ‘억지’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쓰고 필요시 정부의 공식적 용어를 인용할 때만 ‘억제’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다.

<sup>261)</sup> 적극적 억제 개념은 그 대상으로 북한의 국지도발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을 지녔다. 즉 향후 물론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도 가능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태나 전력 구조를 볼 때 오히려 국지도발의 지속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킬 때 한국군의 능력과 한국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므로, 북한의 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이런 능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이 개념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적극적 억제는 문자 그대로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북한의 도발 시에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및 교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국지전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공격 원점에 대한 타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공격 후에 군사적 보복 차원에서 제3의 목표물을 타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적극적 억제 개념의 기본 원칙이다.

I
II
III
IV
V
VI
VII

허용하는 자위권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sup>262)</sup>

결국 능동적 억제전략은 “킬 체인 구축 등 각종 대비계획을 조기에 실행해 억제전략 측면에서 우리의 능력과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은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한 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되는 것이다.<sup>263)</sup> 그렇다면 킬 체인 구축의 핵심인 탐지력의 강화가 필요한데, 연결되는 질문은 굳이 능동적 억제라는 개념을 국방부에서 사용한 이유이다. 적극적 억제보다 능동적 억제가 한 차원 발전한 것이라는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이며, 국지전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실제 가용 수단의 투발 또는 사용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고민과 능동적 억제전략에서 최종 결정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 등은 여전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그 내용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무엇이 맞춤형의 내용인 것인가가 관건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 군은 핵사용이 임박한 단계에선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sup>264)</sup> 확장 억제의 주체는 미국인데, 자국의 결정을 한국에 위임하는 형태의 이런 방식에 대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질문이 가능하다.

---

262) “軍, 전면전 억제 ‘선제적 조치’ 개념 적용,” 『연합뉴스』, 2014.3.6.,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06/0501000000AKR2014030608460043.HTML>>. (검색일: 2016.5.20.).

263) “북핵 능동적 억제전략, 3단계 대응방안 마련,” 『연합뉴스』, 2013.4.1., <[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4/01/0505000000AKR20130331060000043](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4/01/0505000000AKR20130331060000043)>. (검색일: 2016.7.20.).

264) 위의 글. 2013.4.1.

물론 북한 핵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핵전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한·미 협력에 비해 앞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한국도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전략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sup>265)</sup> 하지만, 미국의 차별적 처신에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제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이 북한의 비대칭 전략 개발과 추진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지양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북한군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 개념을 발전시킬 것임을 천명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66)</sup> ‘역비대칭 전략’으로 명명된 창조형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 우리가 명백한 우위를 점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북한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sup>267)</sup>

비대칭성의 개념은 미국의 1997년 4년주기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위협은 비전통적인 방식을 차용한 비대칭 위협에서 나올 것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즉 미국의

<sup>265)</sup> 전성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sup>266)</sup> “軍, 北비대칭 우위 전략으로 ‘참수작전’ 제시,” 『연합뉴스』, 2015.8.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7/0200000000AKR20150827078600043.HTML>>. (검색일: 2016.6.20.).

<sup>267)</sup> “軍, 역비대칭 전력 확보로 미래전쟁 대비,” 『연합뉴스』, 2015.1.19.,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5/01/19/0505000000AKR20150119010700043.HTML>>. (검색일: 2016.6.20.).

I
II
III
IV
V
VI
VII

잠재적 적이 비대칭 전략과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비대칭 전략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행위자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sup>268)</sup> 즉 기존에 수용되던 전쟁 방식으로 싸워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약한 행위자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기존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비대칭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대칭 전략이 약자의 전략이라는 통상적 이해에 반하는 연구도 있다.<sup>269)</sup> 이 연구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칭 전략이 강자의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비대칭 전략은 미국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통상적 인식을 반박하면서 미국도 비대칭 전략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강자에 의해 활용되는 비대칭 전략이 향후 더욱 큰 상대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고, 더구나 비대칭 전략이 미국에 여러 가지 이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상대방의 주요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비용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비대칭 전략은 단기적으로 상대방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전략을 재평가하는 동안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비대칭 전략은 상대방이 적국의 기존 전략과 그것에 결부된 상대적 강점, 그리고 상대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에 대해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들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강자도 약자에 대해 극적인 결과를 얻기

---

<sup>268)</sup> Dennis M. Drew and Donald M. Snow, *Making Twenty-First-Century Strategy: An Introduction to Modern National Security Processes and Problems*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2006), pp. 131~132.

<sup>269)</sup> Michael Breen and Joshua A. Geltzer, "Asymmetric Strategies as Strategies of the Strong," *Parameters*, Vol. 41, Issue 1 (2011).

위해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결국 미국도 자국 현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비대칭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칭 전략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도출되고, 미국의 윤리와 글로벌 리더십에 부합해야 한다.<sup>270)</sup> 최근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런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복핵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한국도 효과적 군사적 대응에 대해 고민하면서 역비대칭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런 한국의 비대칭 전략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군사혁신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좌우했던 새로운 군사혁신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은 극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소위 미래전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군사혁신의 필요성은 부정되기 힘들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 도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군사혁신과 다양한 전략적 고민의 함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만약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산과 능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전쟁의 방지와 수행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략적인 맥락에서 유리된 맹목적인 신기술 추구하고 중복적인 투자로 인한 자원 낭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우선 다양한 군사적 개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 군사 전략은 불필요한 전쟁을 회피하고 전면전의 발생을 '억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의

---

<sup>270)</sup> Breen and Geltzer, "Asymmetric Strategies as Strategies of the Strong.," p. 52.

사용은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정치에서 군사력 사용에 대한 원칙을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전론(just war theory)에 따르면 군사력의 선제적(preemptive) 사용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정당화될 수 있다.<sup>271)</sup>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명령한 부시대통령 조차도 정전론의 개념인 선제공격을 통해 이라크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전쟁이 예방 공격이 아니라 선제공격임을 역설함)했다는 점에서 정전론은 단순한 일부 학자의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전론은 ‘전쟁에 대한 법(jus ad bellum)’으로 여섯 가지 조건, ①권위가 있는 기관에 의한 전쟁 개시 결정 ②정당한 이유 ③올바른 의도 ④평화적인 해결책을 사용한 끝에 취하는 최후의 수단 ⑤발생하는 손해와 달성되어야 하는 가치의 균형 ⑥승리할 가능성을 정당화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또한 ‘전쟁에 있어서의 법(jus in bello)’으로는 두 가지 조건, ①전투원/비전투원의 식별 ②균형의 원칙(전쟁 목적에 걸맞은 공격 수단의 선택)이 있고, 설령 정당하게 개시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전쟁 수행의 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272)</sup>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에는 상당한 정치적 비용 또는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제성의 구성 요건을 비롯 부시 독트린이 상당한 정도로 완화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한반도에서의

271) 전통적으로 정전론에서는 군사적으로 즉각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이고 치명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긴박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방어의 목적으로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예방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물론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들과 그 실질적 사용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군사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정전론의 원칙은 유엔헌장에 51조에 자위권이라는 개념으로 반영되어 있다.

272) 고봉준, “핵전략,” 군사학연구회 편, 『군사사상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p. 491.

군사력 사용에는 보다 명확한 조건의 충족이 요구될 수 있다. 즉 긴급하고도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는 별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억지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균형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의 각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 프로그램들(킬체인, 공중급유기, 차세대전투기, 아파치헬기, 이지스함,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의 목표도 주변 강대국과의 불필요한 군사력경쟁을 피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 도발할 경우 철저히 억지함과 동시에 강대국 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원의 배분 측면, 공약 이행가능성의 측면, 안보에의 승수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균형 있는 계획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힘들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자산과 결코 호전되지 않는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위의 질문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의 추진에 있어서 현시성의 강화만큼 중요한 것은 유사시 전술/전략적 승수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에 과학기술 우위에 기반을 둔 군사혁신을 추진한다면, 이는 무선 네트워크 능력의 강화, 군 위성통신 능력의 강화, 관련 인력과 전문성의 강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토대로 지구전역 항법 시스템(GNS), 관성항법체계(INS) 등 정밀유도 및 타격기술의 발전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장거리 정밀교전 개념을 보편화시키고, 이를 정찰·감시기능 및 지휘통제기능과 연계한 타격복합체계(C4ISR+ PGMs)로 운용함으로써 승수효과를 추구하고 있다.<sup>273)</sup> 이런 혁신의 결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은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I
II
III
IV
V
VI
VII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의 융합을 통해 집적, 선형, 근거리 전투 개념에서 비집적, 비선형, 원거리 전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능력은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의 다차원 시·공간상에서 제반 능력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전력운용의 승수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sup>274)</sup>

이런 정밀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중심작전은 적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중심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과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집중 타격하는 비대칭전 및 병행전을 통해 교란·마비효과를 극대화하고, 적의 전쟁 지속의지를 상실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교전으로 전쟁의 조기 종결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에게 부여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능력기반의 효과중심 작전만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 유사시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제약 사항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군의 대양해군 추진이라든지, 공군의 작전 반경 확대 노력 등으로 대표되는 전력투사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의 지나친 강조도 경계해야 하고,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 즉 막강한 재래식 육군력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만 매몰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립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안보에 적합한 군사력의 최적화를 이루는 데에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인다.

동시에 북핵 능력 고도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전략적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 최선, 최대

<sup>273)</sup> 노명화 외, “디지털 전장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문인력 육성 방안,”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3), p. 7.

<sup>274)</sup> 위의 글, p. 9.

역지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방의 효율성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실효성 있는 대안의 확보는 결국 국가 전체적인 전력 균형을 고려한 합동성 강화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합동성 강화의 노력들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복핵 능력 고도화를 계기로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한 채로 합리적인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군사혁신과 합동성 증진의 모델을 복합적으로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정치 전반과 동아시아 국제체제 내에서 한국이 처한 위상과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군사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떤 필요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나. 안보적 영향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국에 군사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는 다자주의적인 외교적 노력과 경제 제재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 또는 확대의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군사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우선시되면서 군사적 대응 이외의 다른 방식의 안보 증진 수단에 대한 논의의 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275)</sup> 이는 결국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sup>275)</sup> 물론 이런 상황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결국은 제재를 진행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I
II
III
IV
V
VI
VII

군사력은 증대되지만 결과적으로 안보가 증진되지는 않는 상황, 즉 안보 딜레마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사실상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한국이 치러야 할 안보 비용은 상당히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안보딜레마와 유사한 논리가 작동<sup>276)</sup>되는 것 외에도, 한국이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하여 맞춤형 대응을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소된 후 이런 대처에 소요된 함몰 비용(sunk cost)은 결국 한국의 효율적 자원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표명되고 있다.<sup>277)</sup> 이 경우 문제는 주한 미군과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배치를 추진하는 한반도의 사드를 철수시키는 데에 미국과 추가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고려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주체인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즉 한국은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본다면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전체 혹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대만큼 과거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이들

---

이상현, “북한 5차 핵실험, 멀어져 가는 비핵화의 꿈,” 『세종논평』, 322호(2016.9.12.).

<sup>276)</sup> 이론적으로 안보딜레마는 현상 유지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북한을 수정주의 국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안보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을 현상유지 국가로 보는 것은 아니며, 다만 향후 조성될 군비경쟁의 조건이 안보딜레마의 논리에서 파생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sup>277)</sup> “외교부 차관 ‘북핵 문제 해결 시 사드 철수,’” 『중앙일보』, 2016.7.14.

중요 행위자의 전략적 이해가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잘 일치되지 않았던 것에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17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이는 사활적 안보문제이며 다른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sup>278)</sup> 미국의 대선 이후 세계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타협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안보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기초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sup>279)</sup> 현재로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국면이고 일견 구조적으로 양국이 전략적 경쟁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5차 핵실험 이후에도 상황에 큰 변화는 없지만,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증장기적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서 통일의 전망을 확대하는 데에는 역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선택을 한국에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278) “사활적 안보 문제는 다른 가치와 못 바꿔... 중 반응 앞세우는 건 본말 전도.” 최보식이 만난 사람. chosun.com, 2016.7.18.,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0429.html](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0429.html)>. (검색일: 2016.8.25.).

279) 예를 들어, 미국이 사드의 배치 시기를 조율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의 양보, 그리고 중국은 해양 영토분쟁과 관련한 주장의 수위를 조절하는 식의 양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실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중국은 사활적 이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중국은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항공모함을 동원한 방어 및 정찰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이런 상황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관련 기사는 “중, 남중국해 훈련에 전략폭격기 동원”...군함 100여척 투입, 『SBS뉴스』, 2016.7.1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71910&plink=ORl&cooper=NAVER](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71910&plink=ORl&cooper=NAVER)> (검색일: 2016.7.26.) 참조.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 계획대로 사드 포대의 생산과 배치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텍사스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포대의 한반도 이전 계획을 유보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이해가 일치된다면 타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군사적 실효성과는 다른 고민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부정과는 달리 한반도에의 사드 배치가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이런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비대칭 동맹에 상존하고 있는 강대국의 동맹 파트너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미·일 세 나라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이완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 또는 공식적 경로를 통해 분명하게 반대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이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신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무시도 중국으로 하여금 더 큰 보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사전적인 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항공 및 해양 경계에 대한 강한 압박 등은 향후 북핵 능력의 고도화와 결부되어 한국의 안보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4. 사회·경제 분야

### 가. 사회적 영향: 남남갈등의 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책 및 대북 정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의 갈등이

확대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대립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면 지난 20년간의 의견 대립보다 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는 대북 정책 또는 통일 정책을 둘러싼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서 만약에 북핵 문제에 대한 논쟁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2017년 대통령 선거 국면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관련한 갈등이 증폭되어 상당한 사회적 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에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자 중 61%가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하고, 33%가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76%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하고 21%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 포인트가 낮아진 것이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비율은 12%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은 54%, 반대 의견은 38%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2013년의 찬성 64%, 반대 28%와 비교한다면 찬성률은 줄어들고 반대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는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상의 이슈에 대해 국민 대중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강경대응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 대중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동일 조사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60%가 '잘한

I
II
III
IV
V
VI
VII

일'로 평가했는데, 이는 선부른 확성기 방송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심을 부추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장애를 조성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국민 대중은 북한은 한국에 위협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국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율적 대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보다는 의견의 대립과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최근 국내 도입이 결정된 미국의 사드 체제에 대한 대립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현재 국내의 논쟁은 크게 4가지 주장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주장인 미국주도 배치 수용론(또는 '전략적 모호성'주장), 보수적 안보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수용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무용론, 다른 일부 안보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론이 그것이다.

이런 네 갈래의 주장을 크게 배치론과 무용론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일부 보수적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안보 문제를 등한 시하는 집단의 생각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반해 무용론자들은 사드 배치의 안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여 실익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일종의 이념적 스펙트럼과 맞물리면서 생산적인 대안의 모색으로 이어지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중대한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복합적 인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슈의 흐름에 매몰되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효율적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슈에 대한 조기 인지 종료(premature cognitive closure) 및 근원귀속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theorem)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슈 자체에 대한 체계적 검토보다는 기존의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안보 실패로 귀결 될 가능성을 높인다.<sup>280)</sup>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 내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대안 중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주장과<sup>281)</sup> 사드 2개 포대의 추가 배치라는 군사적 대응책 강화<sup>282)</sup> 및 일종의 긍정적 관여 정책인 선 고도화 방지 후 폐기라는 북핵 해법의 제시 등<sup>283)</sup>이 포함되어 있다.<sup>284)</sup> 이런 다양한 의견의 제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칫 이런 대안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는 과정에서 대안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사회적 갈등의 야기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sup>280)</sup>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참조.

<sup>281)</sup> “3천톤급 잠수함 7번함, 핵잠수함으로 건조해야,” 『연합뉴스』, 2016.6.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3/0200000000AKR20160603029851014.HTML?from=search>>. (검색일: 2016.7.20.).

<sup>282)</sup> 군사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북의 한 지역에 사드 포대라 배치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포대가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드의 추가적인 배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sup>283)</sup> “제재국면 속 ‘긍정적 관여정책’으로 비핵화 모멘텀 찾아야,” 『통일뉴스』, 2016.7.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89>> (검색일: 2016.7.25.).

<sup>284)</sup>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포괄적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월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에 한정된 정보 공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을 매개로 하여 양국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나 북핵 능력의 고도화로 양국 간에 이 협정의 체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안보적 관점서 필요,” 『연합뉴스』, 2016.9.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831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9.12.) 참조.

I
II
III
IV
V
VI
VII

따라서 효과적인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의견 결집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대안에 대한 논의가 전통적인 남남갈등의 요인 중 하나였던 대북 강경론 및 협상론으로 수렴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은 한국의 대응 노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갈등보다는 대안들의 차이점과 효과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다.

## 나. 경제적 영향

북한 핵능력 고도화는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제4차 핵실험 이후 진행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고민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제5차 핵실험 이후 이에 대한 가능한 추가적 조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안보리결의안 2270호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찾는 일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의 성과를 검증하기 힘들어진다면 제재 국면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 현재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 및 다른 국제사회의 협력에는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중국 및 러시아와 제재에 대한 전략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의 효과적 유지를 위해 폐쇄를 단행한 개성공단을 한국이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해지-

반면, 중국 및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대처에 대한 한·미·일의 조치에 대한 전략적 신뢰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무역방식의 변화를 통한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다 강력한 유엔안보리 결의의 도출 및 독자적 대북 제재의 강화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기계적으로 집행하거나 지방정부 차원의 북중 교역을 묵인하는 등으로 대북 제재 자체를 간접적으로 무력화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지면서 한국으로서는 가시적 조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방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억지 및 방어체계의 완성은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러한 위협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서 동 체계의 완성을 앞당기고 추가적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sup>285)</sup> 문제는 이 경우 몇 년간 활력을 찾지 못하는 국내 경제의 활성화 노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동시에 커진다는 것이다.<sup>286)</sup> 이런 무기체계의 배치는 단순히 도입비나 배치 비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및 합동 훈련비용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sup>285)</sup> 앞서 언급했던 원자력잠수함 구축 주장이 이런 예의 하나이고, 미사일방어 능력의 추가적 확보, 미사일 전력 강화, 특수전 전력의 강화 등이 계속 주장될 것이다.

<sup>286)</sup>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군비경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경제력이 취약한 북한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 북한이 정권의 생존에 위협을 느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과정의 진행 중에 한국 경제에도 일정 정도의 악영향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복합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사적으로 선제타격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에 필요한 정보자산을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런 대안의 현실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에 따라 각종 필요한 군사적 자산의 추가적 도입과 아직도 대북 억지력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은 국가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북핵 능력의 고도화와 거듭되는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 우선의 즉자적 대응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경제적 비용을 급증시켜 향후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과정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핵 능력 고도화의 경제적 악영향 중 측정이 다소 어려운 부분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가운데,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의 대립으로 중국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 공식적인 군사적 또는 외교적 대응은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교류 부문에서 중국의 대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중국도 공식적으로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무역 제재보다는 각종 비관세 장벽(검역 강화, 통관 지연, 여행기준 강화 등)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해 실질적인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다수 중국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제시되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해법인 이익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일대일로 등 각종 지역적 경제 협력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주는 함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한국의 국가 리스크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각종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로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커진다면 해외자본의 유출이 급증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 및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개연성도 농후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각종 경제적 거래비용이 증대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논의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사실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심각한 단계로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지역적, 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확대라는 협력의 유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악영향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복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역량을 한국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중장기적으로 안보와 경제는 중층적으로 얽혀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에 있어서도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 역량의 효율적 활용이 없다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은 중단기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 VI. 북한에 대한 파급영향

홍민(통일연구원)





## 1. 도입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보유’와 핵능력 증강을 중심에 놓고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핵무기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리더십의 정당성과 기존 통치체제의 강화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최소 30년 이상의 집권을 염두에 둔 통치 구상 아래 핵무기를 안정적인 통치의 핵심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87)</sup>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핵능력 자체에 대한 평가나 외교·군사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핵무기 고도화가 어떻게 체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가의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존 핵보유국의 사례를 보면 한 국가의 핵무기 보유 및 고도화는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상의 변화 이상으로 국가의 행위성(agency)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 자체는 살상이나 안보를 위한 사물 또는 도구 이상의 행위성을 갖는다. 무기는 무기를 개발·생산하는 기술적 시스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사전략과 작전체계 및 훈련체계는 물론 무기의 보유를 정당화·합법화하는 안보담론과 정책 생산의 정치적 과정, 사회적 네트워크, 국내의 자원 동원 및 재정 확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직문화와 정체성 등을 수반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무기는 한 국가의 국가성과 행위성을 구성하고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거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sup>288)</sup>

<sup>287)</sup> 홍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북한 국내 차원,” 『(동국대 무기체계와 한반도 분단 학술회의 발표집)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2016.1. 26.), p. 39.

<sup>288)</sup> Thomas P. Hughes, *American Genesis: A Century of Invention and Technological Enthusiasm, 1870-1970*, New York: Viking Penguin, 1989

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 및 고도화 과정은 군사조직 및 군사전략, ‘핵보유’ 프레임에 입각한 정세인식 및 통치전략, 권력정치 및 자원배분체계 등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핵무기체계는 단순히 군사적 수단, 기술적 실체 이상의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과정을 수반하며 그 사회에 맞게 ‘스타일화’ 된다. 핵무기체계를 수단적 대상에서 국가 행위성(agency)을 변화시키는 보다 능동적인 행위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89)</sup>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고도화는 이미 내부적으로 통치이념, 정책담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에 걸맞은 ‘전략적 지위’와 대외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며 핵무기를 국가상징(state symbol)<sup>290)</sup> 또는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정책 및 노선의 재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핵무기가 체제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향후 가져 올 변화의 관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체제 내부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통치체제와 권력정치, 이데올로기와 담론,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경제정책과 자원배분, 사회통제와 사회심리 등에 미치고 있는 영향으로

---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Fabian Muniesa, Yuval Millo and Michel Callon, “An introduction to market devices,” Fabian Muniesa, Yuval Millo and Michel Callon, Yuval Millo, Fabian Muniesa eds., *Market Devices* (Oxford: Blackwell, 2007), pp. 1~12.

<sup>289)</sup>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p. 95.

<sup>290)</sup> 핵무기를 국가상징 차원에서 접근한 프랑스 핵 개발 사례와 관련해서는, 유르겐 브라우어, 후버트 판 투일 저·채인택 역, 『성, 전쟁 그리고 핵폭탄』 (서울: 황소자리, 2013), pp. 343~346.

나누어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가 북한체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외교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의 기술적 진화가 핵독트린과 통치담론, 권력정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둘째, 군사적·안보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가 군사전략과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가 자원배분 및 경제정책, 사회통제와 시장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정치·외교 분야

### 가. 북한의 핵독트린 구성과정과 특징

#### (1) 핵전략과 기술적 진화의 상관관계

핵전략의 출발점은 ‘억제(deterrence)’이다. 핵전략을 억제 차원에서 볼 때,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사전달(communication), 능력(capability), 그리고 신뢰성(credibility)이다. 이 조건들은 재래식 억제나 핵억제 모두 적용된다.<sup>291)</sup> ‘의사전달’이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적이 어떠한 범주의 행위를 해선 안 되고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sup>291)</sup> 필 윌리엄스, “전략의 개념”, 최병갑 외 공편, 『현대 군사전략대강II: 전략의 재원리』 (서울: 을지서적, 1988), pp. 56~57.; Phil Williams, “Nuclear Deterrence”, John Baylis et al.,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Concepts I* (New York: Holmes & Meier, 1987), pp. 117~121.;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 353 재인용.

I
II
III
IV
V
VI
VII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보통 국가들은 공식적인 성명 발표(선언), 지도자의 연설 및 발언, 법적·제도적 차원의 규정,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 등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의사를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하려 한다. 핵 개발 및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1차 선제공격에 중점을 두는지 2차 보복공격에 중점을 두는지, 주요 표적이 누구인지 등은 일종의 ‘선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이란 상대에게 핵무기를 통해 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핵전력의 규모(quantity), 질(quality), 운반수단, 적의 요격과 선제공격의 취약 정도 등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특정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핵사용 위협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고 대가가 충분히 지불될 것임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sup>292)</sup>

이와 같이 핵억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핵전략(Nuclear Strategy)’이다. 핵전략은 내용상 기본적으로 핵전력과 핵독트린(Nuclear Doctrine)으로 구성된다.<sup>293)</sup> 핵전력은 핵전략의 하드웨어적 요소로 핵능력, 전력강화 등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에 해당하며, 핵독트린은 핵전략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핵무기 운용전략에 해당한다.<sup>294)</sup> ‘의사소통’이나 ‘신뢰성’을 어떻게 효과적이며 효용성 있게 할 것인가에 해당한다. 한편 핵전력이 변하면 독트린도 바뀌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둘은 어디가 먼저라고 꼭 얘기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핵전력의 도약이 있어야만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핵독트린도 그 기술적 능력에 따라 구체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정적인 핵심 기술의 확보 또는 기술적 진화는

<sup>292)</sup> 박창희, 위의 책, pp. 354~359.

<sup>293)</sup> 정영태 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123~124.

<sup>294)</sup> 위의 책, p. 124.

핵전략을 강화하는 도약의 발판이 된다.<sup>295)</sup>

실제로 북한의 핵독트린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실질적인 기술적 성과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고 보다 공격적인 내용을 추가해 왔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 기술적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핵 관련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미사일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개념 역시 새롭게 늘어나고 추가되면서 핵독트린이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96)</sup> 상식적으로 본다면, 공격적 핵독트린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이 유리할 때 나올 수 있다.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에 따라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독트린을 보다 기술적 성취에 맞게 구체화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류 핵·미사일 개발 역사를 보면, 핵독트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진화와 궤를 같이 한다. 1950년대 미국의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sup>297)</sup>은 충분한 핵폭격기 보유, 다종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융통성 있는 핵전략이 가능한 속에서 나왔다.<sup>298)</sup> 공격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도시(counter city) 공격 효용성을

<sup>295)</sup> 가령 핵물질의 대량생산기술 확보는 핵무기 수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 확보는 미사일 탑재를 가능하게 하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 확보는 생존성을 향상, 다탄두각개돌입탄도미사일(MIRV), 정밀유도 기술 확보는 대량보복 및 정밀성, 생존성을 향상시키며, 탄두의 재진입기술 확보는 사거리 연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위의 책, pp, 123~124.

<sup>296)</sup> 전략로켓, 전략군, 소형화·경량화·다중화·정밀화,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핵탄적용수단, 전략적 핵무력, 핵탄두폭발조정장치, 전략잠수함탄도탄, 핵무기 병기화 등 핵·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적 용어를 언급해 왔다.

<sup>297)</sup> 대량보복전략은 1953년 나왔으며 공산주의자들의 군사적 모험에 대해 더 이상 재래식 반격에 그치지 않고 그 책임이 있는 공산주의 강대국에 대해 대량의 핵무기로 즉각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소규모 더러운 전쟁'을 치르면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 한국전쟁은 유독 미국인들에게 인기 없는 전쟁이었고 종전 후에는 완전히 잊혀진 전쟁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대량보복전략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소규모 군사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한 대량보복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sup>298)</sup> 박창희, 『군사전략론』, p. 362.

I
II
III
IV
V
VI
VII

증대시킨 것은 ICBM 능력의 향상에 따른 기술적 결과였다.

## (2) 핵독트린의 주요 구성 내용

핵독트린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핵무기 운용과 관련된 군사적·안보적 차원의 교리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차원의 교리이다. 전자가 핵무기 보유 또는 사용 명분(억지, 보복), 사용 범주, 사용 방법, 운용, 타이밍(선제공격, 보복공격), 가용자원, 지휘·통제, 관리·감독 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핵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략적 가치, 국제적 핵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가령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추구하는 어느 국가가 제국주의 위협의 종식, 자본주의 타도를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다면, 이런 경우 제국주의나 자본주의와의 대결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교리가 구성될 수 있다.

한편 핵독트린은 핵 프로파간다(nuclear propaganda)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핵 프로파간다는 핵·미사일을 정치적·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전술적 차원에서 수사적 장치(rhetorical device)로 활용하는 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냉전기부터 핵무기 관련 프로파간다는 기본적으로 ‘안보’와 ‘공포’라는 두 선동적 요소에 맞춰졌다.<sup>299)</sup> 북한의 핵 프로파간다는 국내적으로는 주민 결속, 리더십 부각, 핵보유 강조를 통해 정권의 치적 및 능력을 과시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정치기술적 요소들을 내포한다.<sup>300)</sup> 한편 핵무기와 관련된 대외적

<sup>299)</sup> 데이비드 웰치 저·이종현 역, 『프로파간다 파워』 (서울: 공존, 2015), p. 128.

<sup>300)</sup> 북한의 핵 관련 담화 행위를 선전·선동전략의 차원에서 설명한 연구로는, 정상혁, “북한 핵 선전선동전략 연구: 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선전·선동을 통해 적국이나 타국의 정책을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외교적·상징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sup>301)</sup>

보통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핵독트린 표명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현재 핵보유 국가 중 공식적이면서 구체적으로 핵독트린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국가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미국, 영국, 러시아 정도가 여러 형태로 핵전략을 밝히고 있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 8년을 주기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간해 핵정책을 표명하고 있다.<sup>302)</sup> 특히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공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국 및 동맹에 대해 핵무기·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거나 재래식 무기로 존립을 위협할 경우를 제외하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보복공격(2차 공격) 중심의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냉전시기 미국과의 핵·미사일 경쟁 속에서 핵독트린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활용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핵탄두와

제4호 2015년 겨울호, pp. 45~72.

301) 김성철, “북한의 핵역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제4호 (2014), p. 122.

302)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은 8년 간격으로 발간되며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을 내다보고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까지 총 3번 발간되었다. 『4개년국방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탄도미사일방어검토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BMDR)』, 『우주전태세검토 (Space Posture Review: SPR)』 등과 함께 국방부가 수행하는 4대 전략방위태세 검토 보고서 중 하나이다. 이상현, “미국의 2010 <핵태세검토(NPR)>와 핵안보정상회의,” 『EAI 논평』, 제6호(2010.5.10.), p. 1 참조. 미국의 NPR은 전세계 및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는 국가를 지목하거나 범주화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가공할만한 3축 체제(Triad of Nuclear Weapons: 전략폭격기, ICBM, SLBM),<sup>303)</sup> 미국의 기술을 압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sup>304)</sup> 체첸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격적 성향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선제핵공격을 완전히 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

표 VI-1 >> 소련의 핵독트린

주요 내용	주요 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전쟁은 위험하고 예측불가능 한 것이지만 정치의 연장선상</li> <li>· 서방을 상대로 한 공격은 '정당한' 것이나, 소련이 먼저 전쟁하진 않음.</li> <li>· 핵전쟁은 동서의 양진영의 동맹국들이 참가하는 전쟁이 될 것</li> <li>· 군사교리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구성, 적 억제 효과적 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 · 불공격</li> <li>· 진영간 · 전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과 관련한 소련의 군사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반격을 한다.</li> <li>(2) 2차공격(보복공격)을 위한 예비적 생존을 보장한다.</li> <li>(3) 적에게 전면적인 패배를 가한다.</li> <li>(4) 적의 중요 영토를 점령한다.</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공격 · 생존력 ·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전쟁의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초 핵교환 후에도 소련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시스템 지속</li> <li>(2) 적의 모든 군사력이 파괴되고 격멸될 때까지 전쟁의 수행을 계속</li> <li>(3) 유럽 점령</li> <li>(4)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소련 지도하에 사회주의가 세계를 압도</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공격 · 생존력 · 확보</li> <li>· 적 원전 · 격멸 · 전쟁</li> </ul>

<sup>303)</sup> 3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 국가이다. 프랑스는 SLBM과 항공기 탑재 순항미사일, 영국은 SLBM 등의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심기보, 『원자력의 유혹: 핵무기, 원자력발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서울: 한숨미디어, 2015), pp. 164~174.

<sup>304)</sup>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 수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S400을 보유하고 있다. S400은 '러시아판 미사일방위(MD)'로 최대 속력 초당 4.8km로 400km 반경에 들어오는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요격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세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이 러시아의 S400을 구매하고자 노력해 오다 결국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극적으로 구매하게 되었다. 한 달 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갑작스런 사드배치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중국의 S400 구입이 자리하고 있다. "중·일 전쟁으로 서울 불바다?," 『시사인』, 2015.6.1. 참조.

주요 내용	주요 교리
· 핵전쟁은 대량 핵공격의 교환으로 단시간내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지구전도 가능하며 승리를 위해 재래식 전력 필요	· 재래식 전력 필요

\* John J. Dziak, *Soviet Perceptions of Military Doctrine and Military Power: The Interaction of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rane Russak & Co, 1981), pp. 27-28.; 박휘락, 『소련 군사전략 연구』 (서울: 법문사, 1987), pp. 32-41 참조.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5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불사용(NFU: No First Use)’ 정책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국방백서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꾸준히 공표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1956년 핵 개발 결심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DF-5를 실전 배치한 1981년까지 구체적인 ‘핵독트린’이 없었다. 핵전쟁에 관한 시나리오도 개발하지 않았고 가공할 핵무기를 외교적 목적과 연관시키지도 않았다. 핵전략에 대한 중국의 무관심은 1981년부터 점차 바뀐다.<sup>305)</sup>

최근 2013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르면서 기존의 핵·미사일 운용 부대인 ‘제2포병’을 핵심전력으로 지목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2016년에는 ‘로켓군’을 창설하여 제4군종으로 격상시켰다. 2016년 1월 1일 ‘로켓군’, ‘육군(통합)지휘기구’, ‘전략지원부대’ 창설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시 주석은 로켓군의 역할을 “(적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위한 핵심 역량이자 우리나라 대국의 전략적 버팀목이며 우리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하면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핵억지력과 핵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 원기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306)</sup> 시진핑 들어 중국은

<sup>305)</sup> 정규수, 『ICBM, 그리고 한반도』 (서울: 지성사, 2012), pp. 75~76.

<sup>306)</sup> “中 새해 첫날부터 전방위 군사굴기... 핵공격방어 ‘로켓군’ 창설,” 『연합뉴스』, 2016. 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1/0200000000AK>>

I
II
III
IV
V
VI
VII

그 어느 때보다 핵·미사일 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 중국 국방백서에서는 핵선제불사용 정책 견지 의지를 생략하기도 했다. 당장의 포기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선언적 핵선제불사용 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비치며 점차 핵독트린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sup>307)</sup>

**표 VI-2** 핵보유국들의 핵독트린 주요 내용

핵보유국	핵독트린	보유 탄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성이 확보된 대규모 핵전력 보유</li> <li>· 군사시설 또는 상대방 국민을 향한 1차 공격 능력 보유</li> <li>· 3축 체제(전략폭격기, ISBM, SLBM) 보유</li> <li>· 신 3축 체제(new triad: 타격력, 미사일방어,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li> <li>· 선제핵공격(1차 공격), 보복공격(2차 공격) 모두 가능</li> <li>· 핵확산 및 핵 테러리즘 예방</li> <li>·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 역할 감소</li> <li>· 핵전력 수준 감소, 전략적 억제와 안정 유지</li> <li>· 지역 차원 억제 강화, 동맹국·파트너들에 대한 안보보장</li> <li>·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핵무기 유지</li> </ul>	7,200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복공격(2차 공격) 중심의 독트린</li> <li>· 러시아 및 동맹에 대해 핵무기·WMD 사용하거나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 존립 위협할 경우 사용(2010. 2)</li> <li>· 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 비핵지대 협정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사용, 비핵지대 존중한다는 협정 서명</li> <li>· 3축 체제(전략폭격기, ISBM, SLBM)</li> </ul>	7,500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정책 공식선언 (1964)</li> <li>· 2013년 국방백서에서 NFU 정책 견지 의지 생략</li> <li>· 잠재 적국의 1차 핵공격 억제할 수 있는 최소 능력 보유</li> <li>· 보복공격(2차 공격) 능력 중점</li> <li>· 운반수단 현대화에 높은 비중 두고 개발 중</li> </ul>	260

R20160101059652083.HTML?from=search>. (검색일: 2016.5.20.).

<sup>307)</sup> 유지용,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 추세와 미중 경쟁,” 『KIDA 주간국방논단』, 제1551호(2015.1.26.), pp. 2~4.

핵보유국	핵독트린	보유 탄두
	· 미국, 러시아처럼 3축 체제 완성 목표	
프랑스	· 핵독트린을 명확히 천명 ·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 ① 프랑스를 침략하지 않는다면, ② 프랑스 영토와 군대, 안보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공격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③ 공격국가가 핵보유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면 · 프랑스 파리테러 이후, WMD 사용이 자행될 경우 핵무기 사용 옵션 제안 (2006. 1) · 기본적으로 보복공격(2차 공격) 수행 핵전력 보유 · 1996년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폐기 · 해군 전략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정책으로 변경 · 핵전력은 4대의 전략핵잠수함 운용과 항공기 탑재 순항 미사일	300
영국	· NPT 가입 비핵국가들에게 핵무기 불사용 ·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배제시키지 않음(2000. 5). ·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 · 불법국가, 영국군에게 WMD 사용할 경우 핵무기 사용 입장 · 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 비핵지대 협정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사용 협정 서명 ·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비핵지대 불사용 서명하지 않음. · 해상에 기초한 핵억제전략만 운영 ·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215
인도	· 보복력 중심의 최소 핵억제력 · 선제핵공격 불사용 · 공중, 지상, 해상 연계한 3각 체제 · NPT 미가입, CTBT 미서명국	110-120
파키스탄	· 공격적 방어 전략 · NPT 미가입	120-130

\* 출처: 정영태 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89-110.; 유지용,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 추세와 미중 경쟁,” 『KIDA 주간 국방논단』, 제1551호 (2015.1. 26.), pp. 2-4 참조.

한편 핵정책 선언 또는 의사표명 방식도 핵독트린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보통 핵전략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국의 공식적인 핵무기 관련

I  
II  
III  
IV  
V  
VI  
VII

정책 및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핵전략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당대회, 당대표자회, 당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주요 기념일(당 창건일, 공화국 창건일, 군 창군일, 선군절 등) 및 주요 정치 행사의 최고지도자 연설, 중앙보고회, 법령 등을 통해 핵전략 관련 내용을 표명하는 경우이다. 가령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과 4월 최고 인민회의를 통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 제정 등을 통해 핵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경우이다. 둘째, 군사·안보 관련 당국 이름의 성명 및 대변인 답변, 비망록을 통해 핵정책의 기초 및 안보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이다. 외무성,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전략군, 원자력총국, 공화국 정부 성명, 공화국 원자력연구원, 공화국 핵무기연구소 등 핵·미사일 관련 당국이 성명 및 답화 주체로 나서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유엔(UN) 총회 북한 대표 연설, 유엔군축위원회 연설, 주요 군사 도발에 대한 국제 비난에 대한 입장 표명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핵정책을 언급하는 경우이다.

### (3) 북한 핵독트린의 내용 변화 과정

북한의 핵전력 및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독트린의 내용은 200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개월 후인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답화를 통해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핵무기 개발 의사를 밝히며 극적으로 핵정책이 변경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북한이 ‘핵억제’를 공식적·대외적으로 주장한

것은 2003년 6월 외무성 담화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핵 개발 및 핵보유를 ‘억제력’ 차원에서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핵 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무기가 갖는 ‘억제력’에 대한 강한 신념이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자신의 핵 개발 및 보유를 정당화하고 그 사용 목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200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03년 이후 북한이 핵전략 및 핵독트린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이후 북한의 핵 관련 발언은 ‘자위적 핵 억제력’ 실현을 목표로 빠르게 진전돼 왔다. 2004년 7월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리비아식 선택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힌 직후 9월 27일에는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며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2009년 1월 16일에는 “핵억제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핵무기 영구 보유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이때까지 북한의 핵 관련 내용은 ‘자위적 핵억제력’, ‘핵무기 보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핵독트린이라고 보기에는 핵보유 목적, 핵무기 사용범주, 핵무기 관리, 국제적 핵규범 준수 등 기본적인 구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북한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핵독트린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인 2010년 4월 21일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서였다.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억제력을 보유할 것이며 핵보유국과 음모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 비확산 및 비핵화에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것 등을 밝힌다.<sup>308)</sup> 이때의 내용은 주로 핵무기 사용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히는 수준이지만, 핵무기 보유 목적, 핵무기 사용범위, 국제적 비확산 규범 준수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있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구체성을 갖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국 법령〉) 법령은 현재 까지 북한이 공개한 핵 관련 내용 중 가장 세부적인 핵독트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령’의 형태로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핵독트린의 확고한 의지와 규정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밝힌 핵독트린과 비교해도 핵무기 보유 동기, 목적, 사용범위, 국제적 핵규범 준수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어 핵독트린으로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09)</sup>

2013년 〈핵보유국 법령〉제정 이후 북한의 핵독트린은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다. 기존 핵독트린을 재확인하면서도 보다 공격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한다. 우선 핵타격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부터 미국이라는 적대국을 계속 지목해 왔지만, 2014년 이후로는 ‘백악관’, ‘펜타곤’, ‘태평양 미제 군사기지’, ‘미국 대도시들’,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있는 남조선 작전지대’,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 ‘남조선 미군기지’, ‘괌도’ 등 매우 구체적으로 타격 목표를 선정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310)</sup> 이런 핵 타격 대상의 선정과 세분

308) “조선반도와 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2010.4.21.

309) 이 법령을 통해 북한이 밝힌 핵독트린의 내용은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의 목적으로 정당한 방위수단으로서의 자위적 핵억제력, 적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억제력, 적의 공격에 대한 보복공격력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범위도 핵보유국의 침략과 공격에 대한 격퇴, 보복타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불사용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기술 및 핵물질의 이전을 하지 않고 핵 비확산을 위해 국제적 협조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310) 북한이 타격 대상을 세분화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전략군’의 존재를 드러내며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와 참관이 본격화된 시점과 중첩된다. 가령 2013년 3월 29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일출즉발 위기가 조성

화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확보,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정밀화 등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을 위해 과장되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으로는 ‘선제핵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침략에 대한 ‘억제’와 ‘보복’에 목적이 있음을 2013년 <핵보유국 법령>을 통해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제핵 공격 능력의 확대·강화, 선제핵공격 모의 훈련,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적들에 대한 선제타격’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공격적 발언을 통해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역시 압도적인 미국의 핵우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공격성을 언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세적 핵위협 담론이 갖는 표면적 공격성과 내적 필요 논리가 다를 수 있다. 공격적인 핵 언급은 매우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311)</sup>

세 번째로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보다 체계적으로 핵독트린 차원에서 핵군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3년 4월 <핵보유 법령>을

되자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여 화력타격 계획을 검토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아군 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지구 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며 세부적인 타격 대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신군조선의 승리를 확신시켜준 작전회의소식,” 『조선중앙통신』 2013.3.29. 이후 이와 같은 세부적인 타격 대상 언급은 지속적으로 반복 언급되고 있다.

<sup>311)</sup> 가령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는 국내외적 여건에 대한 자신감이 대미 허풍, 과신으로 나타나 소련의 군사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이른바 허풍전략(Biggest-Bang-Strategy)을 취한 바 있다. 북한의 공격적 핵 언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허세’나 ‘과장’된 핵사용 위협 담론을 기반으로 오히려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논리로도 볼 수 있다. 연현식, “소련 핵 전략과 군사 독트린의 변천 - 스탈린시대부터 엘친의 CIS까지 -,” 『국방논집』, 제17호 1992년 봄, p. 351.

I
II
III
IV
V
VI
VII

통해 핵군축과 관련 국제적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같은 해 10월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핵군축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이 핵군축을 내세우는 의도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동등하게 군축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프레임으로 핵군축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핵군축 프레임 안에서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핵독트린이 보다 대외적 협상의 포석 형태로 변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3** ▶ 북한의 주요 핵독트린 내용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2002. 3. 9		부시 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 - 핵선제 사용 가능대상 7개국(북한 포함)	
2003. 1. 10	정부 성명	NPT 탈퇴선언 -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으며...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	· 핵무기 개발 의사 없음. · 핵 평화적 이용
2003. 6. 18	외무성 대변인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	· 자위적 핵억제력
2005. 2. 10	외무성 성명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	· 핵무기 보유 선언
2006. 10. 9	조선중앙통신 보도	1차 지하 핵실험	
2009. 1. 16	외무성 대변인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 자위적 핵억제력 · 핵무기 영구 보유 의사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2009. 5. 25	조선중앙통신 보도	2차 지하 핵실험	· 자위적 핵억제력
2010. 4. 6		오바마 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 소극적 안전보장에서 북한 제외	
2010. 4. 21	외무성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 (1) 비핵화 실현 위한 신뢰조성 조건은 평화협정 (2) 조선반도 및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으로 침략과 공격 억제·격퇴 (3) 핵보유국과 아합하여 북한 반대 하는 침략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위협하지 않음. (4) 다른 핵보유국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 핵전파방지와 핵물질 안전관리 노력 옹의 (5) 핵군비경쟁 참여하거나 핵무기 과잉생산 않으며 국제적인 핵군축노력 참가	· 핵무기 영구 보유 · 비핵국가 핵무기 사용금지 · 국제 비확산·비핵화 참여
2013. 2. 12	조선중앙통신 보도	3차 지하 핵실험	· 자위적 핵억제력 · 다중화된 핵억제력
2013. 4. 1	최고인민회의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 제정 (1) 핵무기는 미국 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수단 (2) 핵무력은 세계 비핵화 실현 때까지 침략과 공격 억제, 섬멸적 보복타격 복무 (3) 핵억제력과 핵 보복타격력 질량적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 강구 (4) 핵무기는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	· 자위적 핵억제력 · 선제공격 억제력 · 보복공격력 · 적대적 핵보유국 침략·공격 격퇴 및 보복타격용 사용 · 비핵국가 불사용, 불위협 · 핵확산 방지 노력 · 핵군축 적극 지지

I
II
III
IV
V
VI
VII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5) 적대국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침략 및 공격행위 가담하지 않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 무기 사용 및 위협 안함. (6)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 시험 안전성 보장 규정 엄격히 준수 (7) 핵무기 기술, 핵물질 비법적 누출하지 않을 것 (8)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 (9) 핵군비경쟁 반대, 핵군축 국제적 노력 적극 지지	
2013. 4. 4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식 첨단핵타격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2014. 7. 28	항병서 총정치국장	“만약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핵 타격 수단을 가지고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한다면 우리 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 미제의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	· 핵 선제공격 시사
2016. 1. 6	정부 성명	4차 지하 핵실험	· 핵무기 선제 불사용 · 핵포기 의사 없음. · 핵억제력 강화
2016. 5. 7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 제국주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 되는 한 핵무력 강화 ·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핵억제력 ·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 · 핵전파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 ·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 핵무기 영구 보유 · 자위적 핵억제력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2016. 6. 23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중거리미사일(화성-10호) 시험발사 지도 - “선제핵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 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 하여야 한다” -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도와 유일적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	· 선제핵공격 능력 확대강화 · 핵무기 당 직할 관리체계
2016. 8. 25	노동신문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 - “예고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래와의 전면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개발에 총력을 집중...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데 대하여 지시”	· 핵무기 실전 배치 · 운반수단 다종화
2016. 9. 6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 로켓발사 훈련 지도 -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 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 선제핵공격 시사
2016. 9. 9	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5차 지하 핵실험	· 핵무기 양산체계 · 핵무기 실전화 · 자위적 핵억제력 · 핵무기 증강 지속

출처: 저자 작성.

한편 북한은 2013년 6월, 39년 만에 수정된 북한 통치의 핵심 강령인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서문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경제를 갖추게 됐다”고 명기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을 개정

I
II
III
IV
V
VI
VII

하며 서문에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확고히 할 것을 명기하였다.<sup>312)</sup> 종합해 보면, 김정은 정권 들어 당규약, 당의 전략적 노선, 헌법, 법률, 〈10대 원칙〉 등 거의 모든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규범에 ‘핵보유’ 및 ‘핵무력’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북한에서 핵무력이 대외적인 군사·안보적 무기 이상의 체제 통치수단의 근간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사실상 김정은체제의 존립기반은 수령체제와 핵·미사일을 앞세운 군사 국가라고 할 수 있다.<sup>313)</sup>

## 나. 공격적 핵독트린과 대외전략

### (1) ‘핵인질’에 기초한 ‘선제핵타격론’ 강화

북한의 핵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 방위 강화, 군사력 증강, 핵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화하면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 위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더욱 방어적 위협을 하는 속성이 발견된다. ‘방어적 위협’은 약자가 강자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방어적 차원에서 허세와 과장된 위협 담론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군사전략, 군사독트린, 외교독트린, 핵독트린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여기에 반응하여 자신의 군사전략 및 핵독트린으로 대응하며 내용을 구체화해 온 측면이 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의 체제붕괴 및 정권 제거 전략, 북한 불인정 전략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방어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고 볼 수 있다.

<sup>312)</sup> 『조선로동당 규약』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개정) 서문.

<sup>313)</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5-25 2015.9.21), p. 3.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의 핵전략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해 온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의 핵독트린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공식담론을 통해 표명하는 미국 핵문제에 대한 비난 논평은 북한의 정책적 대응방침도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314)</sup> 부시 2기 등장을 기점으로 북한은 미국의 ‘선제핵타격론’에 경도되면서 사실상 핵무기 고도화를 미국의 핵전략 추이에 따라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sup>315)</sup>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선제핵타격론’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년 <핵보유국 법령>을 통해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행위도 가담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비핵국가인 한국, 일본 등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공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이런 조건을 생략한 채, 핵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핵 선제공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은 보통 군사전략상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적의 선제공격을 허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적이 먼저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16)</sup>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독트린화할 경우, 적국은 상대가 밝힌 이 독트린 때문에 향후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도래할 가능성이

314) 이종구, “북한 핵정책 동향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1998.1-2007.8),” 『통일연구』, 제15권 제1호(2011), p. 87.

315)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사시 핵무기 사용의 대상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북한, 이라크, 시리아 등 7개의 불량국가(와 악의 축)를 지목하기도 했다.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 383.

316) 위의 책, p. 216.

I
II
III
IV
V
VI
VII

예상될 경우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역시 마찬가지로 선제공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제공격은 적의 공격 압박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기초할 필요가 있고 자위권 차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정당성이 치명적으로 훼손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살상에 대한 윤리적 책임 역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제공격은 적의 핵무기 시설 및 은닉 장소에 대한 완벽한 파악과 타격의 확실성이 없으면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sup>317)</sup> 그런 측면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압도적인 확실한 군사적 우위나 전폭적인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면 내세우기 힘든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 2016년 1월 7일 제4차 핵실험 이후 9월 9일 제5차 핵실험까지 여러 성명과 주요 매체를 통해 수시로 ‘선제핵타격’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7월 20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에 대한 김정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 소식을 전하며 김정일이 ‘전략군 화력타격계획’이라는 한반도 작전지도를 펼쳐 놓은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천명한 것과 달리 상황에 따라 공격적인 ‘선제핵타격’을 고려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무기 1, 2차 공격 능력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기지, 본토 대도시의 주요 시설, 동맹국 미군기지

<sup>317)</sup> 한인택,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JPI 정책포럼』, 117권(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3), p. 27.

등을 목표로 하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왜 밝히고 있는 것일까.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 밝혀 온 핵무기 관련 공식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억제 최소목표는 핵무기의 사용위협을 통해 상대국(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고, 최대목표는 모든 침략행위와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sup>318)</sup> 소위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억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선제공격 능력을 신장하는 것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제3차 핵실험 이후 2014년부터는 1차 공격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2016년 들어서는 '자위적 핵억제력'과 '선제공격 능력 확대·강화'를 자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일단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력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1차 공격을 목표로 핵독트린을 수립하는 것은 군사전략상으로 무모하거나 효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2차 공격능력의 경우에도 미국의 1차 공격에 의해 사실상 북한 핵능력이 거의 궤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공격력을 확보하는 생존력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1차 선제공격이나 2차 보복공격 중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둔 독트린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압도적인 핵우위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단히 핵무기 및 발사체의 사거리 연장, 다종화, 기동성, 은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 및 한국의 미군 기지를 '인질'로 한 1차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북한만을 비교했을 때,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의 확장억제(핵

<sup>318)</sup> 정영태 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p. 124.

I
II
III
IV
V
VI
VII

우산)의 강력함에 비해 열세이긴 하지만 이런 열세를 지정학적 조건이 만회하는 부분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 대치와 지리적 인접성,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 연접, 일본과 미국의 포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의 전략적 효용성은 단순히 북한 대 미국이라는 두 국가의 군사력 또는 핵능력의 비교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지정학적 조건, 군사지리적 조건은 효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은 미국 및 한국의 대도시 파괴전략(counter-city strategy)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sup>319)</sup>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핵전략 운용은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어 미국과의 핵 비대칭에도 불구하고 억제력을 갖는 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선제핵타격' 주장이 가진 이중적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핵 불사용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공격행위에 가담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비핵국가에 대한 완전한 핵 불사용 원칙이 아니라 조건부 핵 불사용 원칙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염두에 둔 핵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한국을 비핵국가로 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북한은 최소한의 2차 공격능력을 확보하는 '생존력'을 갖기 위해 은밀성과 공격성이 높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직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아 다탄두재돌입탄도미사일(MIRV)에 이르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지만, 이와 유사한

---

<sup>319)</sup> 황병서는 2014년 7월 28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보고에서 “만약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핵 타격수단을 가지고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한다면 우리 군대는 악의 충분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 미제의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능을 하는 미사일 동시 투발 등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6년 7월 19일 발사 시험한 노동 미사일 2발의 경우 동시에 발사되고 유사 탄착점에 낙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2) 신뢰성과 구체성의 확보전략

북한은 자신이 주장하는 핵독트린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훈련 지도 및 참관이 비슷한 시기에 증가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및 군사훈련 지도를 통해 핵독트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가령 2016년 3월 11일 김정은의 전략군 탄도미사일(스커드계열) 발사 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며 “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며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 등 세부적인 핵운용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다.<sup>320)</sup> 이 내용만 보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다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상, 공중, 해상 등에서 ‘임의의 순간’(은밀성)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이고 현실화되었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의 지도라는 형식을 통해 보다 구체적

<sup>320)</sup>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황병서, 리병철, 홍승무, 김정식, 윤동현 등 동행)과 ‘인민군 탱크병 경기대회-2016’(황병서, 박영식, 리명수 등 맞이) 참관,” 『조선중앙통신』, 2016.3.11.

I
II
III
IV
V
VI
VII

이고 세부적인 핵독트린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자신이 보유한 핵위협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이 핵억제력의 심리적 요소, 즉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상대방에게 입증해 주어야 한다는 일반 핵억제력의 원리를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21)</sup> 지속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위협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다. 핵무기 고도화와 통치전략

### (1) '수령보위' 차원의 핵독트린 구성

지도자의 연령은 중장기적 집권 구상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는 생물학적 수명과 통치 기간 등 '시간에 대한 인식' 속에서 통치를 구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집권을 염두에 둔 통치 구상을 할 것이며, 그 기간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다. 대외 관계 및 대남관계에서 경험과 연륜이 없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선부른 대외적 관계 개선 행보보다는 내부적으로 장기 집권에 필요한 통치기반을 확고하게 공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는 장기 통치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다룰 줄 아는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내적인 결속으로 유도해 내며,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정권안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나이의 김정은은

<sup>321)</sup> 김성철,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p. 126.

당분간 철저하게 핵무기 고도화와 대내결속에 집중하는 통치 구상에 따라 움직임 가능성이 높다.<sup>322)</sup>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김정은 정권 들어 표방하고 있는 핵독트린은 과거와 달리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경제·핵 병진노선’은 과거 김일성 시대의 병진노선과 일정하게 차별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 과거의 병진노선은 외부 안보환경 악화에 대한 군사력 강화라는 방어적 성격을 가졌다면,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무력 증강이라는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전제하는 공격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병진노선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 포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이었다면,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안보 강화, 정권 및 리더십안보 안정, 경제문제 해결 등을 도모한다는 ‘통치전략’, 군사·안보전략, 경제전략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분야 정책에 대해서 훨씬 규정력이 강하고 노선 변화의 융통성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독트린은 핵무기를 ‘리더십안보’와 동일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란 수령의 안위 또는 보위에서 핵무기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일시하고 있는 경향도 발견된다. 보통 핵 개발 및 운용전략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며 지휘·통제 역시 특정 정권이나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략화하여 운영한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다.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의 리더십안보(수령보위)와 정권안보, 국가안보를 동일시

<sup>322)</sup> 홍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북한 국내 차원,”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동국대 무기체계와 한반도 분단 학술회의 발표집, 2016.1.26.), p. 39.

I
II
III
IV
V
VI
VII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리더십안보 차원에서 핵독트린을 구성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핵 개발, 핵운용, 핵지휘통제를 지도자가 직접 관장하는 매우 폐쇄적인 운용체계를 가지고 있다. 핵무기체계 전반이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계인 것이다. 이런 구조는 핵독트린의 공격적 성격뿐만 아니라 핵정책의 자의성을 강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핵무기가 ‘수령보위’라는 리더십안보 차원에서 존재이유를 갖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통해 구축된 가산제적 국가시스템과 상징권력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리더십안보 논리가 핵무기 개발·운용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 리스크, 비용의 압박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위협 감소가 핵무기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핵 폐기로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북한체제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핵독트린의 표면적인 내용이 기존 냉전시기의 핵교리나 억지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내적 논리구조나 운용규범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실제 훨씬 더 호전적인 핵운용 논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핵공갈’이 리더십안보와 핵무기를 동일시하는 북한체제에서는 단순히 대외적 협박카드만이 아닌 정상적 핵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지정학적 역학이 그런 공격성을 심분 활용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냉전시기 도출된 핵교리나 일반적인 억지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수령제’라는 리더십안보로 구조화된 북한체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것은 일반적인 핵교리나 억지이론과는 다른 예외성이나 돌출성, 즉흥성, 지정학적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전략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 (2) 항구적 비상사태의 국가 창출

핵무기는 그 사용으로 인해 상호 절멸할 수 있다는 ‘공포’를 통해 효용이 극대화되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파국’을 물리적으로 응축하여 수단화시킨 경우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외상태(exceptional status)를 상례화하도록 한다. 이를 조르주 아감벤(G. Agamben)은 “핵시대에 입헌적 비상 권력의 사용은 예외가 아니라 상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23)</sup> 따라서 핵무기의 효용성은 ‘파국’의 예고 또는 죽음의 미래를 통해 작동하고 드러나는 한편, 그것은 존재가 인지되거나 의심되는 한 현재를 끊임없이 예외상태에 머물게 하는 힘을 갖는다. 핵무기는 직접적인 사용 전, 유예된 ‘사용’을 통해 예외상태를 상례화한다는 점에서 행위성(agency)을 갖는 것이다.<sup>324)</sup>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사회를 예외상태의 극단으로 몰고 가고 그것을 상례화하는 하나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이자 통치의 장치로 볼 수 있다.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북한의 존재를 알리는 알레고리(장치), 생존의 논리를 번역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실험은 북한에게 있어 일종의 정치적 제의와도 같다. 내외 부적인 체제 유지의 위협들을 핵무기로 응축하고 사회질서를 재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또한 세계의 시선을 핵실험에 주목하게 하고 핵무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체제 생존의 논리를 번역해 내는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가 강고하게 예외상태를 통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회임을

<sup>323)</sup> 조르조 아감벤 저·김향 역,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p. 27.

<sup>324)</sup>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2013), p. 300.

I
II
III
IV
V
VI
VII

드러내는 한편 한반도 분단체제가 예외상태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통해 그 예외상태가 보다 확고한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sup>325)</sup>

보통 핵무기 개발 국가들은 개발 과정을 은폐하거나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미사일과 같은 전략자산은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암시하는 수준에서 전략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등 핵무기 고도화 프로세스의 과정을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대내외에 공개하여 과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고체연료를 이용한 로켓엔진과 핵탄두 기폭장치의 원형물체 등 일반적으로 기밀로 다룰 만한 사안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sup>326)</sup>

앞서 언급했듯이 핵억제가 실제 가능하려면 첫째, 핵무기 사용 의지, 둘째, 위협의 신뢰성, 셋째, 2차 공격능력 등을 보유해야만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의 세 가지를 보여주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대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통해 위협이 실질적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사거리별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다종화’된 무기 개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격역제 및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게임을 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sup>327)</sup>

이와 관련 북한은 보통 대내외적으로 군사·안보와 관련하여 ‘고도의 격동상태’ 유지를 강조하곤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의 격동상태’는

<sup>325)</sup> 위의 글, p. 300.

<sup>326)</sup>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이다.” 『로동신문』, 2016.4.26.

<sup>327)</sup> 정영태 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pp. 69~70.

대내외적인 의도 모두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대내적으로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격동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 향해 언제든 위협에 대해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핵무기(핵보유)를 통치 차원에서 내부적인 프로파간다와 대외적인 선전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예외상태의 국가를 창출함으로써 영구적 통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28)</sup> 예외상태의 국가란 내부적으로 항시 비상사태의 상황이 유지되고 외부적으로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가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핵무기는 이런 비상사태, 예외상태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군사·안보 분야

#### 가. 핵무기 고도화와 군사전략의 변화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면서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sup>329)</sup>상에서

<sup>328)</sup>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수호와 통치 목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가령 2016년 7월 3일 첫 ‘전략군절’을 맞아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가장 강위력한 타격무력이며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핵보검이다”이라고 칭송하여 핵무기를 미래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조선인민군 전략군,” 『로동신문』, 2016.7.3.

<sup>329)</sup> ‘군사전략’은 전시상황에 따라 군사력을 적용하는 기술을 협의의 군사전략이라고 하고, 평시에는 이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광위의 군사전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평시에 군사력을 건설하고 전시 군사력을 운용, 즉 적용하는 기술 또는 술(Art)과 과학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군사 전략을 그것을 구성하는 3요소로 목표, 수단, 방법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I
II
III
IV
V
VI
VII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군력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말 처음 언급<sup>330)</sup>하기 시작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에서 4대 전략적 노선은 ① 정치사상의 강군화, ② 도덕의 강군화, ③ 전법의 강군화, ④ 다병종의 강군화이며, 3대 과업은 ① (인적 요소) 사상무장의 강조, ② (무기성능) 과학기술의 발전, ③ (운용능력) 실질적 훈련 등으로 알려졌다.<sup>331)</sup>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은 ‘실전능력’과 군중 및 병종간 유기성을 강조하는 전법이나 조직적 측면의 강조, 인적요소·무기성능·운용능력 등 실전적 측면의 강조, 그리고 군사력 전반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노선’이란 측면에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내놓은 군사 관련 지침<sup>332)</sup>과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sup>333)</sup>

특히 ‘다병종의 강군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종(兵種)은 보병, 포병, 공병 등의 병과의 종류를 뜻하는데, ‘다병종’은 2014년부터 김정일의 군사부문 연설 및 현지지도 보도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기동성을 갖는 기동부대와 화력의 증강 등 각 병종의 능력 강화와 배합 능력 향상 차원에서 “군중·병종·전문병들 사이의 협동동작 완성”,

---

‘수단’으로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무기체계의 도입과 사용 등이 들어가며, ‘방법’으로는 소모전, 섬멸전, 역공격, 포위, 지연전, 지역방어, 파비안 전략 등 실제 싸우는 전술적 부분을 의미한다. 김정익,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개념의 차이,” 『KIDA 주간국방논단』, 제1528호 (2014.8.18), pp.3~4.

<sup>330)</sup> 김정은이 2014년 12월 1일 인민군 제963부대 직속 포병중대를 시찰하면서 처음 언급함.

<sup>331)</sup>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2015), p. 94.

<sup>332)</sup> 김일성 5대 훈련방침은 강인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무쇠 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 강철 같은 규율 등이며, 김정일 4대 훈련원칙: 주체성의 원칙, 정치사상성의 원칙, 전투성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 등이다.

<sup>333)</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5-25, 2015.9.21), p. 2.

‘다병종화’되고 ‘다기능화’된 전투원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병종간 유기적 협동전술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참관 하에 이루어진 각 군종, 병종간 연합훈련, 쌍방실동 훈련<sup>334)</sup>, 전투태세검열, 불시에 이루어지는 김정은의 부대방문 및 훈련 검열 등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sup>335)</sup>

정리하면, ‘다병종의 강군화’는 새로운 병종의 신설, 여러 병종의 균형 있는 강화, 각 병종간 유기적인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 등과 최근 제4군종으로 추가된 전략군 등 군종 사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전술(혼종적 작전술)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군단 6개를 감축하고 전방 배치 전력을 3단계에서 2단계 타격체제로 통합하고 경보병부대를 증강하면서 공세적인 기동전력 위주로 재편하였던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군종, 병종간 체계를 재편성해 왔고 김정은 정권 들어 ‘실전능력’을 기준으로 이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36)</sup>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군사지리적 조건 아래 한국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핵무기 우월을 기초한 공격 행위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험주의적, 호전적, 공격적인 핵담론이 가능한 것은 남북한이 인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군사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억지이론 적용이 힘든 이유가 있다. 북한에 대한 강압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압하는 주체에게 치명적으로 약한 고리가 없어야 그것이 먹힐 수 있는데, 한반도는 그것이

334) 2개 이상의 부대가 실전 상황을 가정해 공격과 방어 연습을 하는 훈련

335)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2.

336) 위의 글, p. 2.

불가능하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핵무기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통한 보복능력 또는 2차 공격능력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래식 무기에 의한 한반도 초토화 능력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이해를 구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적 구도를 재창출하는 것은 외교적 고립무원에 있던 북한에게는 새로운 돌파구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파급영향과 관련하여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전쟁 수행전략의 기본적인 변화이다. 북한의 전쟁수행전략은 이제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 개념 및 전쟁수행 개념을 핵심으로 할 것이다. 다양한 비대칭 전력과 군사지리 및 지정학적 조건을 이용한 공격적 군사전략을 중요시하겠지만, 핵능력을 전략적 중심축으로 운용하는 전쟁 전반에 대한 수행 개념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기존 냉전시기의 핵무기 운용전략, 핵강대국 핵운용전략과는 매우 다른 호전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무기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 비용을 최대한 증폭시켜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한미의 행동을 억제하고 제약하고자 할 것이다.<sup>337)</sup>

## 나. 핵무기 고도화와 '전략군'의 역할 강화

### (1) 전략군의 창설과 대외 공개

북한은 2016년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절을 제정할 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177호)을 발표

---

<sup>337)</sup> 박창권,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이 갖는 안보적 도전과 한국의 포괄적 대응 전략,” 『KIDA 주간국방논단』, 제1630호 (2016.8.1), p. 5.

하고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지정한 바 있다. 6월 26일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1999년 7월 3일 독자적인 군종인 전략로켓트군을 창설” 하였다고 설명하며, 김정은이 여기에 “조성된 정세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들을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전략군은 소형화, 정밀화된 핵타격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sup>338)</sup> 이어 2016년 7월 3일 첫 ‘전략군절’을 맞아 노동신문은 전략군을 “가장 강위력한 타격무력”,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핵보검”으로 한껏 추켜 세웠다.<sup>339)</sup>

북한의 전략군은 핵·미사일 전력 운용을 전담하는 제4군종으로 현재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주도하는 핵심 부대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부대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군단급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핵·미사일 고도화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창군일(4월 25일), 선군절(8월 25일) 등과 별도로 하나의 군종(軍種)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전날을 전략군절로 제정한 것은 의도성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략군(창설 당시 전략로켓트군)의 창설을 1999년 7월 3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창설 배경과 유래는 밝히지 않고 있다.<sup>340)</sup> 여하튼 북한에서 전략군이 그 실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2012년 3월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전략로켓트사령부’ 시찰 소식부터이다.<sup>341)</sup>

<sup>338)</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6.26.

<sup>339)</sup>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조선인민군 전략군,” 『로동신문』, 2016.7.3.

<sup>340)</sup> 실제 전략군이 이 때 창설되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창설은 김정은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일부러 전략군의 역사를 김정일 시기로 소급하여 핵·미사일 고도화의 역사적 성과를 아버지와 공유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I
II
III
IV
V
VI
VII

전략로켓사령부는 기존의 미사일지도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보이며,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 “영용한 육·해·공군 그리고 전략로켓군”이라고 직접 호명하면서 전략로켓군이 새로운 군종임을 알린 바 있다.<sup>342)</sup>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직후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2013년 3~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샤이엔 공격형 핵잠수함, 최신예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Raptor) 등을 동원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과시한 바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하면 3대 핵전력 중 핵심이 되는 전략폭격기와 전략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 등이 모두 나온 것이다.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선제핵타격’ 전략이라고 비난하며 ‘전략군’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 본토, 하와이, 괌 등 미군 기지들과 남한 등 ‘적 대상물’ 등을 타격할 전략로켓군과 야전 포병군에게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면서 전략군이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이때 북한은 괌을 사정거리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는 데 이때 역시 전략군이 그 역할을 했다.<sup>343)</sup>

이어 2014년 5월 29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전술로켓 발사 훈련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다. 이로써 ‘전략로켓사령부’ → ‘전략로켓트군’ → ‘전략군’의 명칭 변경을 통해 제4군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령관계급도 소장(별 1개)에서 상장(별 3개)로 격을 올렸다.<sup>344)</sup> 이후 전략

<sup>341)</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3.

<sup>342)</sup> <http://blog.naver.com/shinnakhyung/220149608887> (검색일: 2016.9.30).

<sup>343)</sup> <http://blog.naver.com/shinnakhyung/220149608887> (검색일: 2016.9.30).

군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등장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체계 운용의 핵심 부대로 활약하고 있다.

## (2) 전략군의 기능과 미사일 도발의 증가

‘전략군’의 신설 및 체계화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부대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다중화된 타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력한 지상·공중·수중의 전략적 타격수단을 기둥으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더욱더 완벽하게 강화”<sup>345)</sup>하겠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전략군은 핵전력 전반을 증강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핵무기 고도화 단계에 따른 조치이며, 대외적으로 ‘전략군’이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과시하는 효과를 갖는다.<sup>346)</sup>

표 VI-4 ▶ 북한의 소형화·경량화·다중화·정밀화에 대한 개념화<sup>347)</sup>

핵무기 고도화 내용	
소형화	· 핵탄의 폭발력 15kt 이하인 무기 제작 <sup>348)</sup> · 핵무기 사용의 정치·군사적 목적 달성 - 폭발력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실제로 쓰기 어려움. · 경제적 효과성 제고 목적 (50kg 1개 → 5kg 1개 원자폭탄 제작 생산비 1/10 감소)
경량화	· 핵탄의 총체적 질량을 가볍게 만드는 것 · 야금기술 이용 탄두 외피 무게 감소

<sup>344)</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5-25, 2015.9.21), p. 3. 전략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락겸은 2014년 2월 15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상장의 군사칭호를 수여받았다.

<sup>345)</sup> 2015년 5월 20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sup>346)</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4.

<sup>347)</sup>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중화·정밀화,” 『로동신문』, 2013.5.21. 요약 및 정리.

### 핵무기 고도화 내용

다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 만들기</li> <li>· 원자핵 반응반식: ① 원자폭탄 ② 수소폭탄 ③ 중성자탄</li> <li>· 파괴력 및 사거리</li> <li>① 전략핵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산업중심지, 지휘중추, 핵무력집단 등 전략적 대상물 타격 목적</li> <li>- ICBM, 사거리 6,400km 이상 (지대지미사일, 전략폭격기, SLBM)</li> </ul> </li> <li>② 전술핵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선이나 화력기재, 탱크, 함선, 지휘소 등 타격 목적</li> <li>- 전술미사일, 원자포, 전투폭격기, 유도어뢰</li> </ul> </li> <li>③ 전역핵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규모 전쟁, 중거리 운반수단 핵무기</li> </ul> </li> <li>· 핵폭발 장소: ① 공중 ② 지상 ③ 지하 ④ 수상 ⑤ 수중핵탄 등</li> <li>· 핵탄의 형태와 용도: ① 핵탄두 ② 핵폭탄 ③ 핵포탄 ④ 핵유도어뢰 ⑤ 핵조종지뢰 등</li> </ul>
정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폭발 정확성 및 목표물 명중도</li> <li>· 핵폭발이 더 위력하게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li> <li>· 대상물을 정확히 명중하는 것</li> </ul>

전략군은 북한의 핵무기체계의 기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핵전력 증강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당 군수담당비서(리만건)와 당 군수공업부(부부장 리병철, 홍영철, 홍승무)를 중심으로 핵 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국방위원회 산하 제2 경제위원회(위원장 조춘룡, 산하 8개 총국 및 제2자연과학원)가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고, 내각 원자력공업성(구 원자력총국 또는 131지도국, 2013년 4월 확대·개편, 리제선)이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당이 직접 관리하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 상장)이 결합됨으로써 군사·기술적 차원에서의 핵무력 증강 및 고도화의 축들이 외형적으로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sup>349)</sup>

<sup>349)</sup> 북한은 1kt을 극소형핵탄, 1-15kt을 소형핵탄, 15-100kt을 중형핵탄, 100-1MT 이상을 초대형핵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전략군은 확대·개편 이후 김정은의 지도 아래 2014년 6월 5년 만에 스커드미사일 발사 재개 및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2013년~2016년 미사일 발사 횟수가 증가했다. 발사 횟수로 보면 2013년에 비해 2~3배, 발사 수량으로는 많게는 10배까지 급증했다. 이런 발사 횟수와 수량의 증가는 전략군 확대·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전략군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북한이 전략군을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화한 것은 핵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체계 기술력과 능력을 보유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외부에 대한 위협 인식이 작동하면서 전략군을 억제 수단 중 하나로 공개 및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350)</sup>

349)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4.

350) 2014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와 양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2012~2013년 전략군의 존재를 북한이 공개하기 시작한 것을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의한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한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2014년 총 18회에 걸쳐 18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것이 한미연합군의 상륙작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300mm 방사포 등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반거부’ 훈련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 군사 당국은 2012년 ‘쌍용훈련’으로 불리는 대규모의 해병대 상륙훈련을 포함 일원에서 실시한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이 동해부터 밀고 들어올 것에 불안해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하는 대규모 반상륙작전을 2013년부터 진행한다. 2013년 3월 쌍용훈련을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적 상륙 집단을 해상에서 타격 소멸하는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소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미 연합군이 상륙하기 전에 해상에서 북한 포병이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동원해 일제사격으로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안했는지 2014년 3월에 북한은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 연합군을 타격하기 위해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사정거리 1,000킬로미터에 달하는 노동미사일을 평소 사격하는 고각인 45가 아니라 70도까지 높여 사거리를 650킬로미터로 줄인 새로운 전술까지 시험해 보았다. 이 한 해에만 북한은 각종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111발이나 동해에 퍼부었다. 북한은 한국에서 KN-01로 불리는 사정거리 100킬로미터의 실크웜(Silk Worm)과 같은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전력만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을 차단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다급해진 김정은은 북한이 가진 모든 화력을 바다에 일제사격으로 퍼부어대는 대규모 훈련으로 응수했다는 것이

I
II
III
IV
V
VI
VII

표 VI-5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와 수량

연도	발사횟수	수량	발사체 유형
2003	4	4	단거리
2004			
2005	1	1	
2006	3	10	중거리
2007	3	4	단거리
2008	3	5~수발	단거리
2009	7회	23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2010			
2011			
2012	2	2	장거리
2013	6	15~수발	단거리, 방사포
2014	18	183	프로그, 단거리, 방사포
2015	8	27	단거리
2016	15	30	장거리, SLBM, 무수단, 단거리,

출처: 저자 작성.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한 내륙 방향으로 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등 순서로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사일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벨트 내에서도 전술적인 이동을 통해 미사일의 운용을 유연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거리 투발 능력을 시현해 주일미군 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유사시 해상으로 이동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sup>351)</sup> 각도 조정, 발사 위치 이동, 연료량 조절 등을 통해 다양한 목표지점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지속할 것이다. 주한 미군 및 한미동맹, 주일미군,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 및 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김중대, 『안보전쟁』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6), pp. 4~7.

<sup>351)</sup> 김진무 외, “2016년 상반기 정세 평가와 전망: 북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6.7.18., pp. 4~5.

### (3) 소련과 중국의 사례: 로켓군·제2포병·전략군

북한의 전략군 신설은 과거 소련, 중국이 핵무기를 다중화, 첨단화 하면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군사전략 차원에서 전략 로켓부대를 창설했던 사례와 유사하다.<sup>352)</sup> 소련의 경우, 핵·미사일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195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형태의 군종 및 병과의 창설을 진행하면서 1959년 전략로켓군을 창설한 바 있다.<sup>353)</sup> 소련의 전략로켓사령부는 SS-7, SS-8, SS-9, SS-13 등 사정거리 7,500마일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SS-4, SS-5 등 사정거리 1,200~1,300마일의 중거리 미사일을 관할하면서 핵전쟁 발발시 단기간에 적대국의 군사 및 경제시설과 핵심 군사력을 파괴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전략로켓사령부에 대한 지휘체계는 여타 육해공군 및 방공군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해서 국방상 → 총참모장 → 전략로켓사령관으로 이어지도록 되었다.<sup>354)</sup>

중국의 경우, 1956년 전략미사일 무기 개발, 1959년 지대지 미사일 부대 창설, 1964년 핵실험 성공 이후 1966년 7월 ‘제2포병부대’를 공식적으로 창설한 바 있다. ‘중국의 제2포병부대는 핵탄두 및 미사일 전력을 관할하기 위한 군사기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창설되었다. 제2포병 예하에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대륙간

<sup>352)</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4.

<sup>353)</sup> 소련 전략로켓군의 최고위직은 원수 칭호를 가진 총사령관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3개의 로켓군, 3개의 독립 로켓군단, 10-12개의 로켓사단, 3개의 대형 로켓 사격장과 다수의 과학연구소 및 교육기관들로 구성되었다. 총 병력은 창군 당시 약 35만 명 규모였고, 최대 50만 명에 이르렀다. 전시 전략로켓군은 최고사령관을 통하여 국방 회의에 의해 통제되며, 전략로켓군의 대량 사용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방회의, 즉 정치국에 의해 결정되었다.

<sup>354)</sup> Albert Seaton & Joan Seaton, *The Soviet Army: 1918 to the Present* (New York: Nal Books, 1986), p. 181; 박영준,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핵정책 전개과정 비교 - 북한 핵전력 및 핵전략 평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 발표집), pp. 169~170.

I
II
III
IV
V
VI
VII

탄도미사일 부대가 6개 기지로 나뉘어 배속되었다.<sup>355)</sup> 1985년 6월 지휘 및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기존 7대군구(大軍區)를 5개 전구(戰區)로 개편하고 핵·미사일 운용 부대인 제2포병을 핵전략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으로 확대 개편했다.<sup>356)</sup>

그림 VI-1 러시아·중국·북한의 전략군 창설 과정



출처: 저자 작성.

<sup>355)</sup> 요녕성 선양기지(한반도, 일본, 러시아 극동 지방 사정권 미사일), 안휘성 황산기지 (타이완 사정권 미사일), 연야의 쿤밍기지(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사정권 미사일), 광해성 시닝 기지(중아시아 및 인도), 헤난성 뤼양기지 및 후난성 후아이화 기지 (러시아, 유럽 사정권 미사일) 등이 있다. David Shambaugh,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Berkeley of California Press, 2004), pp. 166~169; 박영준, 위의 글, p. 172.

<sup>356)</sup> “中 새해 첫날부터 전방위 군사굴기... 핵공격방어 ‘로켓군’ 창설,” 『연합뉴스』, 2016. 1.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1/0200000000AKR20160101059652083.HTML?from=search>>. (검색일: 2016.5.20.).

소련, 중국 모두 전략로켓부대가 창설된 이후 핵 억제력 및 핵무기를 통한 반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sup>357)</sup>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비행체(MIRV)를 차례로 구비한 바 있다.<sup>358)</sup> 특히 주목할 점은 소련과 중국 모두에서 전략로켓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외에 별도 군종으로 취급되고 군이 아닌 국가지도부(당)가 직접 통제하고 관할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전략군 역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당이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는 점과 동일하다. 중국, 소련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전략군 역시 핵실험 및 ICBM 능력 등 무기체계 진화에 따른 군사전략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무기 삼원체계(ICBM, SLBM, MIRV)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도약을 통해 이후 핵잠수함을 도입하여 이것을 전담하는 부대를 편성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은 향후 인공위성 발사 시험을 할 경우,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비행체(MIRV)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탄두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sup>359)</sup>

<sup>357)</sup>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미사일·핵 우선주의’를 표방한다. 미사일과 핵무기를 최중무기로 보고, 전쟁의 추이는 병사들의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 핵무기의 화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고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중시되었던 지상군, 해군, 공군 등의 재래식 전력의 경시되고, 핵·미사일 전력 중시에 의한 ‘전략로켓군’(1959년 창설)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된다. 적의 기습 핵공격에 대한 소련의 보복 핵전력의 생존가능성이 적의 기습을 막는다는 핵억제의 사고가 도출된다. 연현식, “소련 핵 전략과 군사 독트린의 변천 - 스탈린시대부터 열친의 CIS까지.”, p. 30.

<sup>358)</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4.

<sup>359)</sup>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인공위성 능력을 갖게 된 1970년 이후 1기 로켓으로 3개 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1981년 MIRV 기술을 확보하고 시험에 성공하기까지는 10년 넘게 걸렸다. 이 과정에서 총 14번의 위성발사 시험이 있었고 이 중 5번 실패, 9번 성공하였고 다탄두 위성에 성공한 것은 그 중 마지막 발사였다.

I
II
III
IV
V
VI
VII

## 다. 핵무기의 유일적 영도와 유일적 관리체계 강화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핵·미사일 지휘·통제·관리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다. 북한은 2016년 들어 처음으로 핵·미사일에 대한 최고지도자와 당의 유일적 통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도와 유일적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sup>360)</sup>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2016년 6월 23일 ‘전략군절’을 제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며 핵·미사일체계를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당의 유일적 령군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sup>361)</sup>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5년까지는 전략군 존재와 훈련 내용을 주로 강조해 왔지만, 2016년 들어서는 전략군의 전략적 중요성과 핵무력 자체의 유일적 영도와 유일적 관리체계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핵·미사일 지휘·통제·관리에 있어 최고사령관과 당적 통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미사일 지휘·통제·관리에 있어 ‘유일적 관리체계’의 핵심 구성은 김정은이 지도·참관한 전략군 미사일 발사 훈련의 참가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핵무기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로 지칭된다. 여기서 당 중앙위원회는 당 군수공업부 핵심 간부들, 핵무기 연구부문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제2자연과학원과 소속 연구소 관련자, 전략군 지휘성원은 김락겸 사령관을 비롯한 정치위원 등이라고

---

<sup>360)</sup>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시험발사에서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6.23.

<sup>361)</sup>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전략군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6.6.25.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에 대한 최고지도자와 당의 유일적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체계에 대한 수령 직할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전략무기의 성과를 지도자와 당의 업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362)</sup>

핵무기 고도화 과정은 선군정치 of 질적 변화를 함축하는 부분이 있다. 핵무기 고도화단계에 따라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고 핵전력 증강을 위한 관련 조직의 확장·개편이 따르기 마련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핵전력의 정규화된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핵전력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기관으로 ‘당’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 군사 전반에 대한 통제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개발·관리·고도화하는 주체로서 당의 위상 증대 현상이다.<sup>363)</sup>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군수공업부나 제2경제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 군부가 아닌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보유하고 있고, 군수공업부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리며 호위사령부와 정찰총국, 교도지도국, 폭풍군단과 같은 특수부대들 역시 김정은에게 별도의 지시채널을 갖고 있다.<sup>364)</sup>

핵전력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권력엘리트들의 이해 지점을 한 곳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적 가치에서 우위에 있는 핵전력을 정점으로 전통적인 군종 및 병종이 재편되면서 군종간, 병종간, 부대간 알력이나 이해관계가 새로운

362) 북한은 “전략무기개발과정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증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명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였다”라고 밝힘으로써 핵·미사일 성과를 지도자와 당의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로동신문』, 위의 기사, 2016.6.23.

363)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5.

364) 이영훈, 『북한의 군부 -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서울: 살림, 2012), p. 10.

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핵전력의 증강을 주도하는 당으로의 권력집중,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 강화, 최고지도자의 군에 대한 직할 관리체계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김정은의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를 제외한 각급 부대의 ‘사령부’ 명칭 사용 금지 및 ‘국’으로 호칭 격하 조치를 내린 부분<sup>365)</sup>, 군단장 직보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은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당 중심의 권력 운용이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김일성 시대로의 권력구조 복원이란 차원 이상으로 핵전력 운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수 있다.<sup>366)</sup>

핵전력은 과거의 군대와 미래의 군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군종 및 병종의 위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핵무기 고도화 단계에 따라 관련 기관과 전략군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상승하는 반면, 기존 재래식 무기 중심의 전통적 군종 및 병종은 상대적으로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 지속적으로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재래식 전력에 기초한 기존 군 지휘체계 상의 인물들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위상, 상호 전략적 연계구조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교체이다. 다만 이것이 재래식 전력의 위상 약화로 속단하기는 힘들다.<sup>367)</sup>

<sup>365)</sup> 김정은은 2012년 7월부터 ‘사령부’ 명칭 사용을 제한하면서 호위사령부는 호위국, 보위사령부는 보위국, 포병사령부는 화력지휘국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군단장 호칭도 종래 군단장 또는 군단사령관으로 불러 오다가 군단장 호칭만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up>366)</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5.

<sup>367)</sup> 위의 글, p. 5.

## 4. 사회·경제 분야

### 가. 군수공업과 당·군·산복합체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당·군·산복합체'의 형성과 구조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념화하는 당·군·산복합체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적합한 자원동원 및 자원배분, 연구 및 개발, 지휘 및 감독 체계, 실험 및 실전화 등 일련의 과정이 당 군수공업부를 중심으로 전략군 및 핵·미사일 관련 특수 병종, 그리고 군수산업이 연계된 폐쇄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래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 MIC)는 냉전기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군산복합체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군은 기업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게 무기를, 정부에게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상호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막대한 정부 재원과 보호 속에서 군산복합체는 시장 논리와는 별개로 정부와의 독점적 거래를 통해 공룡처럼 비대해졌다.<sup>368)</sup> 미국 남부에 주로 위치한 군산복합체와 군부대는 보통 '건벨트(Gun belt)'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미국 인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군산복합체가 무기 수출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서 갖는 비중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착이 강화되면서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좌지우지되고 군산복합체의 무기 체계가 미국의 전세계 기지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고 구축되는 메커

<sup>368)</sup> Mark Harrison, "Soviet industry and the Red Army under stalin: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Cahiers du monde russe*, 44/2-3(2003), pp. 329~332.

I
II
III
IV
V
VI
VII

니즘을 가지고 있다.<sup>369)</sup>

소련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수산업과 관련해서는 당·군·산의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국가가 군산복합체를 소유하였다면, 소련은 국가가 곧 군산복합체였다고 볼 수 있다. 당을 정점으로 군과 산업이 연계된 체계라는 점에서 당·군·산 복합체라고 명명이 가능하다. 소련의 당·군·산복합체는 당의 정책 주도 아래 국방, 안보,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들과 과학기술 엘리트의 집합체로서 과학연구소, 설계사무소, 실험·생산실 등으로 구성된 과학생산 연합(SPA: Scientific Production Association)과 조립플랜트 및 대량 생산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370)</sup>

북한 역시도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군·산복합체가 1960년대 태동하여 현재까지 군수산업 전반과 핵심적인 전략무기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북한의 당·군·산복합체는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통해 인민경제와 군수산업의 이원체계가 형성되면서 태동하여 1970년대 중반 당경제가 탄생하면서 본격화된 시스템이다. 당·군·산복합체는 수령경제의 핵심적 골간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왔다.

---

369) 이정호, “미국 군산복합체: 탈냉전적 변화와 냉전적 관성의 유지,” 『대한정치학회보』, 9집 9호(2001), pp. 311~329.

370) 이형숙,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가능성 연구: 중국,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외교안보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6), pp. 51~52.

표 VI-6 >> 북한 무기 생산 과정과 당·군·산복합체 형성 역사

시기	주요 무기개발 내용	당·군·산복합체
1950년대	□ 생산시설 복구 및 기반조성 시기 · 구소련 무기 AK소총, 탄약 자체 생산	
1960년대	□ 모방생산 통한 군수산업 기반 확장 시기 · 소화기 자체생산 및 박격포, 무반동총, 방사포 자체 생산 · 전반기 연대급 병기, 후반기 사단급 병기 생산	· 내각 제2기계공업성 창설(1966?) · 국방과학원 설립
1970년대	□ 주요 전투장비 양산체제 확립 시기 · M-1973 K-61 장갑차, T-59 T-62 전차 모방 생산 · 고속정, 구축함, 잠수함 건조	· 제2경제위원회(1972) 가동 · 당 기계공업부 신설 · 국방과학원 → 제2자연과학원
1980년대	□ 신형 무기체계 독자개발 시기 · 항공기 및 유도무기 개발 추진 · 핵무기 개발 착수 및 화생무기 생산	· 정무원 원자력공업부 신설(1986) · 당 기계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원자력공업부 시스템
1990년대	□ 첨단 및 전략 무기 독자개발 시기 · T-72, M-2002 전차 개발, 스커드 성능 개량 추진 및 배치 · 핵무기 및 화생무기 탑재탄두 개발 및 실전 배치	· 당 군수공업부(1993 명칭변경), 당 군수공업부 원자력총국,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2000년대	□ 핵무기 고도화 및 전력화 시기 · SLBM 복극성(KN-11)	·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원자력공업성, 전략군 시스템

· 출처: 최성빈·유재문·곽시우, 『북한 군수산업 개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32 참조하여 재구성.

2000년대 들어 당경제(제2경제/군수산업), 핵·미사일 개발(제2자연과학원), 미사일 실전화(전략군)가 결합되면서 당·군·산복합체가 핵·미사일 고도화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게 된다. 당 중심의 핵·미사일 개발 시스템 구축, 전략군 신설을 통한 실전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 → 당 군수공업부 → 제2경제위원회 → 제2자연과학원 → 원자력공업성 → 전략군 등으로 연결되는 핵·미사일 고도화 체계가

- I
- II
- III
- IV
- V
- VI
- VII

갖춰진다.

결국 김정은 정권 통치전략은 역사적으로 진화해 온 [당·군·산복합체 + 핵무기 고도화 = 수령경제]에 구조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선대(김일성, 김정일)의 위업을 계승한다는 차원이나 단순한 벤치마킹 보다는 장기간 진행되어 온 ‘수령경제’와 ‘당·군·산복합체’의 형성과 진화의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당·군·산복합체는 군사, 안보(국가안보/정권안보/리더십안보), 경제(자원동원/배분) 등이 결합된 산물이자 소위 ‘수령제’ 정치체제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나.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운용 강화: 군수와 민수의 이원화

경제·핵 병진노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무력(국방공업, 국방과학기술)과 경제의 상호연계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소위 ‘과학기술과 생산(경제) 일체화’, 즉 ‘우리식 새로운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통한 국방공업에서 최첨단돌파’를 제시한 부분이다. ‘최첨단돌파’는 국방공업·국방과학기술부문의 비약적 발전을 경제로 확산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sup>371)</sup> 경제·핵무력 병진노선(2013년 3월 31일)은 군수와 민수의 관계를 일정하게 제시하고 있다.<sup>372)</sup>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강화

371) 홍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5): 전략적 노선과 정책,”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6, 2016.5.19), p. 2.

372) 군수와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일이 정리한 바 있다. 2002년 9월 김정일은 국가, 경제 기관 책임자 간 담화에서 선군정치와 경제정책의 관계를 개념 정리한 바 있다. 국방공업과 증공업은 국가통제 속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되, 경공업·농업·상업 부문에서는 시장지향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국방공업을 우선 지원하여 발전시키는 개념과 우수한 국방공업을 활용하여 타 분야(경제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개념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면서 경제성장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73)</sup> 이 노선은 군수와 민수 두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군사적 역량을 동시에 확충하겠다는 것이다.<sup>374)</sup> 군수 산업이 민수로 전환되는 대표적 사례로 북한은 CNC<sup>375)</sup> 설비를 만드는 공작기계공장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임에도 첨단 공작기계를 자체 생산 해냄으로써 북한이 21세기 경제발전의 기본열쇠를 틀어쥐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주 발사체(로켓)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밀도가 요구 되고 자동제어 기능이 갖추어진 고급 CNC 공작기계가 필수적에 따라 북한이 축적한 초정밀 기계제작 기술을 발전소, 기업소 등 민간 영역으로 전파되어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sup>376)</sup>

다른 부분의 희생으로 일으킨 국방과학기술이 어려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 제는 민간 경제를 이끄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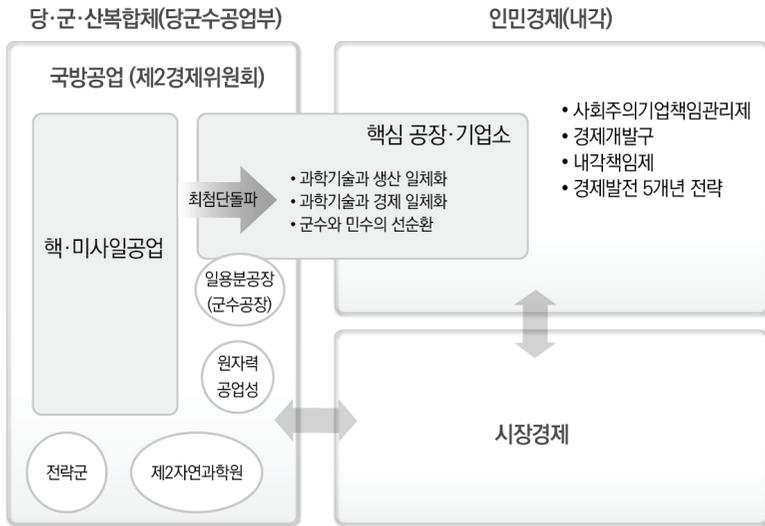
<sup>373)</sup> 이형숙,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가능성 연구: 중국,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p. 52.

<sup>374)</sup>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3-11, 2013.4.8.), P. 3.

<sup>375)</sup>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서 자동차, 전차, 반도체, 항공, 우주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계로 북한의 경우 미사일 및 우주 로켓 개발에 들어가는 정밀한 기계 가공 능력을 타 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up>376)</sup> 이형숙,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가능성 연구: 중국,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p. 49.

그림 VI-2 경제·핵병진 노선 아래 경제작동방식



출처: 저자 작성.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돌파’ 전략은 국방공업(핵·미사일공업) 중심의 자원배분 지속을 ‘최첨단돌파’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군수에서 민수로의 확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이 직할 관리하는 핵·미사일 관련 국방공업과 내각 관리 일반 민수공업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주도하는 당·군·산복합체 형태의 군수부문 자원배분이 상당 부분 구조화되어 왔고, 병진 노선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77)</sup>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운영은 군수산업의 민수로의 전환이나 파급효과보다는 기존 민수기업들을 군수화하는 방향으로

<sup>377)</sup> 홍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5): 전략적 노선과 정책,” p. 2.

전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sup>378)</sup>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제2경제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주도하여 주요 공장·기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고 민수 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가령 길주펄프공장, 혜산제지연합기업소, 원산신발공장, 혜산신발공장, 수산기지 등이 이에 속한다. 기존의 내각이 관리하던 특급기업소도 과감하게 해체하거나 군수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남포조선소, 나진조선소, 청진조선소<sup>379)</sup>, 청진제강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북한 전체 산업의 60~80%가 군수 생산이나 이중용도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산업체의 60~80%가 직간접적으로 제품의 일부를 군대 또는 기타 국방 관련 기관에 공급해주고 있다. 가공업에서 군수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이 60%(2015년), 소련이 1985년 60%, 중국 1980년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380)</sup> 북한의 군수공장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총국에서 관리하는 전문군수공장<sup>381)</sup>, 인민무력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군수공장, 군수품 생산 전문공장이 아닌 내각 산하 일반기업에 군수품을 생산하는 일용분공장(또는 일용공장)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 된다.<sup>382)</sup>

<sup>378)</sup> 김병욱, “선군경제운영과 민수산업 군수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6월호, pp. 81~103 참조.

<sup>379)</sup> 북한의 3대 조선소 중 하나인 청진조선소가 2013년 경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으로 전환됨. 당 대남연락소(선박제조) 배수리공장과 가까이 위치한 청진조선소 ‘일용분공장’은 경비정과 어뢰정, 초고속정(공기부양정)을 생산했다. 이 일용분공장과 ‘129호공장’이 통합해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장이 되었다. “북, ‘청진조선소’ 군수공장으로 전환,” 『자유아시아방송』, 2015.4.20.,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je-04202015094732.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e-je-04202015094732.html)>. (검색일: 2016.6.21.).

<sup>380)</sup> 바실리 미헤예브, 비탈리 쉬비드코,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25.

<sup>381)</sup> 전문군수공장은 완성장비와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공장과 구성품, 부·소재를 생산하는 부품공장으로 구분된다.

I
II
III
IV
V
VI
VII

표 VI-7 >> 북한의 군수산업(군수공장) 운영체제

당 군수공업부 및 제2경제위원회 전문군수공장	인민무력부 산하 일반 군수공장	내각 관장 군수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미사일 개발</li> <li>· 군수물자 생산·수출입</li> <li>· 핵심 군수공장(기계공장, 약전공장 등)</li> <li>· 생산·무역회사·대금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식 무기계통 생산</li> <li>· 군 자체 운영경비 조달</li> <li>· 중고차, 수산물, 광물 등</li> <li>· 군 산하 무역회사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품공장, 일용직장, 분공장 등</li> <li>· 무기나 전투장비, 부품</li> </ul>

출처: 저자 작성.

북한의 전문군수공장은 17개의 총포공장을 비롯하여 35개의 탄약 공장, 5개의 전차 및 장갑차공장, 5개의 함정 건조소, 9개의 항공기 공장, 3개의 유도무기 공장, 5개의 통신장비 공장, 8개의 화생무기 공장 등 총 180여 개로 추정된다.<sup>382)</sup> 지역별로는 무기생산 전담공장은 강계 공업지구, 일반군수공장은 신의주공업지구, 전시전환공장은 평양공업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군수산업은 당경제부(군수공업부, 제2경제)가 전략무기 개발, 무기 수출입, 핵심 군수공장운영, 전략군 실전화, 산하 방대한 외화벌이 회사 운영 등을 한다면, 인민무력부는 재래식 군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군수공장 및 자체 외화벌이 회사를 운영하고, 내각은 전국의 중대형 공장·기업소의 ‘일용직장’, ‘분공장’ 체계를 통해 일상적인 군수물자를 생산한다.

당·군·산복합체가 중심이 된 군수산업은 관련 종사자들을 특권화하고 기득권층화한다. 최고지도자와 당 군수공업부에 의해 직할 관리되는

<sup>382)</sup> 북한은 1967년 종업원 규모가 550명 이상(3급기업소) 일반 생산공장 100여개를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정했다. 이형숙,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가능성 연구: 중국,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p. 29.

<sup>383)</sup> 최성빈·유재문·곽시우, 『북한 군수산업 개황』, p. 32.

제2경제 부문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군수산업,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 생산을 맡는 제2경제위원회와 그 산하 수백개 군수공장, 군수물자 수출입 및 외화벌이 기관 등의 특권화는 핵무기·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다.<sup>384)</sup>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련 현지도 활동의 대부분이 군수 산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고지도자와 당 군수공업부에 의해 직할 관리되는 제2경제 부문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군수산업,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 생산을 맡는 제2경제위원회와 그 산하 수백개 군수공장, 군수물자 수출입 및 외화벌이 기관 등은 이미 특권화되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당이 직할 관리하는 핵·미사일 관련 국방공업과 내각 관리 일반 민수공업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당·군·산복합체 형태의 군수부문 자원배분이 상당 부분 구조화되어 왔고, 병진노선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sup>385)</sup> 이와 같은 당 직할 관리의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운용은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에서 지속적으로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경제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sup>386)</sup>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개발 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핵무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재래식 무기의 현상유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인민경제에 투여할 재정의 확대는 현재의 국가 재정 능력으로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핵무기 고도화 비용과 기존 재래식 무기 유지

<sup>384)</sup>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18.  
<sup>385)</sup> 홍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5): 전략적 노선과 정책,” p. 2.  
<sup>386)</sup>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p. 18.

비용에 따른 인민경제에 대한 투자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김정은 정권이 소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알려진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거나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경제주체들이 대내외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통해 국가재정을 만회하는 전략, 핵전략 증강을 위한 우선적 자원 배분 이후 취약한 인민경제를 시장을 통해 대체하는 전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87)</sup>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같은 개혁 조치를 비롯하여, 지방 시·도급 기관은 물론 기관·기업소(종업원 1,000명 이상)에 대한 외화별이회사 운영권을 부여하는 조치, 각 도에 1~3개의 개발구를 지정해 자본유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치 등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경제운영에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파트·살림집 건설 등 부동산건설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내의 시장영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전략, 관광 유치를 통해 외화별이 수입을 늘리는 전략 등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sup>388)</sup>

## 5. 대남정책 분야

### 가. 공격적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전술적 활용

북한은 2016년 개정된 당규약을 통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통일대전’ 등 여전히 적화 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목표와 달리 실질적 목표는 핵무기 보유 및 고도

<sup>387)</sup>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p. 8.

<sup>388)</sup> 위의 글, p. 8.

화를 통해 한국의 통일준비론을 차단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무기 고도화가 통일담론보다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상정되어 있으며, 북한이 제기하는 통일담론은 전술적 차원에서 국면전환용 또는 체제유지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나타나고 있는 대남정책의 특징은 첫째, 공격적 핵정책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울 불바다’, ‘핵침화’, ‘핵성전’, ‘불벼락’ 등 한국을 심리적으로 압박, 기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일종의 한미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수용하도록 하는 강은 양면전술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 김정일 시대와 달리 순차적 강온정책이 아닌 강은 병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대남도발 이후 유화정책으로 전환하는 순차적 강온정책을 구사한 반면, 김정은 정권은 대화공세를 하면서 동시에 무력도발을 하는 강은 병행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국면과 갈등상황에서도 대남 도발과 비대칭 위협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의제를 ‘정치군사분야’로 유도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공격적 대남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화전략, 평화공세, 군사적 도발 등을 동시 병행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듯한 태도는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공격성이 남북관계로 투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남북한의 평화적·실질적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 논의에 핵무기라는 물리적·정치적 장치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사실상 통일이 핵문제에 묻혀(배태, embedded)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I
II
III
IV
V
VI
VII

이제 핵무기를 경유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질적인 통일을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흡수통일’, ‘제도통일’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되었다. 북한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목표로 보기보다는 체제유지나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전술적 통일 접근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핵보유를 통해 ‘통일’보다는 ‘평화’ 담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핵·미사일 도발, 저강도의 도발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여 분단 상태를 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전술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

## 나. 핵무기에 기초한 발전전략과 분단 고착화

핵무기 보유 및 고도화의 고수는 상당 부분 중국식 모델의 학습·모방의 결과이며 경제·핵 병진노선은 그런 학습의 북한식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64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이후 32개월 후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하고 1960년대 후반에는 탄도미사일체계를 구축하여 일련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가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중국은 핵 개발 이후 미중관계 개선, 대외무역 확대, 외자유치, 개혁개방의 수순을 밟게 된다. 등소평은 살아생전 핵무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성공과 국제적 위신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sup>389)</sup> 그만큼 핵무기가 중국의 현재를 만드는

<sup>389)</sup> 정육식, 『핵의 세계사』 (서울: Archive, 2012), pp. 390~391.

데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중국식 핵무기를 통한 국가발전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급 + 문명강국 = 천하제일강국’ 논리는 중국식 경험에 기초한 북한식 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핵무기를 통한 발전전략, 핵무기를 통한 두 개의 한국(two Korea)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핵무기 개발 과정 자체를 공개하고 오히려 체제 선전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개발은 은폐하거나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등 핵무기 고도화 프로세스의 과정을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대내외에 공개하여 전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대내외를 향해 보내는 다양한 메시지의 ‘창(窓)’으로 핵무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핵무기 고도화 전반을 통치전략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고도의 격동상태’ 유지에 핵무기(핵보유)를 선전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핵무기를 통해 분단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고착화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고도화의 목적은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지금까지 표명한 핵정책의 내용을 보면 국제정치이론 상의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 모두에 해당한다.<sup>390)</sup> 안보상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안보 모델),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핵보유를 활용하는 차원(국내정치모델), 국력 및 근대성 등 국가위신, 국가상징, 국가정체성의 제고 차원(규범 이론) 등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일반적인 국가들이

I
II
III
IV
V
VI
VII

<sup>390)</sup> Andrew Futter 저·고봉준 역, 『핵무기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6), p. 81.

핵 개발 및 핵무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핵무장에 필요한 엄청난 재정과 산업규모, 핵무장 추진 시 국제사회의 제재, 군비경쟁과 예산낭비, 주변국과의 관계 재설정 등 핵무장이 결코 경제적인 안보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폐기하는 요인으로는 국내적 반대, 국제적 규범, 안전보장, 기술적 한계, 비용과다(경제제재)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내적 반대의 부재, 일정한 기술적 고도화 단계의 진입이 주는 견인 효과, 핵무기 개발에 유리한 당·군·산복합체 지속, 비핵화 후 안전보장의 불확실성 등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른 내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가까운 거리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도 핵 개발을 유인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통일방식을 저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Ⅶ. 요약 및 한국의 대응방향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파급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 하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과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핵전략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국제관계·남북관계·한국 및 북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연구를 집중했다. 다만 본 연구는 핵고도화의 파급영향에 중점을 뒀으므로, 각각의 파급영향에 따른 도전요인 식별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내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진행된 연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고 후속연구의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금의 북핵 고도화에 대처하는 한국의 대응원칙과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포괄적 제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관련〉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핵전략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공세적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 고도화의 핵심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량의 증가와 핵탄두의 기술적 진보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의 강화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량과 이를 바탕으로 제조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정확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핵탄두 제조 개수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가장 보수적 관점에서 2016년 현재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무기는 최소 8개에서 최대

I

II

III

IV

V

VI

VII

36개로 추정하였다. 북한이 2020년경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무기 숫자 또한 보수적 관점에서 계산했을 때 약 최소 14개에서 최대 57개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는 보유한 핵물질 전량을 핵무기로 전환했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해당 시점에 실전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 수는 위 추정치 범위 내에서도 중간값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탄두 제조 기술력이 점차 진보하고 있는 것도 핵전력 고도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총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한 소위 제1세대 핵기술능력을 확보했으며, 최근 4차 핵실험에서는 2세대 수소폭탄 보유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도 부분적으로나마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기술 진화가 핵기술 중국의 단계인 수소폭탄 제조 기술력 보유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2016년 9월의 5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탄두 제조와 관련해 소형화·경량화·표준화·규격화 능력을 배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상당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투발 수단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핵전력 고도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이후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진입 기술과 순항거리 차원에서 과거보다 기술력이 진보되었다. 또한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도 성공함으로써 일본과 괌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 강화와 더불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지난 3년간 꾸준히 SLBM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핵·미사일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그 질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공언해온 핵무기 ‘다종화’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와 더불어 북한의 핵전략 또한 진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반까지 북한은 소위 최소억지전략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핵능력으로 이러한 핵태세는 애초 무리한 전략적 목표였다. 따라서 김정일 집권시기부터 김정은 초기까지 실제 북한의 핵태세는 핵전력 모호성을 기초로 중국을 견인하는 ‘축매형’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 정권은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전 핵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핵억지 대상으로 기존의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전력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 타겟으로 미군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거점을 겨냥한 공격 수단 및 군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확전 핵태세로 인해 당분간 한국의 안보적 위험 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공세적 핵태세는 결국 미국의 확장억지력 보강과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지력 강화 노력과 결부되어 상당 기간 남북한 간의 치열한 군비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며,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도 자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의 불안정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국제사회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북미 간에 “과도적 합의”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다. 핵공격, 군비경쟁, 핵도미노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춘 미국에게 북한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증보복전략을 채택한 북한도 이차타격능력 확보라는 요원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핵 개발에 대한 제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상호불신도 합의를 가로막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할 수 없다.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동맹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 확전 위험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북한 핵무장은 미국의 지역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핵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은 미국과 동맹을 더 유용한 안보수단으로 여길 것이며, 영향력 증대를 원하는 미국도 동맹강화 요청에 적극 호응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중단기적으로 북중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국 사이에 경쟁과 대립을 조장한다. 군사대응 조치를 유발하여 안보딜레마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비현실적 상호 기대와 실망의 과정을 촉발함으로써 국가 간 불신을 키운다. 그러나 세간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 도전이다. 북한은 NPT 탈퇴 및 대외확산활동 전력을 갖고 있으며,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주요 비핵산업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확산체제에 독특하고 유의미한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이 세계비확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북핵 위협의 지리적 범위는 동북아에 한정되고, 그 전시효과도 미약한 편이다. 아울러 북핵의 도전은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 보존·강화노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관련〉

본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의 발생 가능성 및 양자 간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구하고, 교류 및 협력의 전망에 대해 논한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북한의 군사력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남한의 압도적인 군비투자와 경제력 그리고 남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의 확장역지 제공을 고려할 때 한반도 내 힘의 분포가 역전되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북한 간 종합적 군사 능력의 격차가 감소했고, 과거에 비해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양자 관계에서 군사력 분포의 변화 그리고 핵 비대칭(nuclear asymmetry) 조건이 야기하는 일반적 효과를 지구적 차원(global level)에서 탐구하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 고도화 및 그에 따른 군사력의 증대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촉진함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위기교섭 능력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선 북한의 군사력 증대가 교섭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핵 비대칭 자체가 교섭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들이 도출된다. 즉 북한의 핵무기가 대남강압을 용이하게 하면서 강한 위기교섭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핵무기의 실제적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인해 북한의 상대적 교섭

I
II
III
IV
V
VI
VII

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로부터의 추론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첫째, 북한의 핵 고도화가 시작되었다고 간주되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력의 증대가 남북한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얻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로부터의 추론과 다른 이러한 경험적 분석 결과의 한 가지 이유는 재래식 군사력 및 종합적 전쟁수행 능력에 있어서 남한의 우월성으로 인한 억지력과 관계된다. 또한 북핵 개발의 주된 목적이 생존과 체제보전에 있다는 점도 북핵 고도화와 대남 군사도발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부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한계는 관찰 가능한 경험적 분석기간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가 남북 간 군사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로부터의 추론에도 우리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과 이후 남북협상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군사력의 증대가 북한의 대남강압을 용이하게 하면서 위기교섭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억지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강압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가지 이유는 핵무기가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공세적으로 실제 사용될 경우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존을 위협 받지 않는 한 사용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교섭 당사자들이 모두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종합적 군사력이 북한을 능가한다는 점도 북한이 우월한 위기교섭능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지한다.

북핵 고도화가 남북한의 교섭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일한 사례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의 전략 구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북핵 고도화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및 대남 강압을 촉진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전망이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예단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류 및 협력의 전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안보딜레마, 즉 한 국가의 안보를 위한 무력증강이 상대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보딜레마는 북핵 고도화가 남한에 대한 공세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며, 그에 따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보딜레마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그 수준도 다양할 수 있다. 무력증강의 주된 목적이 방어이며 공격보다 방어가 더 큰 이득을 낳을 때 한 국가의 안보는 타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지 않으며, 따라서 안보딜레마가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인한 안보딜레마가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구속하는 수준은 높지 않으며,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 물론 오인 또는 우발적 요인에 의해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북핵 개발 의도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안보딜레마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의 중요한 요인이며, 비핵화의 과제는 견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안보딜레마의 논리에 포획되어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여지를 부정하거나 그 과제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다. 교류와 협력이 축소 또는 중단된 김정은 정권 시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핵 비대칭 관계에서도 교류와

I

II

III

IV

V

VI

VII

협력은 긴장완화 및 평화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에 대한 영향 관련〉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이슈의 심각성을 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 미칠 정치·경제·사회적, 군사·외교·안보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지만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또는 이미 구현한, 억지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확장역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차원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계획, 핵사용에 대한 결정 및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NATO의 이중적 결정처럼 핵계획그룹과 같은 협의체를 창설해서 핵무기 사용방식과 가능한 옵션을 함께 계획하고, 핵사용의 성격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상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암호화된 통신설비를 구축하며, 핵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할 구체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울러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 강대국들만이 존재하는 한국의 안보환경에서 현존 위협에 대한 대비와 미래전 대비 능력의 강화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억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미래 주변국과의 군사적 격차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즉 동북아 강대국과 북한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한국 국방의 본질적 딜레마는 단순한 논의로 해답을 찾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북핵보다는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위협이 오히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강화 필요성 제기가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주목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국방 방식의 안보전략 대화의 개최와 한·미·일 공공 군사 훈련의 실행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함에 있어 군내의 자군 중심주의 성향이나, 협소한 이익(parochial interests) 추구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 차원에서 민간으로부터의 의견 반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비대칭적 능력에 대한 한국의 무력감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와 한국의 경제력 규모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결국 이는 국방비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략적 사고와 관행적 국방비 배분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조직 간의 예산 경쟁이 일종의 관료정치적인 환경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결과라는 지적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도 기획 단계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체화하는 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학적인 국방재원 소요 전망과 배분 계획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국방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기획의 신뢰성을

I
II
III
IV
V
VI
VII

담보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간의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전면적 도발 가능성 등 안보상의 위협요인에 대한 강조는 보이지만, 여러 중요한 시대적 안보 이슈와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현재 필요한 것은 외교와 국방이 망라된 전략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양성과 토론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부 간 회의와 협력 이외에도 공공외교 채널과 기타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복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적 관점에서의 고민을 충분히 피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력에의 자원 투여는 “총과 버터(guns and butter)”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일정한 기회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마다 이러한 자원동원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지난 경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서 3군의 자군 중심주의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이는 결국 국방문민화에 대한 논의의 시발을 의미할 것이고, 지난 경험에서처럼 이런 논의가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방문민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북한에 대한 영향 관련〉

핵무기 고도화는 북한체제 내부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의 파급영향을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핵독트린(nuclear doctrine)의 내용변화, 통치담론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의 핵독트린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실질적인 기술적 성과에 따라 구체화되고 보다 공격적인 내용을 추가해 왔다. 북한의 핵독트린은 200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09년 제2차 핵실험 직후 외무성 비망록, 2013년 제3차 핵실험 직후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을 통해 핵독트린을 구체화 했다. 내용적으로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기본 바탕으로 삼으면서 최근에는 여기에 ‘선제핵타격’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 하고 있다. 북한의 핵독트린은 ‘수령보위’라는 리더십안보 차원에서 규정돼 왔고 항구적 비상사태의 국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군사적·안보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가 군사전략과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군사 전략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전략군’의 활동이 활발 해지면서 보다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전략군이 등장한 이후 미사일 도발의 횟수와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핵무기 다종화의 움직임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기존 재래식 전력을 핵·미사일에 기반 한 전쟁수행전략에 맞춰 재편하고 있으며, 핵·미사일에 대한 당과 지도자의 지휘·통제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가 자원배분 및 경제정책, 사회통제와 시장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핵무기의 고도화는 ‘당·군·산복합체’의 형성과 구조화 차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당·군·산복합체는 핵·미사일 개발에 적합한 자원동원 및 배분, 연구 및 개발, 지휘·통제체계, 실험 및 실전화 등 일련의 과정이 당 군수공업부를 중심으로 전략군 및 핵·미사일 관련 특수 병종, 그리고 군수산업이 연계된 폐쇄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1970년대 태동한 ‘당·군·산복합체’를 통해 이미 구조화되어 왔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 보다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마지막으로 대남정책에 핵무기 고도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공격적 핵정책을 남북관계에도 활용하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화, 도발, 평화공세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행사하는 공격성과 다면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핵무기가 '흡수통일'과 '제도통일'을 막는 중요한 수단임을 밝히고 있으며, 북한의 발전전략의 근간임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핵·미사일의 기술적 진화에 따라 공격성을 보다 강화하면서 한국발 통일론을 차단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 2. 한국의 대응방향

### 가. 한국의 기본대응 원칙

#### (1) 대북 억지력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평가 요구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이 핵전략을 과거에 비해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한국에 대한 직접적 안보위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 핵무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북핵 고도화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은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북한이 한국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확장억지 무용론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대남 군사 도발이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오판하여 지금보다 더 대담하고 호전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강압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핵위협을 배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확장억지 무용론을

민는다면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가 주는 전략적 편익이 (실제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의 효용을 높이 평가할수록 비핵화는 더 어려워진다. 북한이 확장억지 무용론을 믿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 퍼진 확장억지 무용론은 북한에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 확장억지가 효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은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확장억지의 효력을 의심할수록 한미동맹의 효용을 저평가하여 동맹에 대한 지지를 줄일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는 핵·재래식 보복타격능력에 기초한 강건한 처벌적 억지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당한 거부적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 한미의 억지력은 장차 더욱 거세질 북핵 고도화의 도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핵전력에 대해서는 처벌적 억지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순리이며, 거부적 억지력은 유용하지만 필요치는 않은 부차적 옵션에 불과하다. 불요불급한 거부적 억지력을 서둘러 증강하고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군사비를 공연히 지출해야 할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더 큰 당면위협인 재래식 군사도발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정밀타격능력과 미사일방어능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변국을 불안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대립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핵에 대한 억지태세를 보강할 정치·전략적 필요가 있을 경우, 처벌적 억지를 강화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NATO 회원국들처럼 한국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억지를 위한 확전위협은 더 큰 신뢰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공유에는 큰 비용도 들지 않는다.

I
II
III
IV
V
VI
VII

## (2) 북핵 문제 해결의 낙관적 전망 경계

북핵이 고도화되면서 그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와 한중관계의 역할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상당부분 비현실적이거나 비전략적이다. 우선 핵동결과 확산방지를 내용으로 한 북미 간 “과도적 합의”가 단기간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마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과도적 합의에 대한 지나친 기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도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공연한 우려는 미국에 대한 의심을 낳음으로써 한미 간 불화의 싹을 틔울 수 있다. 또한 북미대화를 지나치게 경계함으로써 한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과도적 합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 또한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합의도출을 위한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별 의향이 없는) 미국과 공연히 마찰을 빚고 여타 관련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허비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의 헛된 기대를 악용할 수 있다. 북한이 과도적 합의를 맺고 이행할 의향을 가진 척하며 경제제재 완화를 비롯한 이득만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핵문제 당사국 간의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낳음으로써 상호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만 한다. 한국도 중국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한중관계에 거품을 만드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유용한 완충국인 북한을 위태롭게 만들 일은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지나치게 기대함

으로써 현실적인 북핵문제해법을 찾지 못하고 한중관계만 해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 (3) 국제 비확산체제하에 한국의 역할 모색

북한의 핵도발로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러한 측면을 역이용하여 냉전시대와 같은 경직된 지역질서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신냉전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을 결여한 신냉전론의 등장 자체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북핵이 (북·중·러 진영과 한·미·일 진영이 대치하는) 신냉전을 불러온다고 북한이 믿으면 핵무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북·중·러 삼각공조의 복원은 북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냉전론을 믿는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중러의 지원을 얻어낼 호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신냉전이 이미 도래했다고 북한이 오판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를 기대하며 한국에 대해 호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신냉전에 대한 공연한 걱정은 미·일·중·러 등 북핵문제 당사국 사이에 안보딜레마를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렇듯 위험한 신냉전의 허상이 다른 국가들로 퍼져가지 않도록, 한국사회에 만연한 근거없는 신냉전론을 불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핵 고도화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국제관계적 측면은 국제적 비확산체제 메커니즘이다.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핵의 도전은 중대하지만, 그 부정적 영향은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상당정도 제한할 수 있다. 북핵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북핵 관리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핵무장론의 대두에

I

II

III

IV

V

VI

VII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강건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필요 없다. 미국이 핵확산에 대한 원칙적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한,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큰 정치·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기에, 자체 핵무장은 당분간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다른 국가들도 이미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 옵션을 레버리지로 쓰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론은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만을 공연스레 훼손한다. 장차 안보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을 요란하게 외치는 것은 아무런 실익없이 손해만을 초래할 뿐이다.

## 나. 한국의 전략적·정책적 대응방향

### (1) 정치·경제·사회적 대응방향

2016년 4차와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추구가 보다 분명해지면서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동시에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북 확산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의 강력한 심리전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국면의 지속과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외적 요인의 변화 또는 북한의 급격한 태도 변화가 없이는 상당 기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대응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요인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선택의 정당성과 함께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북한의 반복되는 갈등 고조 후 협상, 합의, 그리고 합의 파기 후 다시 위기 고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적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압박 및 유인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 능력 고도화로 인해 한국이 군사적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원 및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안보딜레마의 작동과 같은 악순환의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이는 한국의 국가 리스크를 증대시켜 결국 시장에서의 한국 선호도와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개성공단의 폐쇄 등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북핵 능력 고도화로 초래될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국내적으로도 불가피하게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생산적 대응 방식의 도출이 늦어질수록 핵무장론은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재정정과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결국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약화시키는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나 협상이 재개되기는 힘들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목표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화되거나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출구 전략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대화 복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I
II
III
IV
V
VI
VII

다소 유연하게 여지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이후의 평온한 국내 반응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핵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북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조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정부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등 일괄타결 방식의 북핵 문제 해법은 핵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을 상대로 그대로 적용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정교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 북한 비핵화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압박과 유인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구상에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국제적 공조와 효율적인 대북 억지 및 방어 태세가 확립된 속에서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불가역적으로 실행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탈피하여 핵을 가지지 않고서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장치와 결과적인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만 한다. 현재까지 북한은 외부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상호 모순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국제적 수준의 경제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중국 또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거나,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내에서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대북제재망 구축이라는

국제적 합의에 완전히 역행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악화되고 국가의 경제운용 능력이 저하되면, 북한 내 장마당과 같이 내부 시장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장마당의 확산은 외부정보의 북한 내 유입 공간과 여건을 확장 및 개선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탓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야욕에 따른 잘못된 정책결정 때문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인식과 정책의 전환 없이는 이러한 고통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김정은 정권이 아닌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 (2) 군사적 대응 방향

우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능력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전략 및 작전체계에 대응하여 우리의 전쟁수행개념 및 군사전략, 작전체계 등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능력 향상은 물론 스커드·노동·무수단·KN-08 등을 내륙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하는 ‘미사일 벨트’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전술적 기동성 향상과 미사일 운용의 유연화 등 핵무기 및 미사일을 통한 위협 능력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정밀유도 능력의 획기적 비약에 따라 다탄두각개재돌입탄도탄(MIRV)까지 갖추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 전력 증가, 천안함 폭침 및 목함지뢰와 같은 교묘한 국지적 도발, 사이버전 능력의 고도화 등 비대칭 전력의 극대화 역시 김정은 정권 들어 속도감 있게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I

II

III

IV

V

VI

VII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기 사용 위협 담론과 대남 심리전도 강화되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를 상호 전략적·전술적으로 긴밀하게 연동하는 '합동·연합전술'을 김정은 정권은 줄곧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예고하고 있다. 즉, 핵무기를 핵심적 위협 수단으로 하는 다양한 비대칭 능력의 결합,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이 융합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등 혼종적 작전 개념의 구체화다. 현재 한국의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체계에 기초한 전쟁수행 개념,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군사비와 군사력의 양적 우위라는 평면적 전략 개념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한 전쟁수행 패러다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전략과 작전체계를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무기체계, 작전 및 훈련 양상, 군사전략 및 노선, 훈련방침 등 무기 및 작전고리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핵무기 및 미사일, 기존 재래식 군·병종, 그리고 사이버전·심리전 등이 결합하는 혼합전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수행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 군사전략 변화가 어떻게 대남정책 및 도발로 연계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대남 도발은 강도와 유형을 달리하는 도발의 다양화, 유화전략, 핵능력 과시, 평화공세 등이 뒤섞인 혼종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대남 도발의 전술적 약점을 보완하는 적극적 대응카드의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전략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과 전술의 수립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결국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와 자국 군대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적절한 군사력의 유지와 효과 발휘를 위한 자원의 확충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증대에 따른 수동적 반응보다는 효과적 억지력 건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탄도미사일 방어에의 지나친 자원 투여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주한 미군이 배치할 사드 이외에 기존의 PAC-2 능력을 대폭 개선한 PAC-3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 구현된 기술의 완성도가 낮다는 점 외에도 탄도미사일의 사용이라는 전략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얘기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안보상의 이점을 안겨주고 따라서 거부적 억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탄도미사일이 기대되는 억지력을 발휘할 것인지의 여부는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의 평가처럼 무모하고 비합리적일 수 있다면 탄도미사일방어의 억지력은 의미가 많이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역할 분담과 안보의 증진에 대한 체계적 시각을 정책 및 대안의 마련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미동맹 확장억지력의 재확인 차원에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또는 순환 등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미사일방어 외에도 핵·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여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완성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효과적 감시를 위한 자산으로는 해상도가 15cm에 달하는 미군의 KH-12 정찰위성이 있는데, 한국군도 2019년에 미국으로부터 약 12억 달러에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1세트 4기를 도입하게 되면 자체적인 감시자산을 가지게 되어 킬체인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가지게

I
II
III
IV
V
VI
VII

된다. 그리고 한국은 2013-14년에 걸쳐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70여발을 구입했으며, F-15에 탑재 및 발사 가능여부 실험을 마친 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체계가 효과적으로 결합된다면 킬체인인 임무 성공 가능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 개발과 추진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지양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북한군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 개념을 발전시킬 것임을 천명한 바 있는데, ‘역비대칭 전략’으로 명명된 창조형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 우리가 명백한 우위를 점하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군사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북한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과학기술 우위에 기반을 두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추진한다면, 무선 네트워크 능력의 강화, 군 위성통신 능력의 강화, 관련 인력과 전문성의 강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구전역 항법시스템(GNS), 관성항법체계(INS) 등 정밀유도 및 타격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장거리 정밀교전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정찰·감시 기능 및 지휘통제기능과 연계한 타격복합체계(C4ISR+PGMs)로 운용함으로써 승수효과(Synergy)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혁신의 한 측면이다. 이런 혁신의 결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은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의 융합을 통해 점적, 선형, 근거리 전투개념에서 비점적, 비선형, 원거리 전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능력은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의 다차원 시·공간상에서 제반 능력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전력운용의 승수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정밀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중심작전은 적의 전략적·

작전적·전술적 중심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과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집중 타격하는 비대칭전 및 병행전을 통해 교란·마비효과를 극대화 하고, 적의 전쟁 지속의지를 상실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교전으로 전쟁의 조기종결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 한국이 추진 하고 있는 킬체인도 보다 장기적으로 주변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개정된 한미 미사일협정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현 300km에서 800km로 연장되었고, 탄두 중량도 사거리를 800km 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는 500kg의 중량으로 제한되지만, 사거리 550km 시에는 1,000kg까지, 300km 시에는 1500-2000kg까지 탑재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무인항공기는 기존 탑재중량이 500kg에서, 항속거리가 300km 이하 시에는 중량 무제한, 300km 이상 시에는 2,500kg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무제한과 중량 500kg의 조건에서 사거리 300km 범위에서는 탑재 중량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개정 지침 범위를 초과하는 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연구개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렇다면 비록 다양성과 양적 수준에서 북한에 상대적으로 열세이지만, 선진적인 기술력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강하고 북한이 보유하지 못하는 순항미사일의 능력 신장에 주력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억지력, 유사시에는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3) 외교안보적 대응 방향

결국 우리 정부가 전면전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면 군사적 대응책 외에 외교 통로를 통한 협상 노력이

I
II
III
IV
V
VI
VII

병행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일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는 성공적이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성공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채널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될 것이다. 즉 북한을 폐쇄적이고 고립적으로 파악하는 단면적 인식을 벗어나 북한이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북한의 행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북한의 해외 핵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북한이 확산 네트워크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왔는지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성도 아울러 대두된다.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과의 전통적 교류 이외에 다른 다양한 주체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그것이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주는 영향을 억지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노정될 수 있는 경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안보와 관련한 이해가 종종 충돌하는 주변국들 외에 보다 교역의 중심을 다변화할 필요를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비롯되는 단기적 민감성과 장기적 취약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아울러 안보와 경제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안보적 식견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안보 이슈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감안한 외교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중장기적인 전략적 고려가 될 것이다. 향후 통일의 과정까지

염두에 둔다면 대북 정책을 고안 및 구사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야만 한다.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 주변국과 미리 상의해야 하고, 상대국이 한국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민관 또는 1.5트랙의 다양한 접촉 창구를 가동하여 현안 발생 시 오해의 소지를 줄여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발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의 핵심적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상충되지도 않으며 향후 전략적 공조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전략 대화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미리 열어 놓는다면, 현안과 관련된 한국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도 동시에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국의 외교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대북제재에의 동참을 유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 핵전략의 두 축인 ‘최소 억지’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중국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등 핵전력 강화를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향후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이미 중국이 자국 국방의 현대화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계획의 조기 완수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군사과학기술 역량을 이미 축적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I
II
III
IV
V
VI
VII

능력 신장은 보다 용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자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국들과의 고민을 공유하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한미동맹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추진할 부분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국이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대강의 대결구도가 긴장완화보다 갈등의 고조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는 노력이 다자주의적 접근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근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강압수단을 도출함과 동시에 북한이 협력에 나서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을 것임을 알려야 하는데, 결국 기존 비핵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한반도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비핵화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이해시켜야 하는 부담이 한국에 남게 된다.

그간의 비핵화 사례를 검토하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핵심은 핵무기의 해체과정에서 신뢰와 보상의 문제인데, 핵 포기 사례의 공통점은 '상호신뢰' 보다는 핵 포기 당사국이 얻고자 하는 안보와 경제지원을 통한 '보장'이 보다 중요했다는 점이다. 또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핵클럽 노력의 한계를 간과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협소한 목적의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여 수반되는 위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경한 대북전략의 투사와 더불어 주변국의 역할과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이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도의 '비핵화-평화체제' 프레임은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북한은 핵 지위국 입장에서 세계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핵외교정치에서 ‘핵군축’을 주요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일 등 국제사회 전반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포함된 완전한 한반도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평화협정-군축’ 프레임 對 한·미·일의 ‘비핵화-제재’ 프레임 對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프레임이 대립 및 혼재되는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시된 ‘대북제재-비핵화’·‘평화협정-비핵화’·‘군축-평화협정’ 프레임 각축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독자적 프레임을 고안 및 적극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국은 당분간 강력한 ‘대북제재-비핵화’ 프레임을 고수하면서도 향후 정세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제재-비핵화-평화체제’ 프레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아직 비핵화의 수준과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며, 미국 또한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여백을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중 간 전략적 타협을 통한 한국소외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고,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우리의 주도권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불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독자적인 비핵화 추진동력을 회복하려는 시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국제적 수준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I
II
III
IV
V
VI
VII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과 같은 한국의 독자적 제재 완화 조치는 자칫 대북제재의 동력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재-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은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재는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물론 대화는 ‘한국의 이해가 반영’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반드시 담보’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곧 북한 정권의 종식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즉 제재의 징벌적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평화체제 구축 주장이 흡수통일 책략으로 의심받게 되면 북한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제재 해제가 비핵화 대화 및 평화체제 논의 시작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행동을 강제하고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화의 내용과 진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북한의 행동과 연동해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sup>391)</sup> 주한미군 철수 문제 또한 평화체제 논의 시작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의 결과여서도 안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구조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평화체제 이후 주한미군 철수는 오히려 동북아 전략균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반도 통일 이후 통일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엄격히 고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sup>391)</sup> 정성윤, “대북제재의 평가 및 전략적고려사항”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0, 2016.4.21.), p. 3.

# 참고문헌

## 1. 단행본

- Andrew Futter 저·고봉준 역. 『핵무기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6.
- 김동수 외. 『2013년 북한 핵 프로그램 및 능력평가』. KINU 정책연구 시리즈 13-11.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김종대. 『안보전쟁』.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6.
-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4.
- 데이비드 웰치 저·이종현 역. 『프로파간다 파워』. 서울: 공존, 2015.
- 바실리 미헤예브, 비탈리 쉬비드코.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 박휘락. 『소련 군사전략 연구』. 서울: 법문사, 1987.
- 신종호 외. 『전환기 남북관계 도전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근간.
- 심기보. 『원자력의 유혹: 핵무기, 원자력발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서울: 한솜미디어, 2015.
- 유르겐 브라우어, 후버트 판 투일 저·채인택 역. 『성, 전쟁 그리고 핵폭탄』. 서울: 황소자리, 2013.
- 윤영관·전재성·김상배 편.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 서울: 늘품플러스, 2015.
- 이영훈. 『북한의 군부 -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서울:

- 살림, 2012.
- 전성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12-01.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정규수. 『ICBM, 그리고 한반도』. 서울: 지성사, 2012.
- 정영태 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정육식. 『핵의 세계사』. 서울: Archive, 2012.
- 조르조 아감벤 저·김향 역.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 최성빈·유재문·곽시우. 『북한 군수산업 개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함형필. 『NUCLEAR DILEMMA: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합동작전본부 군정위연락단 편.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8집』.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 현인택. 『한국의 방위비』. 서울: 한울, 1991.
- Bermudez, Joseph S. Jr.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 I. B. Tauris, 2001.
- Blainey, Geoffrey. *The Causes of War, Third ed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Cha, Victor.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 Collins, 2012.
- Diehl, Paul F. and Gary Goertz.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Drew, Dennis M. and Donald M. Snow. *Making Twenty-First-*

- Century Strategy: An Introduction to Modern National Security Processes and Problems.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2006.
- Dziak, John J. *Soviet Perceptions of Military Doctrine and Military Power: The Interaction of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rane Russak & Co, 1981.
- Freedman, Lawrence.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Gavin, Francis J. *Nuclear Statecraft: History and Strategy in America's Atomic Ag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 Goldstein, Avery.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 Hughes, Thomas P., *American Genesis: A Century of Invention and Technological Enthusiasm, 1870-1970, New York: Viking Penguin, 1989.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Huth, Paul K.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8.
- Hymans, Jacques E.C. *Achieving Nuclear Ambitions: Scientists, Politicians, and Prolife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Jervis, Robert.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Kroenig, Matthew. *Approaching Critical Mass: Asia's Multipolar Nuclear Posture*. NBR Special Report. no. 58. Seattle, W.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6.
- \_\_\_\_\_. *Exporting the Bomb: Technology Transfer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 Larsen, Jaffrey A. and Kerry M. Kartchner, eds.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 Lee, Chung Min. *Fault Lines in a Rising Asi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 Morgan, Patrick M. *Deterrence 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Alfred A. Knopf, 1973.
- Mueller, John. *Atomic Obsession: Nuclear Alarmism from Hiroshima to Al Qaed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Narang, Neil, Erik Gartzke and Matthew Kroening, ed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Nuclear Posture: Causes*

- and consequences f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Organski, A. F. K.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Paul, T.V.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Posen, Barry R. *Inadvertent Escalat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Roberts, Brad. eds. *The Case for U.S. Nuclear Weapons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 Sago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3.
-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6.
- Seaton, Albert and Joan Seaton. *The Soviet Army: 1918 to the Present*. New York: Nal Books, 1986.
- Shambaugh, David. *Modernizing China's Military: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erkeley: Berkeley of California Press, 2004.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Sridharan, E. *The India-Pakistan Nuclear Relationshi*. New Delhi: Routledge, 200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Waltz, Kenneth N. and Scott D. Saga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Thir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3.

## 2. 논문

고봉준. “핵전략.” 군사학연구회 편. 『군사사상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구갑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12권 2호, 2004.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 2015.

김병연. “북한 경제의 변화와 대북제재의 효과.” 『도전받는 동북아 안보와 한중일 협력』. 화정평화재단 주최 한중일 연례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16.9.2.

김병욱. “선군경제운영과 민수산업 군수화.”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6월호.

김보미. “핵확산 논쟁을 통해 본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한반도 위기구조와 통일·평화 담론의 재구성』.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6.

김성철.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제4호, 2014.

김영일·형혁규.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534호, 2012.9.26.

김육성. “국력의 비대칭성 완화 노력이 숙적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사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 2010.

- 김재천.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 김정익.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개념의 차이.” 『KIDA 주간국방논단』. 제1528호, 2014.8.18.
- 김진무 외. “2016년 상반기 정세 평가와 전망: 북한.”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2016.7.18.
- 김흥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 노명화 외. “디지털 전장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문인력 육성 방안.”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3.
- 문장렬.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14 KINSA 세미나, 2014.2.7.
- \_\_\_\_\_.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분석 평가.” 한국군사학회 발표, 2016.6.24.
- 박영준.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핵정책 전개과정 비교 - 북한 핵전력 및 핵전략 평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 발표집』. 2015.
-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4년 여름(통권 제104호).
- \_\_\_\_\_.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능력이 갖는 안보적 도전과 한국의 포괄적 대응전략.” 『KIDA 주간국방논단』. 제1630호, 2016.8.1.
- 박창희. “한국의 ‘신군사전략’ 개념: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2011.
- 박휘락.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전략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9호), 2016.7.
- 엄상운. “북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상관성.” 송대성 외.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4.

- 연현식. “소련 핵 전략과 군사 독트린의 변천 - 스탈린시대부터 엘친의 CIS 까지.” 『국방논집』. 제17호 1992년 봄.
- 유지용.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 추세와 미중 경쟁.” 『KIDA 주간 국방논단』. 제1551호, 2015.1.26.
- 이근욱.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예측.”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 이동선. “동맹국 제지의 이론과 실제: 북중동맹 사례.” 『국제관계연구』. 제19권 1호, 2014.
- \_\_\_\_\_. “한중관계와 미국: 통념과 현실.” 『성균 차이나 브리프』. 제4권 1호, 2016.
- 이상민. “북한 5차 핵실험, 멀어져 가는 비핵화의 꿈.” 『세종논평』. 322호, 2016.
- 이상현. “미국의 2010 <핵태세검토(NPR)>와 핵안보정상회의.” 『EAI 논평』. 제6호, 2010.5.10.
- 이정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 변화.” 『현대 북한연구』. 제17권 2호, 2014.
- 이정호. “미국 군산복합체: 탈냉전적 변화와 냉전적 관성의 유지.” 『대한정치 학회보』. 제9집 9호, 2001.
- 이중구. “북한 핵정책 동향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1998.1-2007.8).” 『통일연구』. 제15권 제1호, 2011.
- 이형숙.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가능성 연구: 중국,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외교안보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6.
- 전봉근. “북한 핵교리의 특징평가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26. 2016.7.27.
- \_\_\_\_\_. “제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6-05, 2016.2.19.

- 전호현.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에 대한 역사적 조명.” 『국방정책연구』. 제24권 2호, 2008.
- 정상혁. “북한 핵 선전선동전략 연구: 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2015년 겨울호.
- 조순구. “핵무기 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 2005.
- 진행남.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JPI 정책포럼: 북핵과 한반도 평화』. No. 2013-6/7/8.
- 최용환. “북한 핵개발 전략과 그 지정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no 2, 2004.
- 필 윌리엄스. “전략의 개념”, 최병갑 외 공편. 『현대 군사전략대강II: 전략의 재원리』. 서울: 을지서적, 1988.
- 하경석·정성윤. “핵확산 논쟁과 북핵문제: 다차원적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1호, 2015.
- 한인택.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JPI 정책포럼』. 117권.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3.
-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사실과 평가방법.”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 1997.
- \_\_\_\_\_. “북한 군사력 및 군사위협 평가 재론.” 『현대북한연구』. 제7권 3호, 2005.
- 합동작전본부 군정위연락단 편.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8집』.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 홍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 북한 국내 차원.”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동국대 무기체계와 한반도 분단 학술회의 발표집. 2016.1.26.
- \_\_\_\_\_.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

주: 한올아카데미, 2015.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 핵무기 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황지환.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한반도 리더십 변수의 재검토.” 『국제관계연구』. 제18권 1호, 2013.

Albright, David. and Christina Walrond,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ISIS), August 16, 2012.

Avey, Paul C. “Who’s Afraid of the Bomb? The Role of Nuclear Non-Use Norms in Confrontations between Nuclear and Non-Nuclear Opponents.” *Security Studies*. vol. 24, no. 4. 2015.

Beardsley, Kyle and Victor Asal. “Winning with the Bomb.”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Bell, Mark S. and Nicholas L. Miller. “Questioning the Effect of Nuclear Weapons on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1. 2015.

Bennett, Scott D. “Security, Bargaining, and the End of Interstate Rival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 2. 1996.

Bernstein, Paul I. “The Emerging Nuclear Landscape.” Ja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chner, eds.,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Bleek, Philipp C. “Does Proliferation Beget Proliferation? Why

- Nuclear Dominos Rarely Fall.” Ph.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2010.
- Breen, Michael and Joshua A. Geltzer. “Asymmetric Strategies as Strategies of the Strong.” *Parameters*. Vol. 41, Issue 1. 2011.
- Bueno de Mesquita, Bruce and William H. Riker. “An Assessment of the Merits of Selective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6, no. 2. 1982.
- Cha, Victor D.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 no. 2. 2002.
- Chestnut, Sheena.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 Glaser, Charles L. and Steve Fetter.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the Future of U.S. Nuclear Weapons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2001.
- Demus, Alyssa. “Conventional versus Nuclear: Assessing Comparative Deterrent Utilities.”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ugust 25, 2012.
- Fearon, James D.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2. 1994.
- Fuhrmann, Matthew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2014.

- Gartzke, Erik and Dong-Joon Jo.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 Geller, Daniel S. "Power Differentials and War in Rival Dyad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no. 2. 1993.
- Gelpi, Christopher F. and Michael Griesdorf. "Winners or Losers? Democracies in International Crisis, 1918-9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2001.
- Gerson, Michael S. "Conventional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Parameters*. vol. 39, no. 3. 2009.
- Harrison, Mark. "Soviet industry and the Red Army under stalin: A military-industrial complex?," *Cahiers du monde russe*, 44/2-3, 2003.
- Hecker, Siegfried S.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 \_\_\_\_\_. "North Korea reactor restart sets back denuclearization,"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7 October 2013.
- Huth, Paul K. "The Extended Deterrent Value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2. 1990.
- Huth, Paul K. and Bruce Russett. "General Deterrence between Enduring Rivals: Testing Three Competing Mode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1. 1993.
- \_\_\_\_\_. "What Makes Deterrence

- Work? Cases from 1900 to 1980.”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1978.
- Kim, Tongfi. “Asymmetric Strategic Problems in Nuclear Nonprolifer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4, no. 2. 2014.
- Kim, Woosang and James D. Morrow. “When Do Power Shifts Lead to W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4. 1992.
- Klein, James P., Gary Goertz and Paul F. Diehl, “The New Rivalry Dataset: Procedures and Pattern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3, no. 3. 2006.
- Lee, Dong Sun. “Nuclear Policies and Security.” In *The Oxfor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eace*. edited by Nigel You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Lee, Jin Myung. “Is Liberal Peace Likely in Nuclear Asymmetr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 no. 1. 2015.
- Lieber, Keir A. and Daryl G. Press. “Why States Won’t Give Nuclear Weapons to Terroris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1. 2013.
- Liff, Adam P.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2014.
- Lipset, Seymour and Stein Rokkan. “Cleavage Structure, Party

-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Lipset and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Mearsheimer, John J.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3. 1984.
- Muniesa, Fabian, Yuval Millo and Michel Callon, “An introduction to market devices.” Millo and Fabian Muniesa(eds.). *Market Devices*. Oxford: Blackwell, 2007.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ies of Emerging Nuclear Powers: North Korea and Ira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1. 2015.
- Nikitin, Mary Be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4256), April 3, 2013.
- Oneal, John R. and Bruce D. Russett. “The Classic Liberals Were Right: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1950-198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2. 1997.
- Pape, Robert A. “Coercive Air Power in the Vietnam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2. 1990.
- Park, John and Dong Sun Lee. “North Korea: Existential Deterrence and Diplomatic Leverage.” In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edited by Muthiah Alagapp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 Paul, T.V. “Complex Deterrence: An Introduction,” T.V. Paul, Patrick Morgan, and James Wirtz, eds., *Complex*

-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Perry, William J. "Desert Storm and Deterrence." *Foreign Affairs*. vol. 70, no. 4. 1991.
- Petersen, Walter J. "Deterrence and Compellence: A Critical Assessment of Conventional Wisdo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0, no. 3. 1986.
- Phil Williams. "Nuclear Deterrence", John Baylis et al.,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Concepts I*. New York: Holmes & Meier, 1987.
- Rauchhaus, Robert.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 Reed, William et al. "War, Power, and Bargaining."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4. 2008.
- Sagan, Scott D. "The Perils of Proliferation: Organization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4. 1994.
- Sechser, Todd S. and Matthew Fuhrmann. "Crisis Bargaining and Nuclear Blackmai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7. 2013.
- Thompson, William R. "Explaining Rivalry Termination in Contemporary Eastern Eurasia with Evolutionary Expectancy Theory." *Montreal: REGIS Working Paper*. no. 17. 2005.
- Vasquez, John A. "Distinguishing Rivals that go to War From Those That Do Not: A Quantitative Comparative Case

- Study of the Two Paths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 4. 1996.
- Waltz, Kenneth N.,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4, no. 3. 1990.
- Wit, Joel S. and Sun Young Ahn.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US-Korea Institute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February 2015.

### 3. 기타

- 『경향신문』.
- 『국민일보』.
- 『로동신문』.
- 『동아일보』.
- 『문화일보』.
- 『세계일보』.
- 『시사in』.
- 『월간중앙』.
- 『조선일보』.
- 『조선중앙통신』.
- 『중앙시사매거진』.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BBC News.

The Guardian.

The Indian Express.

문장렬.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분석 평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발표문, 2016.7.8.

안진수. “북한 핵기술의 발전과 수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발표문, 2016.7.5.

이상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발전과 수준.”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2016.7.5.

전봉근. “김정은 정권의 핵운용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안.” KINU 북핵 고도화 자문회의, 2016.7.13.

전성훈.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3-11, 2013.4.8.

정성윤. “대북제재의 평가 및 전략적 고려사항”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0, 2016.4.21.

\_\_\_\_\_.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02, 2016.1.11.

\_\_\_\_\_. “북한 5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23, 2016.9.13.

\_\_\_\_\_.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4): 국제관계와 안보.”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5, 2016.5.18.

조한범. “북핵문제의 과도적 합의에 대한 우려.”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7, 2016.5.24.

통일연구원.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6-04, 2016.

\_\_\_\_\_.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방안』. KINU 통일나침반 16-05, 2016.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과제.”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6-05』. 2016.5.10.
- 현승수. “북한 4차 핵실험과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09, 2016.4.19.
- 홍민. “김정은 정권 핵무기 고도화의 정치경제.”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5-25, 2015.9.21.
- \_\_\_\_\_.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5): 전략적 노선과 정책.”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6-16, 2016.5.19.
-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2015.5.20.
-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 2016.5.
- 북한. “조선반도와 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2010.4.21.
- 황병서.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보고, 2014.7.28.
-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핵태세 보고서)』. April 4, 2010.
- Lieber, Keir and Daryl Press. 국방연구원 발표. 2016.6.7.
- 『뉴시스』. <www.newsis.com>.
- 『데일리 NK』. <www.dailynk.com>.
- 『연합뉴스』. 『연합뉴스TV』. <www.yonhapnews.co.kr>.
- 『이데일리』. <www.edaily.co.kr>.
- 『자유아시아방송』. <www.rfa.org>.
-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 38north. <http://38north.org>.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http://isis-online.org>.
- 조선닷컴. <www.chosun.com>.

통일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KONAS』. <<https://konas.net>>.

『SBS뉴스』. <<http://news.sbs.co.kr>>.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rol.org>>.

Office of the U.S.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http://www.psi-online.info>>.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http://www.state.gov)>.



# 부 록

## 부록 1 북한의 주요 핵독트린 내용 변화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2002. 3. 9		부시 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 - 핵선제 사용 가능대상 7개국 (북한포함)	
2003. 1. 10	정부 성명	NPT 탈퇴선언 -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으며...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	· 핵무기 개발 의사 없음. · 핵 평화적 이용
2003. 6. 18	외무성 대변인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	· 자위적 핵억제력
2003. 10. 2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 방향에서 용도 변경”	· 자위적 핵억제력
2004. 7. 24	외무성 대변인	“리비아식 선택포기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 선택 핵포기 불가
2004. 9. 27	최수현 외무성 부상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해 무기화”	· 자위적 핵억제력
2005. 2. 10	외무성 성명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	· 핵무기 보유 선언
2005. 3. 31	외무성 성명	“이미 핵보유국이 된 이상 6자회담은 이제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	· 비핵화 협상→ 핵군축협상
2006. 10. 9	조선중앙통신 보도	1차 지하 핵실험	
2006. 12. 1	김계관 외무성 부상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 일방적인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	· 비핵화 원칙 확인
2008. 12. 9		<i>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북 핵 보유국 표기</i>	
2009. 1. 16	외무성 대변인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 자위적 핵억지력 · 핵무기 영구 보유 의사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2009. 4. 24		IAEA 사무총장, 북한 핵보유 인정	
2009. 5. 25	조선중앙통신 보도	2차 지하 핵실험 · 자위적 핵억제력 백방 강화 ·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사회주의 수호	· 자위적 핵억제력
2009. 11. 20		미 핵과학자회보, 북한 핵보유국 인정	
2010. 4. 6		오바마 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 소극적 안전보장에서 북한 제외	
2010. 4. 21	외무성 비망록	(1)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건은 평화협정 (2) 한반도 및 세계 비핵화 때까지 핵억제력 보유 (3) 핵보유국과 음모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금지 (4) 국제적 비확산 및 비핵화에 타 핵보유국과 동등한 지위 참여	· 핵무기 연구 보유 · 비핵국가 핵무기 사용금지 · 국제 비확산·비핵화 참여
2013. 2. 12	조선중앙통신 보도	3차 지하 핵실험 · 미국 적대행위에 대한 안전과 자주권 수호 조치 · 소형화·경량화 원자탄 · 다종화된 핵억제력	
2013. 3. 29	조선중앙통신	“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아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2013. 4. 1	최고인민회의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 (1) 핵무기는 미국 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수단 (2) 핵무력은 세계 비핵화 실현 때까지 침략과 공격 억제, 섬멸적 보복타격 복무 (3)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 질량	· 자위적 핵억제력 · 선제공격 억제력 · 보복공격력 · 적대적 핵보유국 침략·공격 격퇴 및 보복타격용 사용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p>적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 강구</p> <p>(4) 핵무기는 적대적 핵보유국의 침략 및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p> <p>(5) 적대국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침략 및 공격행위 가담하지 않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및 위협 안함.</p> <p>(6)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 안전성 보장 규정 엄격히 준수</p> <p>(7) 핵무기 기술, 핵물질 비법적 누출하지 않을 것</p> <p>(8)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p> <p>(9) 핵군비경쟁 반대, 핵군축 국제적 노력 적극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국가 불사용, 불위협</li> <li>· 핵확산 방지 노력</li> <li>· 핵군축 적극 지지</li> </ul>
2013. 4. 4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첨단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2013. 10. 23	외무성 대변인	<p>“조선반도 비핵화는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p> <p>“외부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그에 대처할 핵억제력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정책목표</li> <li>· 핵억제력 강화</li> </ul>
2014. 3. 5	전략군 대변인 담화	<p>“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에게 걸어오는 무모한 도발이 도수를 넘게 되면 우리 방어형 로켓들의 훈련발사가 순식간에 가장 위력한 공격형 로켓발사의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p> <p>“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자위적 보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복력</li> <li>· 자위적 핵억제력</li> </ul>
2014. 3. 14	국방위원회 성명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타격 대상 선정</li> <li>· 비핵화 정책</li> </ul>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우리의 핵억제력은...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	· 노력 · 핵협상 불가
2014. 3. 17	노동신문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	
2014. 6. 16	노동신문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 핵무기 영구 보유
2014. 7. 28	항병서 총정치국장	“만약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핵 타격 수단을 가지고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한다면 우리 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 미제의 군사기지 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	· 핵 선제공격 시사
2015. 5. 9	조선중앙통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핵무기 다중화
2016. 1. 6	정부 성명	4차 지하 핵실험 -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	· 핵무기 선제 불사용 · 핵 개발 중단 및 핵포기 의사 없음. · 핵억제력 강화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p>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li> </ul>	
2016. 3. 11	조선중앙통신	<p>김정은, 전략군 탄도미사일(스커드) 발사 훈련 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에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핵무기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li> <li>- “우리 조국의 일목일초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핵수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타격수단들에 즉시 공격명령을 내릴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다종화</li> <li>· 보복타격</li> </ul>
2016. 5. 7		<p>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국주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 강화</li> <li>·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핵억제력</li> <li>·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li> <li>· 핵전파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li> <li>·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영구 보유</li> <li>· 자위적 핵억제력</li> </ul>
2016. 6. 23	조선중앙통신	<p>김정은, 중거리미사일(화성-10호) 시험발사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핵공격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하여야 한다”</li> <li>-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령도와 유일적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핵공격 능력 확대강화</li> <li>· 핵무기 당 직할관리체계</li> </ul>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2016. 7. 20	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화성포병부대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지도</li> <li>-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정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li> </ul>	· 선제핵공격 모의 훈련
2016. 8. 22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우리 식의 핵선제타격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과 전쟁의 아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공화국남반부 해방의 승전포성을 울릴 역사적 기회만을 고대하고 있다”	· 선제핵공격 시사
2016. 8. 25	노동신문	<p>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증시험 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고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개발에 총력을 집중...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데 대하여 지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실전 배치</li> <li>· 운반수단 다중화</li> </ul>
2016. 9. 6	조선중앙통신	<p>김정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 로켓발사 훈련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 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li> </ul>	· 선제핵공격 시사
2016. 9. 9	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p>5차 지하 핵실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li> <li>· 소형화·경량화·다중화</li> <li>· 핵무기 병기화 높은 수준 확고히</li> <li>·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li> <li>·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생존권·평화 수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양산체계</li> <li>· 핵무기 실전화</li> <li>· 자위적 핵억제력</li> <li>· 핵무기 증강 지속</li> </ul>

연월일	담화주체	주요 내용	핵독트린
		·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 지속	
2016. 9. 11	외무성 대변인 담화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	

**부록 2**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지

년도	월	발사체	수량	사거리	장소
1993	5/29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1호 발사	1	1,300	동해-동해
1996	4/20	북미 제1차 미사일 회담(베를린)			
1997	6/11	북미 제2차 미사일 회담(뉴욕)			
1998	8/31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1	1,800~ 2,500	
	10/1	북미 제3차 미사일 회담(뉴욕)			
1999	3/29	북미 제4차 미사일 회담(평양)			
	9/24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			
2000	6/15	남북정상회담			
	7/10	북미 제5차 미사일 회담(쿠알라룸푸르)			
	7/19	북러 정상회담			
	7/27	북미 외무장관 회담			
	10/12	북미 공동 커뮤니케			
	10/23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11/1	북미 제6차 미사일 회담(쿠알라룸푸르)			
2001	1/21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2/21	부시, 대북강경책 핵·미사일 합의 파기 경고			
	9/11	9.11 테러 발생			
2002	1/29	부시, 악의 축 발언			
	3/9	미 NPR 핵선제 사용 가능 대상국 북한 포함			
	5/21	미 국무부, 북 테러 지원국 지정			
	6/29	서해교전 발발			
	11/13	대북 중유지원 중단			
	12/12	북 핵 활동 동결 해제 선언			
2003	1/10	NPT 탈퇴 선언 / 미사일 발사 재개 선언			
	2/25	노무현 대통령 취임			

년도	월	발사체	수량	사거리	장소
	2/25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	100	동해-동해
	3/10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	100	동해-동해
	3/20	이라크전 발발			
	4	실크웜 미사일 시험발사	1	60	서해-육지
	10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1	100	동해-동해
2005	2/10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5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KN-02	1		동해-동해
2006	3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 KN-02	2		동해-동해
	7/5	대포동 2호(1기), 노동 및 스킨드급(6기)	7		
	7/15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채택			
	10/9	제1차 핵실험			함북 풍계
	10/14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채택			
2007	2/13	2.13합의(9.19공동성명 이행 위한 초기조치)			
	5/25	단거리 미사일	1	100	동해-동해
	6/7	단거리 미사일	2	100	서해-서해
	6/19	단거리 미사일	1	100	동해-동해
	10/3	10.3합의(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			
	10/2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08	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3/26	김태영 합참의장 '핵보관 장소 타격' 발언			
	3/28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수발		서해-서해
	5/31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		서해-서해
	6/27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발			
	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년도	월	발사체	수량	사거리	장소
	8/11	미국 북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8/14	북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10/8	단거리 미사일	2		서해-서해
	10/11	미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10/21	핵 불능화 작업 재개			
	12/9	미 국방부 합동군사령부 북 핵보유국 표기			
	12/12	미 대북중유지원 중단			
2009	1/20	오마바 대통령 취임			
	4/5	장거리 로켓(광명성 2호) 발사	1		
	4/20	IAEA 사무총장, 북한 핵무기 보유 사실인정			
	4/25	북 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4/29	북 외무성, 핵시험, ICBM 시험, 우라늄농축			
	5/25	제2차 핵실험 (함북 길주군 풍계리)			
	5/25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함북 무수단리)	2		동해-동해
	5/26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함북 신상리)	3		동해-동해
	5/29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함북 무수단리)	1		동해-동해
	6/12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874호 채택			
	6/13	북 외무성 성명,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우라늄 농축 착수, 미국 봉쇄 전쟁행위 간주			
	7/2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발사(함북 신상리)	4		동해-동해
	7/4	스커드 5발, 노동 2발(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7	단거리	동해-동해
	10/12	단거리 미사일 (KN-02)	5		동해-동해
	11/10	대청해전			
2010	3/26	천안함 사건			
	4/6	오바마 정부 NPR 발행			

년도	월	발사체	수량	사거리	장소
	5/24	5.24 조치 실행			
	11/23	연평도 포격 사건			
2011	12/17	김정일 사망			
2012	2/29	2.29 합의			
	4/13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 실패			평북 동창
	12/12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정상궤도 진입			평북 동창
2013	1/23	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 결의안 통과(2087)			
	2/10	KN 계열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수발		동해-동해
	2/12	제3차 핵실험			
	2/25	박근혜 대통령 취임			
	3/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제2094호)			
	3/15	KN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3/31	당 중앙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4/2	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 조치			
	5/18	300mm 방사포	6		동해
	5/19	300mm 방사포	1		동해
	5/20	KN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6/26	300mm 방사포	4		동해
2014	2/21	300mm 방사포	4		동해
	2/27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3/3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3/4	300mm 방사포 4발, 240mm 방사포 3발	7		동해
	3/16	프로그 로켓 발사	25		동해
	3/23	프로그 로켓 발사	16		동해
	3/26	노동 계열 중거리 미사일	2	중거리	동해
	6/26	300mm 방사포	3		동해
	6/29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7/2	300mm 방사포	2		동해
	7/9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년도	월	발사체	수량	사거리	장소
	7/13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7/14	240mm, 122mm 방사포 및 해안포	100		동해
	7/26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1		동해
	7/30	300mm 방사포	4		동해
	8/14	300mm 방사포	5		동해
	9/1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1		동해
	9/6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3발		동해
2015	2/8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5		동해
	3/2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3/12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발사	7		동해
	4/2	KN 계열 미사일 발사	1		서해
	4/3	KN 계열 미사일 발사	4		서해
	4/7	KN 계열 미사일 발사	2		서해
	5/9	KN 계열 미사일 발사	3		동해
	6/14	KN 계열 미사일 발사	3		동해
2016	3/3	300mm 방사포 발사	6		동해
	3/10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2		동해
	3/18	노동 계열 중거리 미사일 발사	2	중거리	동해
	3/21	300mm 방사포 발사	5		동해
	3/29	원산서 300mm 방사포 추정 발사체	1		동해
	4/1	신형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발사	3		동해
	4/15	무수단계열 중거리 미사일 발사	1		동해
	4/23	SLBM 시험 발사			
	4/28	무수단계열 중거리 미사일 발사	2		동해
	5/31	무수단계열 중거리 미사일 발사	1		동해
	6/22	무수단계열 중거리 미사일 발사	2		동해
	7/9	SLBM 시험 발사			
	7/19	노동 미사일 2발, 스커드 미사일 1발 발사	3		동해
	8/3	노동 미사일 2발	2		동해
	8/24	SLBM 시험 발사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 통일정세분석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의화병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 연구보고서

### 2014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수,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	-------------------------	-------	---------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 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혜환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	----------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 논 총

---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 기 타

---

2014 북핵일지 1965~2014	조민, 김진하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